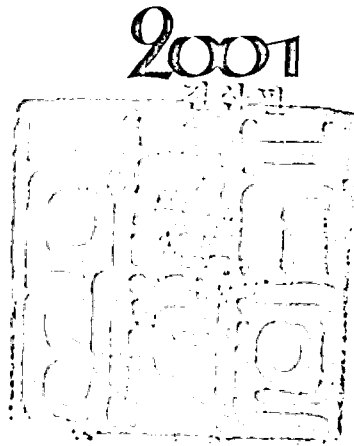


북한 이해



책을 내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활발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현되고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가속화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실천 의지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남과 북이 단절의 벽을 단숨에 뛰어넘어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 나갈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내려면 북한과 통일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 지혜와 따뜻한 동포애가 필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통일환경의 흐름과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통일에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통일교육원에서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자매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1. 2.

통일교육원장 최 병 보

차 례

I.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 양재성

제1절 북한이해의 관점	_____	3
제2절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	_____	7
제3절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_____	12
1. 북한변화의 의미	_____	12
2. 북한의 변화 가능성	_____	14

II. 김정일 지도체제와 권력구조 /

김용재

제1절 김정일 지도체제의 형성과 특징	_____	21
1. 김일성 후계체제의 구축과정	_____	21
2.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_____	24
3. 김정일시대의 권력 엘리트	_____	27
제2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_____	32
1. 주체사상의 등장과 변화과정	_____	32
2. 주체사상의 시대별 특징	_____	34
3.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과 한계	_____	36
제3절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_____	39
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_____	39
2. 정권기관	_____	43

III.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의 변화 / 양재성

제1절 북한의 대외환경변화의 외교동향	_____	63
제2절 북한의 외교정책방향	_____	67
제3절 북한의 외교실태	_____	72
1. 북한과 미국 관계	_____	72
2. 북한과 일본 관계	_____	75
3. 북한과 중국 관계	_____	78
4. 북한과 러시아 관계	_____	81
5. 북한과 서방 각국과의 관계	_____	84
제4절 대남관계의 변화	_____	86

IV.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 박갑수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_____	93
1. 북한군의 성격과 특징	_____	93
2. 군사전략	_____	95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_____	99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_____	99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_____	101
3. 군계급구조 및 당조직	_____	103
제3절 북한의 군사력	_____	106
1. 상비전력 및 장비	_____	106
2. 예비전력	_____	109
3. 전략무기 개발실태	_____	111

4. 최근 군사 동향	_____ 114
제4절 대외 군사관계	_____ 116

V.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 전망 / 권 영 경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건설 노선	_____ 121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_____ 121
2. 중공업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_____ 123
3. 군사·경제 병진노선	_____ 124
제2절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_____ 126
1. 거시경제현황	_____ 126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_____ 135
제3절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_____ 143
1. 대외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_____ 143
2.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전개 과정	_____ 145
3.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과제	_____ 151
제4절 북한의 경제회복전략과 북한경제의 전망	_____ 154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 김경웅 · 박갑수

제1절 북한의 교육	_____ 163
1.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	_____ 163
2. 교육제도	_____ 164
3. 교육행정체계	_____ 168
4. 교육내용	_____ 170
5. 교육방법	_____ 173

제2절 북한의 문화와 예술	176
1.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	176
2. 문화·예술 분야 활동실태	183
3. 문예단체 기구	191
제3절 교육과 문예의 새로운 흐름	194

VII.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김 석 향

제1절 북한주민의 가치관	201
1.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202
2. 집단주의 원칙	204
3. 전통적 생활문화와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혼재	205
4. 1990년대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206
제2절 일상화된 조직생활	208
1. 조선청년단 입당과 청년동맹 가맹	208
2. 노동당과 근로단체 조직	210
3. 또 하나의 조직생활: 예비 군사조직	212
4. 인민반의 가두조직	213
5. 조직생활과 평정서, 그리고 신원문건	214
제3절 배급제도와 의식주 생활	216
1. 배급제도의 운영원리와 현실	216
2. 식생활 실태	218
3. 의생활 실태	224
4. 주생활 실태	226
5.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230

제4절 직장생활과 여가문화	234
1. 직장배치	234
2. 급여체제와 연금제도	237
3. 직장인의 하루 일과	241
4. 휴가와 휴일제도	243
5. 여가생활과 여가문화	244
6.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246

I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양재성

제1절 | 북한 이해의 관점 (3)

제2절 |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 (7)

제3절 |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12)

KEY POINT

요점 →

-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이중적 존재이다
- 북한체제는 당과 국가체제 위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북한은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의 딜레마 속에서 경제를 희생시킬 내부자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제1절

북한 이해의 관점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또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한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를 파괴할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가 함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이며, 또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 속에는 '경계대상'과 '같은 동포'라는 이중성이 모두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며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이해하는 방법론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되어 왔다. 그 하나는 외재적 접근법이며 다른 하나는 내재적 접근법이다.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외부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진반적 현상을 분석하려 한다. 한편 내재적 접근법은 외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 인식의 틀로서, 북한이라는 대상을 분석할 때 북한의 특수한 현상을 고려하면서 북한 사회의 각종 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 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각종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 방법론이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이 각각 북한 문제 이해의 방법론으로서 기여한 바 크지만 두 가지 관점 모두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외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관점으로 기여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가 하면 내재적 접근법은 의도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긍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배제한 채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구함에 있어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 세계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식의 방법을 말한다.

북한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류발전의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분명히 예외적인 국가이지만 자체 체제생존이라는 논리 하에 특유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며 개방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현상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정보나 자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이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등 신문, 당이론잡지 『근로자』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집 등인데, 이들은 북한의 선진도구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체제대립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객관적 분석보다도 당위성·주관성·개인적 정서에 따라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가 정치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북한의 전반적인 모습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편견에 기초하여 감정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사회의 특성을 보여줄 비교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 포괄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체제의 구조와 기능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기초로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1장에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과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징 및 변화 가능성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김정일 지도체제의 형성과정,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그리고 북한을 움직이는 권력기관 등 북한의 정치 부문을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방향과 북한과 주변 4강과의 외교실태 및 대남관계의 변화상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및 조직과 제도를 설명한 후 북한의 군사력과 최근의 군사 동향을 언급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대외경제 개방의 실태 및 북한 경제의 회복전략과 전망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북한의 교육실태 및 문화예술 분야의 실태와 교육과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 등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가치관 북한주민의 조직생활, 의식주생활, 직장생활 등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2절

북한체제의 구조적 특성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는 나아가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우리와는 다른, 그들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특징을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데올로기와 권력구조의 차원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경우 우리는 그 특성을 주체사상과 수령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수령은 주체의 핵이 되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사실상 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령 중심의 체제논리는 1995년 당 창건 50주년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 로동계급의 당은 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 순결체로, 조직적 진일체로 되어야 한다.”¹⁾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규정된다.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견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를 의미한다.

북한사회에서의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²⁾

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진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pp. 43-45 ;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10.2), 『일간 북한동향』, 1995.10, pp.173-174. 그러나 2년 후 북한은 1997년 10월 10일 노동신문 기념사실을 통해 종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당이다”라고 지칭하던 것을 김정일의 당으로 호칭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김정일 논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 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10.17) 참조

그러나 북한의 수령은 현재까지 김일성 주석 개인에만 한정되어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시점에서도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어 '수령'이라는 호칭 자체를 김정일 위원장이 계승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³⁾ 그러나 수령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계승·수행하고 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북한의 당과 군과 장권의 유일 중심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 (腦髓)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립적 민족 경제노선을 표방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제도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⁴⁾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⁵⁾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3)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서도 간혹 수령이라는 호칭을 본인 바 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지속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김일성의 경우와 같이 '위대한 수령 ~ 위' 같은 용례로는 쓰여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일이 수령 호칭을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백과사전」 3권,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3, p.530.

5) 「경제사전」 2권,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0, p.118.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 경제체제' 라고도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란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 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북한은 국가계획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국가계획을 제멋대로 변경시키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아주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작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법적 요구에 맞게 조직 진행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인민경제계획을 어겨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본인의 고의적인 실수나 태만이 아니고 계획수행을 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하여서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실제로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탄광의 지배인이 생산된 석탄을 국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화력발전소에 보내지 않고 부득이하게 탄광노동자들의 식량과 탄광에 필요한 운반기계를 해결하는데 소비하여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더라도 탄광지배인은 본인이 부정축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탄광의 경영활동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국가계획을 어겼으므로 법적 및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

는 집단주의 원리와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

북한은 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헌법 제63조), 자기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켜 개인적 목표가치보다는 집단적 목표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거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의 개조사업을 하고 있다.

북한에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하나는 혈육들로 구성되는 보통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소위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족성원인 북한 사람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듯 어버이인 수령을 믿고, 사랑하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받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결합방식'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규범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끊임없는 정치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불만은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당·수령·대중이 평등하게 함께 하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간부와 하급간부 사이에 대우, 배급량과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로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3절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전망

1. 북한 변화의 의미

북한의 변화는 크게 북한 체제 자체의 변화와, 북한이 남한과 미국, 일본 등 외부 세계와 맺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호혜관계로 바꾸는 대외관계의 변화 등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북한이 우리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고, 북한의 변화 유도란 북한정권이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자체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체제개혁이나 개방은 북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며, 우리는 그들이 원하면 도와주고, 필요하면 협력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북한 지도부라는 상대가 있는 대북정책에서, 상대 체제의 변화를 운운한다면 그 자체가 대화하지 말자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에는 대외적 변화로서 개방과 평화공존의 자세와 대내적으로 개혁이라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둘은 분리되기도 하고 또 연결되어서 이해되기도 한다.

북한은 아직 정치분야에서는 기본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특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경제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어느 나라든지 북한과 경제합작을 하자고 하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신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폭넓은 합영, 합작의 조지를 강조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사망하기 직전의 '유혼교서'에서 북한의 산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방과 경제관계 확장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기업과 자본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왔다. 각 지방에는 장마당이라는 상설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장사꾼들이 거리를 환보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대남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 공사와 개성공단 추진, 각종 투자보장을 위한 경제적 합의 등은 북한의 변화가 보다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면에서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등 대결보다는 관계개선을 선택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 경제관련 조항들을 보다 실용주의적으로 바꾸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교조적이고 완고하기만 하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은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들어 북한은 눈에 띄게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해 들어 북한에는 변화의 열풍이 불고 있다. 변화의 지향점은 경제제건이며 내용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사고(新思考)'이다.

더욱이 김정일 총비서가 중국을 방문, 4일간이나 상하이(上海)를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발전상을 '천지개벽'이라고 극찬한 것은 그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그럭저럭' 먹고사는 단계에서 이제는 개혁·개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단숨에 국가경제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서의 변화 방향은 체제개혁보다는 경제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점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움직여 왔다.

2. 북한의 변화가능성

북한은 과연 개혁과 개방의 흐름을 타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대세에 합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지금의 북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혼선과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북한은 결국 변화의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회생시킬 내부 자원이 고갈된 북한으로서는 개혁과 개방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체제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체제 및 사회체제로서는 시장경제체제로 단일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2001년 들어 김정일 위원장의 신사고나 상하이 방문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외환경적 측면에서 북한은 구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외교적·정치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즉 남한이나 서방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은 탈냉전과 개방화의 주변환경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를 억제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결속을 위해 군이 중심이 되어 주민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 해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하는 것은 물론 개인주의와 외래사조를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개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북한과 같은 통제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사고를 주장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변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향후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1세기를 맞아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 건설'을 주창하고, 1월 4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어록을 소개하면서 당 간부들에게 신사고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1월 제2차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앞으로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아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주방자오(朱邦造) 대변인은 2001년 1월 20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상하이의 눈부신 발전 모습을 보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선택이 옳았다고 평가했다”고 밝히는 등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많은 감명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금년초 ‘신사고’를 주창한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와 최근 북한의 보도 매체들이 “최단 시간 내에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여 21세기 세계경제 강국대열에 들어서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외자유치와 개방을 통한 경제 재건으로 방향을 정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연구』, 1999.
- 김경오,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2000.
- 김구섭, 『향후 북한의 변화전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0.11.
-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방완주, 『조선개관』, 백과사전출판사, 1988.
- 백학순 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9.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진』, 1999.
- 북한연구학회, 『최근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 2000년도 동계 학술
회의 자료 2000.12. 2
- 세종연구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 9
- 양영식 외,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대한매일신보사, 1999.
- 연합뉴스, 『2000년 북한연감』, 1999.
- , 『2001년 북한연감』, 2000.
- 정경환,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연구』, 신지사원, 1999.
- 통일부, 『2001년도 통일교육지침서』, 2000.12.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 , 『북한개요』, 1999.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 1999-2000』, 1999.
- 한용원, 『북한학』, 오름사, 1998.

Ⅱ

김정일 지도체제와 권력구조

김 용 재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 김정일 지도체제의 형성과 특징 (21)

제2절 |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32)

제3절 |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39)

KEY POINT

요점 →

- 김일성 주석 사후 과도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국가최고지도자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가 시작되었다.
- 김정일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총비서, 최고사령관으로서 당·정·군을 총괄하고 있는 유일영도체제로서, 군사우선주의와 김정일 측근세력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 권력엘리트 내부의 세대교체와 군부인사의 의전서열 상승 등의 변화로 보아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후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함께 통치권을 강화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금년중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 본격적인 체제정비와 부분적인 개방·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1절

김정일 지도체제의 형성과 특징

1. 김일성 후계체제의 구축과정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영·불·소 4대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회담(1945.7.17~8.2)을 갖고 전후 유럽문제의 해결과 소련군의 대일 참전에 따르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포츠담회담 후 6일째인 1945년 8월 8일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8월 9일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지역 점령군 정치사령관인 로마넨코 소장은 1945년 10월 8일 북한 5개도에 설치되었던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하였으며,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에는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0월 28일 '5도행정국'이 발족되었는데, 5도행정국은 소련군정 하에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소련 점령군 당국은 김일성을 통치자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1946년 11월에 북한 전역에 걸쳐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각급 인민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최고입법기관으로 '북조선인민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1947년 2월 21일 북조선인민회의를 통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¹⁾ 이어 1948년 2월 8일에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194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9. 8)한 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내각을 승인함으로써 소련의 위성국(衛星國)이 한반도 북쪽에 생겨나게 되었다. 1949년 6월 30일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 '조선로동당'이 공식적으로 창당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김일성 수상은 소련의 비호 하에 테리와 통일전선전술 등 이종전략을 구사하며 정적(政敵)들을 제거해 나갔다. 1967년 5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정하여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 당시부터 김일성은 영도와 사상의 유일성을 확보하면서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유일체제는 1972년 12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²⁾

1970년대 들어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 주석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당 비서처와 내각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1966년 24세의 나이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1969년 27세에는 당 조

1) 북한은 민주신기에 의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임시'를 삭제하였으며,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북한의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서 그 지도하에 북조선 인민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948년 헌법에서 주권의 대표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라고 규정되었던데 반해,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수반의 기능과 정치권력의 실질적인 행사를 결합시켜 김일성의 유일영도체제가 제도화 되었다.

직지도부 부부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다.³⁾ 또한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장이던 1973년부터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데 이어,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었으며, 1974년 2월 당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 주석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김정일 비서는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군 관련 고위 직책을 갖게 됨과 동시에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제6차 당 대회 이후 김정일은 주요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군 책임자이자 후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1980년대 속도창조운동',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전당의 주체사상화', '준법기풍 양양',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1984) 등을 주도하였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1986), '우리식 사회주의'(1991) 등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⁴⁾

김정일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식적 군사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0일 '원수' 칭호를 수여 받은 이후,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당·정·군 등 주요분야에 걸쳐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3) 『북한대사건』 북한연구소, 1999, p.282, 『북한인명사전』, 대한매일신보사, 2000, p.385.

4)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읽기』, 지식공작소, 2000, pp.42-56.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미이라로 하여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하는 한편, 김일성 주석 영생탑을 건설하고 주체 연호와 태양절을 제정(1997. 7)하였다.

김일성 주석 사후 과도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 위원장은 1997년 10월 8일 「당중앙위원회 ·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데 이어,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헌법에서 실질적인 국가지도자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2.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

김정일 지도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국가최고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영도체제라는 점이다. 즉,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 당 · 군을 장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란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 전군 · 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규정하였다.⁵⁾ 이에 따라 북한

5)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통치원리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김일성 주석의 혁명적 후계자인 김정일의 유일영도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군사우선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1996년에는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과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등 군 관련 기념일이 공휴일이자 국가적 명절로 지정되었다. 또한 군사지도자들의 권력핵심에의 진출도 두드러진 바, 1998년 7월 26일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군부인물이 107명으로 제9기의 62명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또한 군부 핵심 실세이자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당 서열이 2~15위까지 부상하였다. 특히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이 되었다. 이처럼 군사를 우선시하는 것을 가리켜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로 부르며 찬양하고 있다.⁶⁾

선군정치는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군사우선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⁷⁾

6) 「로동신문」, 1998. 8.22 및 1998.10.10 등 참조

7) 「로동신문」 (1998.10.19)에서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선군정치”라고 한다.

셋째, 김정일체제 출범을 계기로 김정일 위원장 측근들이 주요 권력기구의 핵심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원로계층이라 할 수 있는 김영주·박성철 등 국가 부주석들이 명예적 지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추대된 반면, 내각의 33개 부서중 21개 부서의장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또한 주요 권력기구의 핵심 중에서도 노동당 정치국이 약화된 대신에 1980년대부터 김정일이 직접 장악하고 있는 비서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실질적인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 총비서와 군 총사령관의 직책을 가지고 당과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요컨대 김정일 지도체제하의 북한에서는 통치권자인 김정일 위원장을 정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집행부서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과거 상층조직들이 인적 중복을 통해 상호 연계되던 것과는 달리 김정일 시대에는 이들간 횡적인 연계가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⁸⁾

넷째, 김정일 위원장은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 시대와는 다르게 자기 나름의 통치 유형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형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 류길재, 「정치체제 : 제도와 정책의 변화」, 『김정일 시대의 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3, p.71

〈표 2-1〉 김정일 통치 표현 용어

용어	내용
인덱정치	1993년 1월 28일 처음 제시.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치, 대표적 사례는 유공자 환갑상 차려주기, 쌍둥이 축하, 산간오지 환자 특별수송 등임.
광폭정치	1993년 1월 28일 처음 제시, 대담하고 통 큰 정치를 상징하는 용어, 대표적 사례는 주체사상탑, 유경호텔 건설 등임.
신군정치	1998년 강성대국 기치 등장후 군을 정치의 중심에 두는 정치, 군의 중시를 새삼 강조, 대표적 사례는 강성대국 기치 등임.
음악정치	2000년 2월 등장. 시련과 난관을 노래로 이겨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통치행위를 지칭, 대표적 사례는 기업소 등 생산현장의 공인한동임.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1) 권력엘리트의 충원방식과 인적 구성

북한사회에서 사회적 성공과 신분이동에 필요한 결정적 요인은 일차적으로 당원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생래적 성분이 좋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군대 등 소속단체의 추천과 소속단체 간부의 입당보증서를 받아야 한다.⁹⁾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노년층(항일 빨치산 세대), 장년층(3대혁명소조 지도세대), 청년층(3대혁명소조 참가 학생세대)의 3합(三合)구조로 되어 있으며, 권력핵심층은 대부분 김정일 위원장의 친위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9) 이장수,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8, pp.56~59.

10) 임정고, 「북한 권력엘리트 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p.46~54.

1980년대 김정일 비서의 등장이후에는 생래적 성분과 함께 일정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1998년 9월 김정일 지도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전문성을 갖춘 40~50대 기술 관료 내지 경제통이 당·정 요직에 전면 배치되는 대신에 50~70대 노력영웅은 퇴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지난 3년 간 고위간부에 대한 대폭적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김일성 주석 사망이래 북한 권력엘리트 내부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7년 초 각도의 농정 책임자인 농촌경리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면서부터이다. 평안남도·양강도·황해남도 등 6개 도·직할시 농촌경리위원장이 물러났는데, 퇴진한 이들은 60~70대 노력영웅들이었으며, 빈 자리에는 실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40~50대로 메워졌다. 잇따른 자연재해와 농민의 의욕상실로 추락을 거듭하던 농정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다.

곧이어 지방사장을 책임지는 도·군당 책임비서 및 인민위원장, 공장·기업소 지배인들이 곳곳에서 교체되었다. 12개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및 인민위원장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80%를 넘어섰다.

간부 교체는 1998년 7월 26일에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선거에서 두드러졌다. 대의원 6백 87명의 64%에 해당하는 449명이 교체되었다. 9기 대의원선거 때의 교체폭 31.4%(2백 14명)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최근 교체된 공장·기업소의 직장장·기사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경제기관 실무간부 등이 대의원에 대거 발탁됐기 때문이다.

중양간부들도 큰 폭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1998년 9월 5일 출범한 1차 내각에는 50~60대 신진 전문관료들이 대거 승진·등용됐다. 신임 부총리 조창덕(전 채취공

업부장)과 광범기(전 기계공업부장)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안주탄광기업소 지배인을 하다 진기석탄공업상으로 발탁된 신태록, 방직공업연합 총국장에서 경공업상으로 발탁된 이연수, 전화국 직원에서 출발해 평양중앙전화국장·채신부 부부장을 거쳐 채신상이 된 이금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군중 동원을 떠맡는 당 외곽단체의 중앙간부들도 역시 바뀌었다. 민주여성동맹·직업총동맹·농업근로자동맹의 위원장들이 70대에서 50~60대로 연령층이 낮아졌다. 새 인물들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혁명 2세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1970년대에 주도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떠오른 인물들은 일부 노 간부를 제외하고는 해외유학 경험이 없으며 1960년대에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대학을 다녔거나 조직지도부에서 그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다.

(2) 북한 의전서열의 변화양상과 특징

북한의 주석단(主席團) 서열은 통상 북한의 권력변화의 흐름을 가늠해 보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주석단 서열은 김정일 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이 소개되고, 노동당 중앙위 비서, 내각 부총리 등의 순서로 이어져 왔다.

북한의 주석단 서열은 지난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큰 폭은 아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군부인사들의 약진을 꼽을 수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 장의위원회 서열을 보면 조명록을 비롯한 군부인사들이 30위권 밖에 있었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

의 서열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10월 원수로 승진한 이을설과 차수로 승진한 김영춘, 조명록이 각각 군총참모장, 총정치국장에 오르면서 1997년 7월 김일성 주석 3주기를 기해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사이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4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 '주석단'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다음에 조명록이 자리잡았고 홍성남 내각총리, 김영주·박성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다음으로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이 뒤를 이어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또한 군부 지도층 상당수가 30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 군부가 권력핵심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간의 순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국 후보위원이 정치국 위원에 앞서 호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의 경우, 노동당 정치국 위원인 계응태(노동당 중앙위 비서)·한성룡(노동당 중앙위 비서)이 15위, 16위로 크게 뒤쳐진데 비해, 정치국 후보위원인 연형묵과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12위, 14위로 앞서 있다. 이는 노동당의 핵심기구인 정치국이 과거와 같이 권력서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당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데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1980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제7차 당대회가 김정일 시대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에 개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표 2-2〉 주석단 서열 비교

서열	김일성장의 위 인 회 (1994.7.8)	4주기추모식 (1998.7.8)	최고10기1차 (1998.9.5)	5주기추모식 (1999.7.8)	최고10기3차 (2000.4.4)	당 창건55주년 경축일방식 및 군중시위 (2000.10.10)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오진우(사망)	이종욱(사망)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강성란	박철천	홍성남	조명록	조명록	박철천
4	이종욱(사망)	김영남	이종욱(사망)	홍성남	홍성남	김영주
5	박성철	계응태	박성철	이운선	김영주	홍성남
6	김영주	전병호	김영주	전병호	박성철	김영춘
7	김병익(사망)	이운선	조명록	한성봉	김영춘	김일철
8	김영남	조명록	이운선	김철만	김일철	이운선
9	최광(사망)	김영춘	김일철	백학림	이운선	백학림
10	계응태	한성봉	이용무	김영춘	전병호	연형묵
11	전병호	시운석	계응태	김일철	백학림	한성봉
12	한성봉	양철섭	전병호	이용무	연형묵	계응태
13	시운석	최태복	한성봉	최태복	이용무	김철만
14	김철만	김철만	김영춘	양형섭	양형섭	최태복
15	최태복	홍성남	양형섭	최영림	계응태	양형섭
16	최영림	최영림	최태복	김국대	한성봉	최영림
17	홍성남	홍석형	김철만	김기남	최태복	김국대
18	강희원(사망)	연형묵	연형묵	김중린	김철만	김중린
19	양형섭	김국대	백학림	김용순	최영림	김용순
20	홍석형	김기남	진문섭	김익현	김윤혁	이용무
21	연형묵	김용순	최영림	이종산	김영태	김익현
22	이선섭	전문섭(사망)	홍석형	김용연	유미영	조창덕
23	김철수	백학림		이리원		곽범기
24	김기남	김일철		박기서		김윤혁
25	김국대	이리원		조창덕		이리원
26	황강연(암명)	김익현		곽범기		전재선
27	김중린	박기서		김윤혁		박기서
28	시관리(처형)	김복신		김영태		이종산
29	김용순	김윤혁		유미영		김용연
30	김환	장권				김영태
31						유미영

출처: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등

제2절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등장과 변화과정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며 김일성주의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리이며 북한의 지도이념이다.

북한에서 주체·주체성 확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이었으나, 처음에는 체계화된 정치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바로 잡자”라거나 “주체를 확립 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다.¹¹⁾ 소위 주체사상의 4대원칙이 정식화된 것도 1955년 김일성 수상이 최초로 주체 확립을 주장하고 나선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진행된 일이었다. 김일성 수상은 1965년 4월

11) 노동신문의 기사제목들 기준으로 하면 1965년 9월 30일 김철희가 쓴 「당 창건 20주년을 맞으며: 조선헌명과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라는 기사가 최초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쓴 경우에 해당한다. ‘주체사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보다 앞선 1962년 12월 19일 노동신문 논설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반동회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원칙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는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에는 경제에서의 자립, 1962년에는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에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표명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진행되었다.¹²⁾

1967년 10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 정부의 10대 정강」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이 북한정권의 지도이념이라는 점을 선포하였다.¹³⁾ 그후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함께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정권은 당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체사상을 공식적인 정치지도 이념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에도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는 ‘당(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로 규정되고 있다.

12) 주체사상의 4대 원칙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제기했을 때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1956년 12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언급하였고, 1년 뒤인 1957년 12월 5일 정치에서의 자주를 주장했는데, 이때 정치란 북한내부의 정치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2년 12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주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정치에서의 자주를 다시 내세웠다. 그런데 1966년 당시 정치에서의 자주는 북한의 대외관계, 곧 외교에서의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각각 등장하던 정치노선은 주체사상의 4대원칙으로 정식화한 것은 1967년 이후의 일이었다.

13)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 주체사상의 시대별 특징

주체사상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내용상의 변화를 겪어 왔다.

1950년대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김일성 수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추방논리로서의 주체의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했다. 나아가 1965년에는 주체사상이 '남조선 위정자들의 외세의존 사상'에 대치되는 반명제(안티테제-Antitheses)로 변모한다.

1967년에 들어서는 주체사상이 김일성 중심의 지배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1967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체사상이 북한정권의 지도이념임을 선포함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이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1970년대 들어서자 주체사상은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의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이론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 주석의 소년시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 수령이라는 우상화 논리를 주체사상의 터전 위에서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김정일의 시도는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미래의 수령으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부르짖으며 주민 생활의 각 부문에 주체적 방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주체적 생활방식이란 결국 김일성 주석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주체사상은 공식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 비서를 이상화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절대적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주체위업은 대를 이어 지속해 나가야 하며, 주체혈통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완성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라는 식으로 주체위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1986년에 김정일 비서가 제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존의 '수령론'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도덕과 주체사상의 논리를 연결함으로써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김정일 비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1980년대 말엽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동구권에 이어 소련마저 붕괴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북한당국은 1990년대 들어 주체사상의 차별성·우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대안적 논리를 들고 나온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이미 붕괴해 버린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차별화 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주체사상을 참다운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참답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차별화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북한의 경제상황이 내리막길로 접어든 데다 1990년대 들어 심화된 위기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주민들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1990년대 들어 우리식 사회주의(1991)·붉은기 사상(1995) 등으로 주체사상을 보완한 것은 북한 사회가 직면한 내부도순과 외부압력 속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당국은 체제유지가 위협받게 될 가능성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끊임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내세워 주민들의 안내심과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위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서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총진군' 과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개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통치 원리로서 헌법에까지 규정하고 있다.

3.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과 한계

주체사상의 가장 큰 약점은 심각한 논리적 취약성과 함께 현실성의 결여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은 1950년대 당시 김일성 수상이 주체 확립의 의미를 설명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때 김일성은 주체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해 나가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선진 당들의 경험을 배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되 제대로 소화해서 '조선혁명'의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 결성과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일이 어떻게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북한 정권이 풀어야 할 부담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김일성 우상화라는 왜곡된 목적에 동원되면서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성이 구조화되었다. 1970년 이후 북한당국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어 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므로 주체성을 갖고 주인다운 태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령론을 내세워 인민대중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 되려면 수령의 지도

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인민대중들의 '주인다운 태도'를 완전 배척하고 김일성 우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논리는 책임과 의무만 지닌 채 열심히 노동하면서도 아무런 요구나 불평이 없는 인민대중을 요구한 것이었다.

198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 없이 권력의 부자세습화를 이르기 위한 작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부자세습화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를 이어 주체위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와 주민들을 부단히 설득해왔다. 그런데 이 설득 자체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1990년 이후 북한 당국 최대의 고민은 그토록 믿었던 '형제나라'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이유를 주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일이었다. 북한 당국이 서둘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노동신문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다고 자랑했던 형제나라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반면, 총체적 부패의 길을 걷는다면 자본주의 나라들이 견제하는 모습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경제적 위기상황은 북한당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주체사상의 내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 논리적 취약성이 기본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정치적 의도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북한 당국이 정치적 의도에 맞추어 사상체계를 바꾸어 나가느라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 당국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붉은기 사상' 등의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 것은 체제수호를 위한 공여지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주

체사상의 절대성과 혁명성은 북한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주저하고 더욱 폐쇄적 체제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¹⁴⁾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신격화된 김일성 주석에 의해 창시되었고, 주체사상이 북한존재 자체를 합리화시켜주는 원리인 동시에 기본이념이기 때문이다. 즉, 주체사상은 사상적인 무오류성을 지닌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이처럼 절대성과 혁명성을 기조로 하는 주체사상이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면 북한의 대외개방이나 남북간 교류·협력은 매우 한계성을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논리적 취약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의 확립과정에서 기여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1997년 4월 우리나라로 귀순한 이후 여러 차례의 증언 등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¹⁵⁾

14) 북한문제연구학회편,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1998, p.52.

15)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pp.355-359.

제3절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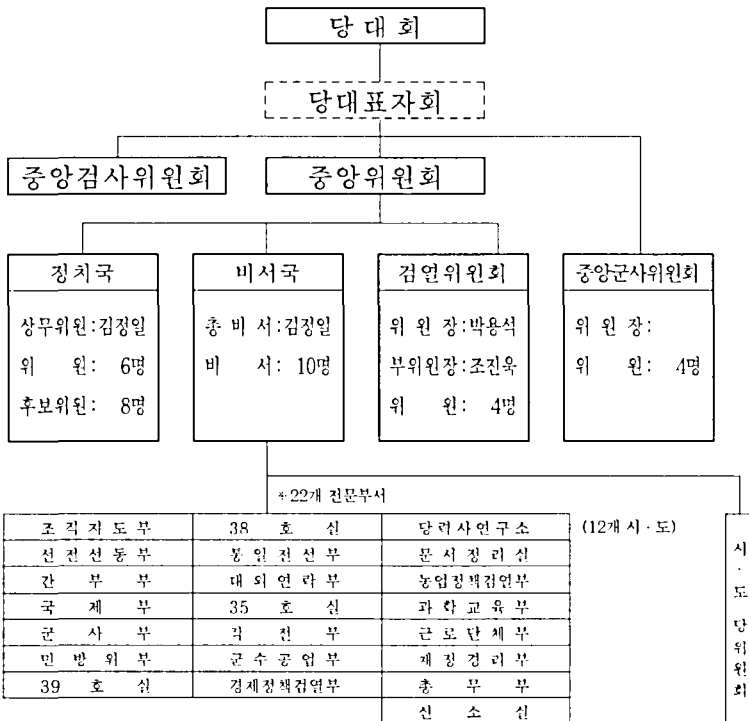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 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 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당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하여 전 당에 수령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세워 나감으로써 1인 지배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

다. 노동당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체제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상급 당조직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 당조직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 기관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¹⁶⁾

〈표 2-3〉 조선노동당 조직체계

(2000. 12. 현재)



자료: 통일부, 『북한권력기구조』, 2000. 12

16)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조선노동당 규약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공산권에서 통용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대해서는 『세계공산권총람』(극동연구소편, 1972, p.619.)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노동당의 조직운영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당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 지도는 북한사회의 전 부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부문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당위원회와 당세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당중앙위원을 선거하고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특히 당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과제 등 당내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핵심부서이다.

지방당 조직은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다. 도(직할시)·시(구역)·군 등 단위뿐만 아니라, 1급과 2급의 공장·기업소와 같은 생산단위에도 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당의 기층조직으로는 당세포, 부문당(마을), 초급당, 분초급당 등이 있다.

① 최고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② 모든 국가기관은 이러한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구성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사업을 보고하며 ③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최고 권력기관에 집중되고 상급기관의 건정은 하급기관을 구축하며 ④ 각 기관에서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2) 조선노동당과 군의 관계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당이 군부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즉 당중앙 군사위원회와 함께 군대내 각급 단위에도 당조직을 두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대대급 이상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처럼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 내에는 당의 지도를 받는 청년동맹(구 '사로청')이 있다. 청년동맹의 조직은 당조직지도부에서 지도한다.

그러나 김정일 지도체제 출범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당·군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3) 외곽단체

북한의 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 바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조선천도교 청우당이 있다. 또한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

17) 정영대,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5

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 아세아·태평양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전선 단체와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망라되어 있다.

2. 정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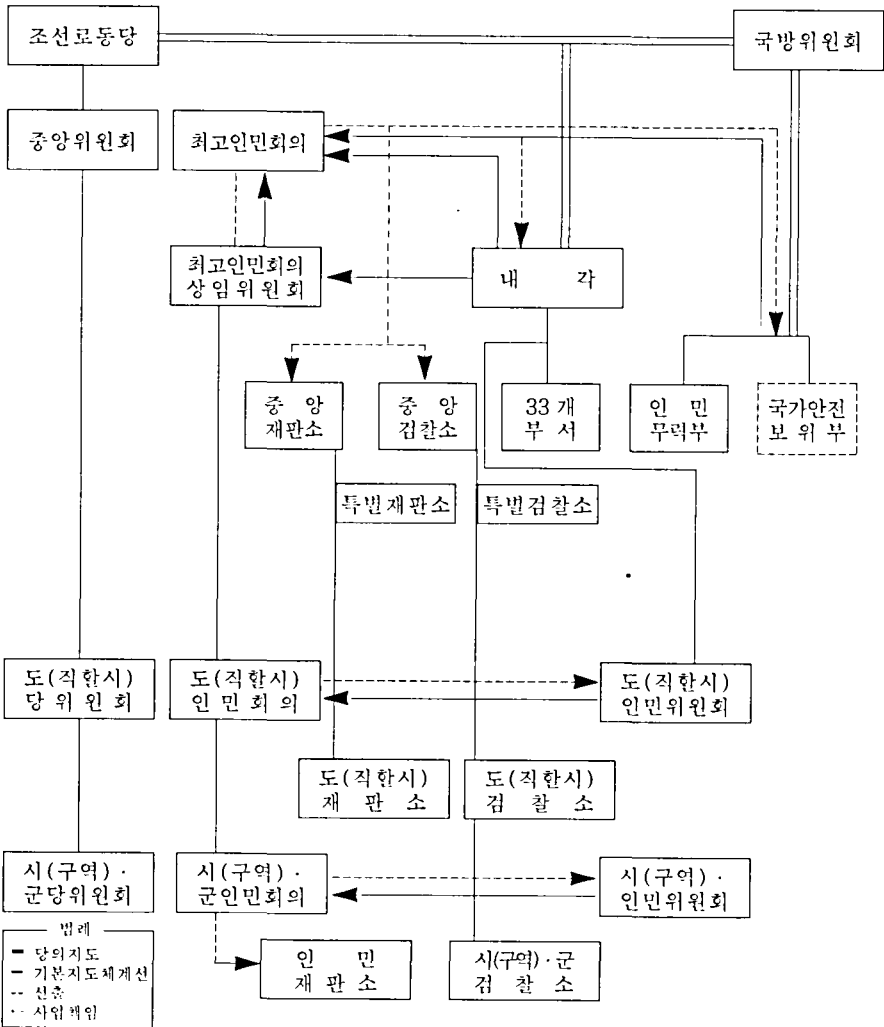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 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본 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본체계가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98년 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설했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내각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구 헌법 제105조의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대표권을 분리하여 내각 총리가 정부를 대표(제120조)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공포, 외교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제111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

(표 2-4) 북한의 권력체계

(2000. 12. 현재)



자료: 통일부, 「북한권력기구조」, 2000. 12

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재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¹⁸⁾ 이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1)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북한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 명당 1명씩 선출되었으나, 1992년 개정선거법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의원선거가 있는 때마다 정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다.

18)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308호, 98.9, p.8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를 선거·소환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위원의 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의 선거·소환,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해 부총리·위원장·상과 그 밖의 내각성원의 임명,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 중앙재판소장의 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을 선거·소환한다.

그 밖에도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경제발전과 국가예산에 대해 심의·승인하며,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밖에 조약의 비준·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으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나 동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체포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정책과 법안의 작성·심의 및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또는 대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다.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하고 원로인사 중 약간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와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가 있다. 1992년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설기관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법안과 규정의 제정·심의·채택, ②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승인, ③ 헌법과 현행 법령의 해석, ④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 감독 및 대책 수립, ⑤ 헌법·법령,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 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 ⑦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및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의의 성원에 대한 임명·해임, ⑧ 내각의 위원회·성의 신설 및 폐지,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개편, ⑨ 내각총리의 재의에 의해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의 임명·해임, ⑩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소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수반이 행사하는 외교권을 관장하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① 조약의 비준·폐지, ② 외교대표의 임명·소환 결정 및 발표, ③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④ 대사권과 특사권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사업을 조직·지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이밖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체의 정령과 결정·지시를 내리며,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에 구성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 및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 ②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 ③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과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
- ④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지시 폐지지방 인민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회의의 소집과 회의성립·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와 비슷하다.

(2)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의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 확대개편(1992년 7차 헌법)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

리기관(제100조)으로 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방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②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③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④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등이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의견 서열이 당비서보다 앞서며, 주요 당·정 직책을 겸직하고 있어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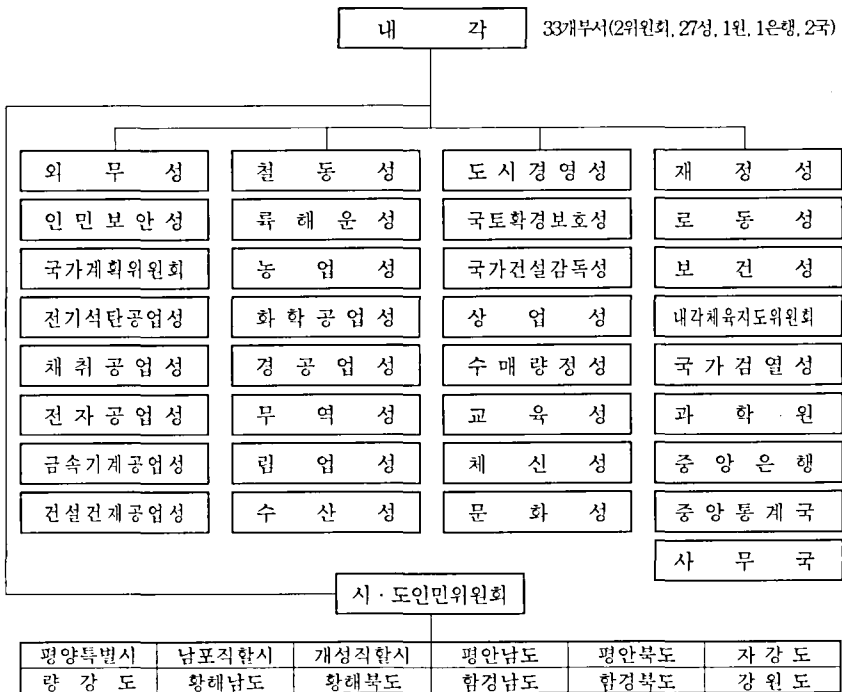
1) 내각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사업집행을 위하여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 전원회의는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관리사업에 관해 세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한편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및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내각은 ① 국가정책의 집행대책 수립과 국가관리 관련 규정의 제정·수정·보충, ②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의 신설·폐지 및 사업지도, 국가관리 기구 개선대책 수립, ③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실행 및 국가예산의 편성·집행,

〈표 2-5〉 행정기관

(2000. 12. 현재)



자료: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00.12

④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노동행정·환경보호·관광과 그 밖의 여러 부문 사업의 조직·집행, ⑤ 화폐·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⑥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 ⑦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수립, ⑧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⑨ 내각의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현재 북한의 내각은 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등 33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아울러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밖에 내각성원의 임면에 관한 제의권을 가지며, 새로 선출된 내각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장악·지도·관리하고, 위원회·성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며, 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 집행대책 등을 토의 결정한다.

2) 지방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1998년 헌법 개정 전에는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행정적 집행 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지방인민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지방인민위원회는 ① 인민회의의 소집 및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②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 집행, ③ 해당 지방의 행정사업 조직·집행, ④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실행, ⑤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⑥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 ⑦ 해당 지방의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률·통제사업 실시, ⑧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지도 및 하급인민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지시의 폐지 및 결정집행 정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각 지구계획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시·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도건설위원회, 지방철도국, 도량공업위원회, 통계국 등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주권기관인 해당 인민회의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인민회의의 휴회 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주권 기관으로 해당 지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감독도 받는다.¹⁹⁾

(4) 사법·검찰기관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헌법과 재판소 구성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재판기관

북한의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재판소, 지방의 인민재판소로 구성되는데 이와 별도로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재판은 3급심제를 원칙으로 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

①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91조, 제110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헌법 제161조). 중앙재판소의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확정된 판결·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1심 판

19) 신영호, 「북한행정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편, 1994, pp. 169~170.

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② 도(직할시) 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이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으며,²⁰⁾ 자격요건 및 결정사유는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과 같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관할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법행정사업을 관장하고, 관할 도(직할시)내의 반국가범죄와 사형 또는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며, 관할 도(직할시)내의 인민재판소의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상소·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아울러 도(직할시)재판소는 중앙재판소와 함께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의 사법행정사업상의 지도와 사업정책상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③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직할시)

20)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노동·이혼·사건 포함)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하며, 그 외에 중재·법령해설·자료폭로·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한다.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④ 특별재판소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나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헌법 제155조).

군사재판소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도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는다.

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²¹⁾와 공소 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특히 북한의 검찰이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마찬가지로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되어 있다.

북한의 검찰소 조직체계는 중앙검찰소가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검찰동일체적(檢察同一體的)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검찰동일체적 체제'는 전국에 걸쳐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획일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당의 사법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확립하고, '당의 독재체제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²²⁾

중앙검찰소는 모든 검찰사업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하급검찰소는 상급검

21) 북한에서는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심에 검사가 직접 참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검사는 예심원이 작성한 기소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등 직접 수사를 행하는 수사참여적인 역할보다는 수사팀 지휘·통제하는 역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연구소, 『북한의 개정형사소송법 개요』, 1992, pp. 85~86

22) 북한의 각급 검찰소는 '초급당' 조직을 갖고 있는데 '초급당'을 통하여 각종 지시, 정책노선을 각급 검찰소에 하달하고 각급 검찰소의 구성원들은 당의 지령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들 구성원은 당적을 가져야 하며, 검사들도 의무적으로 각종 당대회, 학습회, 역사연구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

찰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그 산하에 일반감시부, 예심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의 부서가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명·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하고(헌법 제91조 11항),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중앙검찰소가 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49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헌법 제152조).

도(직할시)검찰소에는 일반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가 있고, 그 밖에 기요과와 경리과가 있다. 각 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3명 내외의 검사와 서기를 둔다.

3) 변호사 제도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변호사 제도는 실체에 있어 당과 국가의 정책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침투되고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며, 그 본래의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48년 제정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제도를 규율해 왔으나,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²³⁾을 채택하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선변호사회'는 북한 변호사 조직으로서, 각급 변호사 위원

23) 북한의 변호사법은 5장 3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변호사 자격, 제4장 변호사 보수, 제5장 변호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를 상무기관으로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변호사회에 대한 법적 규정도 분명하지 않고,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각급 변호사 위원회간의 연락을 긴밀히 할 목적으로 설치된 협의기관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강신창,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1998.
- 김경호, 『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2000.
- 김창희,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0.
- 대한매일신보사, 『북한인명사전』, 2000.
- 동아일보사, 『김정일 북한대백과』, 1995.
-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돌베개, 1999.
- 방찬영, 『기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영사, 1995.
- 백인학, 『주체사상과 북한정치체계의 변화가능성』, 북한연구, 1992.
- 북한문제연구학회편,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1998.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일시대의 북한』, 1983.
-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 연구』, 나남출판, 1993.
-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 2000.
-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진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오일환·정순원,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을유문화사, 2000
- 이동훈 외, 『북한학』, 박영사, 1996.
- 이상우, 『북한정치 입문』, 나남, 2000.
- 이정수, 『북한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1. 8.
- 이종석, 『새로 쓴 북한의 이해』, 2000.
- _____,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 읽기』, 지식공작소, 2000.
- 임정고, 『북한 권력엘리트 구조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참고문헌

-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정석홍, 『남북한비교론』, 사람과 사람, 1997.
-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민족통일연구원, 1994.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12.
- , 『북한권력기구도』, 2000.1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 한용원, 『북한학』, 오름, 1998.
- 황정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 1999.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제1126호, 1998. 9. 10)

Ⅲ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의 변화

양재성

(통일교육원 교수)

제1절 |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와 외교동향 (63)

제2절 |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67)

제3절 | 북한의 외교실태 (72)

제4절 | 대남관계의 변화 (86)

KEY POINT

요점 →

- 북한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고립탈피를 위한 전방위 외교와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북한이 2001년 신년공동사실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에도 작년에 이어 전방위 외교와 실리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외교패턴 변화는 대남관계의 개선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적 측면이 크게 퇴색한 채,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 전략적 측면으로 크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1절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와 외교동향

북한이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최근 몇해 동안 우리 인민은 유례없는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다”고 말하고 있듯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직면하였던 심각한 경제난은 ‘탈냉전’으로 표현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혁명적인 변화에 주로 연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권의 소멸과 동·서 냉전의 종식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남북 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남북간의 오랜 단절과 적대적 대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원인은 미·소간, 미·중간의 경쟁과 대결 및 동·서 냉전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이후 국제정세가 ‘지각변동’으로 표현될 만큼 큰 변화를 보임으로써 남북 분단과 적대적 대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원인이 소멸된 셈이다.

특히 북한의 제1의 배후 지원세력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소멸과 그에 따른 공산권과 북한간의 각종 교류·협력관계의 중단은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공산권의 붕괴에 가장 크게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정세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추진하였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서명하였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북한과의 관계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9월 제54차 유엔총회에 백남순 외무상이 참석, 20여개 국가 외무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가진 이후 활발한 외교 활동을 보이고 있다.¹⁾

이에 따라 2000년 들어 북한의 외교는 숨가쁘게 전개돼 왔다. 우선 1월 초 서방 선진 7개국(G-7) 가운데 최초로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2월에는 홍콩에 총영사관을 개설했고, 5월초에는 24년여간 동결했던 호주와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에 합의했다. 특히 7월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외교관계가 없는 필리핀, 미얀마 두 나라 중 필리핀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1999년 7월 27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정치·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23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북한이 ARF에 가입한 것은 국제적인 현안문제를 미국, 일본 등과의 협상을 통해 양자적(兩者的)으로 해결하려던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 국가들과 다각적인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983년 10월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으로 국교가 단절된 미얀마와 국교정상화 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2001년 2월 수교하였다.

1) 「연합뉴스」, 2000.10.12.

더욱이 백남순 외무상은 2000년 9월 유럽 9개국에 수교를 제의한데 이어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 9개국과 유럽위원회 대외관계 담당 위원에게 수교 제의 편지를 보냈다.

그 후 북한은 2000년 12월 7일 영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하였던 바, 한국전쟁 참전국 가운데 미수교국은 그리스, 터키, 룩셈부르크,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다.

북한의 방문외교도 활기를 띠어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5월 29~30일 중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백남순 외무상이 4월에는 비동맹 외무장관회담에, 7월에는 ARF에 참석했고, 9월 하순부터는 독일과 이탈리아, 유고 등을 순방했다.

백 외무상은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한데 이어 27일에는 람베르토 디니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투자보장 등 3개 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초청을 수락하였으며, 또한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도 2001년 1월 중국 방문시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방문 초청을 수락하였다.

북한과 일본은 2000년 4월과 8월, 10월에 세 차례에 걸친 수교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측의 과거청산 문제와 일본측의 핵미사일 문제 및 인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향후 북·일 양측은 차기 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2000년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조명록 특사는 10월 10일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10월 12일에는 북·미 관계 개선과 미사일·핵·테러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²⁾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10월 23일에서 25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조명록, 백남순 등 고위 당·정·군 인물들과 북·미 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10월 25일 서울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한 조율을 거쳐 방북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의 이같은 전방위 외교는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상하이를 방문하여 중국식 개혁·개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전방위 외교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에게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국제적 고립 탈피, 대외지원 획득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실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그 같은 정책이 외교활동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전방위 외교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실리외교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08호, 제510호

제2절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북한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된 국제 정세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³⁾

1998년 9월 개정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⁴⁾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종전에 내세웠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의 단결'이라는 기본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로 수정하여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

3)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12

4) 1980.10 제6차 당대회총화보고와 1997.6 김정일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자주·평화·친선을 외교의 기본이념으로 제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북한헌법 제172조

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지배주의적 책동이 더는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을 단호히 짓부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⁶⁾

신년공동사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작년에 이어 2001년 한해에도 전방위 외교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비야호로 복잡다단한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촉발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다지는 한편, 미국에서의 새 행정부 탄생에 따른 협상틀 마련, 중국·러시아와의 정상외교,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 전방위 외교의 방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 전 세계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 외교를 적극 추진,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가장 활발한 한 해를 보냈다. 북한 스스로 2000년을 '차주외교의 위대한 승리의 해'로 규정했을 정도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조명룡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울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함으로써 50년간 적대관계로 규정돼온 북·미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 5월과 2001년 1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 장쩌민 주석과 만나 양국관계의 발전에 합의했고, 2000년 7월에는 푸틴 대통령

6)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 2001년 1월 1일자.

을 평양으로 초청해 1990년대 옛 소련의 붕괴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케도로 끌어올렸다.

또한 서방선진 7개국(G-7)인 이탈리아(1월 4일)와 영국(12월 12일)을 비롯, 필리핀(7월 12일)과 수교했고 호주(5월 8일)와 외교관계를 복원, 2001년 2월 현재 전 세계 142개국과 수교했으며(한국은 184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000년 7월 27)에 가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대외부문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북한 정권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으며, 경제난 회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안정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2001년에도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위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며, 경제재건에 절실한 대외경제협력을 획득하기 위해 미·일·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과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에서는 그 동안 대북 강경 정책을 시사해온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양국간의 점점 찾기가 여의치 않고, 일본에서도 모리 총리정권의 입지약화로 북·일 수교협상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 구상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과거 동맹 수준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주변 4강에 대한 정책 외에도 독일,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EU 소속 미 수교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과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 추진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⁷⁾

첫째, 북한 체제유지를 위해 1990년대 초반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특유의 벼랑끝 외교(Brinkmanship Policy)를 들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벼랑끝 외교를 취한 것은 지난 1993년 핵무기 개발의 흑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한 압력이 강화될 때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압력에 대해 그 해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과 극한적인 대결국면으로 나갔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결국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와 금창리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압박 당시 또는 미사일문제와 관련된 대미접촉 등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둘째, 북한 외교정책 추진의 또 다른 방법은 실리외교이다. 북한의 외교정책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이념중시 외교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국제사회가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함에 따라 북한 역시 이러한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북한이 외교정책 수행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실리외교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1998년 3월14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앙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30%의

7) 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외교편)』, p.922

재외공관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힌 것을 꼽을 수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회견에서 식량사정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면서 경제사정이 풀릴 때까지 라는 단서를 붙여 이 조치가 북한의 경제난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남북의 외교경쟁을 위해 해외공관을 늘리는 데 주력해 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북한의 실리외교의 구체적 사례로서 최근 수교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공관을 바로 설치하지 않고 수교국 주변국에 있는 기존 대사관이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겸임대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또 공관을 늘리면서 비(非)주요국들 공관에 '자체조달' 원칙을 세운 것도 실리외교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아·태평화위원회와 같은 '준민간기구'를 내세운 민간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방식은 특히 아직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서방국가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의 외교실태

북한은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을 비롯하여 서방국가들 및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올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남북관계가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 북한의 외교활동은 더욱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국제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변4개국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과 활동이 어떻게 지속 혹은 변화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

1. 북한과 미국 관계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 동구권 붕괴로 외교기반이 위축되고, 체제보호막 역할을 해 온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외교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자, 체제유지를 위해 냉전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

해 왔다.⁸⁾

이를 위해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거부 등 이른바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 마침내 1994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북한은 또한 1994년 4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측에 제의한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평화협정의 과도적 조치로서 잠정 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의 한국전 실종 유해 발굴 및 송환 요구에 대해 협력하고, 1996년 4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는 등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1998년 8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평북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 핵 의혹시설에 관한 협상을 4차례 개최, 1999년 3월 북한이 미국 측의 복수 현장방문을 허용하는 대신 60만톤의 식량을 제공받았고, 1999년 5월과 2000년 5월 미국의 현장방문단이 금창리 터널을 2차례 조사함으로써 지하핵 의혹시설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됐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9년 9월 북·미 베를린합의가 이뤄지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를 밝힘으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본격 협상을 할

8) 연합뉴스, 앞의 책, pp.933-934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윈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 한국·일본과의 공조하에 향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였다.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의 미국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방문으로 외교대표부 설치, 실종 미군신원 확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나, 향후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문제와 테러지원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당분간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부시 정권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클린턴 정권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동기와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⁹⁾

첫째, 핵과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그들 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한 방위정책의 유명무실화 내지 폐기,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장비·무기 및 기술 등의 지원 중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한 그들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다른 서방국가들과

9) 진정환, 「북한 외교의 변화 양상」, 『계간 외교』, 제 51호(2000, 7) pp.14-15

의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재네바협의를 통하여 46억 달러 상당의 경수로와 연50만 톤의 중유를 10년 동안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경제·기술지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과의 핵과 미사일 교섭의 성공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을 통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정통성과 영도력을 과시하려는 것 등이다.

한편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동기와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려는 것이다.

둘째, 교섭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의 해소와 북한체제의 돌발적인 붕괴 방지 및 북한의 개방과 개혁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평화통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

셋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2. 북한과 일본 관계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과 간접교역 형식의 경제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부터 쌍방간에는 국교정상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1970년대 초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서간의 데탕트와 특히 미국과 중국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남북대화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북한과

일본간의 관계 개선도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수교문제는 1980년대까지 잠재 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에 평양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1차 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8차 회담까지 계속되었다. 수교회담에서 양측은 한·일 합방 조약의 효력과 한·일 기본조약의 적법성문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문제, 북한의 핵사찰문제,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북송 일본인 처의 본국 왕래문제, 그리고 이은혜 문제 등에서 현저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냈다. 1992년 6월에 일본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수교교섭의 진전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고, 1993년 11월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교섭을 중단시켰다.¹⁰⁾

1994년 10월에 북·미간 핵합의문이 서명된 이후 1995년 3월 30일에 북한과 일본이 수교교섭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일본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북한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교교섭이 재개되지 못하다가 1997년 8월에 북경에서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1998년 8월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급격히 경색되었던 북·일 관계는 1999년 들어서서는 화해 분위기로 반전되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적극적인 경제원조와 외교 관계 개선을 약속한 페리의 정책권고안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발표하고 북한 역시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한 데 편승해,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해 취했던 대

10) 진정환, 앞의 논문, pp15-16

북제재를 해제하고 식량지원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북한도 1999년 8월 정부성명을 통해 비록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1992년 이후 중단됐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의 재개로 이어졌다. 무라야마 도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한 일본 초당파 의원대표단이 1999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년 4월, 7년 반 만에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9차 본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했으며 5월로 예정됐던 10차 본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연기되어 2000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되었고, 11차 본회담도 2000년 10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과거청산 요구 등 난제로 국교수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북한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비난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발전과 수교를 추구하고 있는 동기와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으로부터 식민통치 배상이나 전후보상을 받고 경제·기술협력을 진전 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¹¹⁾

둘째, 남북대결에서 일본을 중립화함으로써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일간 및 한·미·일간의 공조체제를 방해·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일본내의 친북조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동기와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

11) 북한은 40년 간의 식민통치와 종전 후 50년 간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한 100년 간의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피해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일본과 수교시 약 1백억 달러 내외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전방위외교'를 외교의 기조로 하고 있는 일본이 남북한에 대해서도 등거리 정책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둘째, 북·일 수교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견제와 반대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이 한반도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등이다.

3. 북한과 중국 관계

북한정권 수립이후 반세기 동안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때로는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도 하였으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순치(唇齒), 혈맹으로 표현될 만큼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이념적 토대 위에서 북한을 후원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사회주의국가 중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세계사적인 탈냉전의 상황에서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1990년대 들어 커다란 곡절을 겪어 왔다.¹²⁾

중국이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시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속에서 유지해온 구 상무역을 포기하고 대신 경화걸제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1992년 8월 남한과 외

12) 연합뉴스, 앞의 책, pp.957-958.

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그 동안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적잖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991년 10월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하고 1992년 양상쿤(楊尚昆)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이 있기까지 8년여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온 양국 최고수뇌간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로 볼 때 이 기간 중 북·중 관계의 실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왔다.

2000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쩌민 주석의 초청형식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양국간의 관계와 개혁·개방 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양국간 친선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장쩌민 주석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였고,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원유, 석탄 등 물자를 추가로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5월과 2001년 1월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수교로 소원해졌던 양국간의 관계가 완전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양국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예전과 같은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보는 견해도 많다. 중국은 그들의 핵심적 국가전략인 지속적인 경제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남한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등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일정하게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북·중 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과 중국은 현실적 한계를 인식, 과거와 같은 맹목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각자의 국가이익에 맞춰 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주변 4강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변정세의 안정을 통해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려는 중국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와 범위, 그리고 한·중 관계의 발전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중국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배경과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간에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유대가 지속되고 있고,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현재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¹³⁾

셋째, 중국은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효과적인 외교적 지지·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13) 중국의 대외경제원조 총액의 1/3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 「연합뉴스」, 1999.10.14

넷째, 한·미·일 3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불신과 공동 안보의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기존관계의 유지가 안보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현실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¹⁴⁾ 1998년에 개최되었던 제 15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제시된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은 대내경제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강택민 체제는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중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환경의 안정 유지와 서방 선진국들과의 협력 증진을 대외정책의 핵심적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¹⁵⁾

결국 중국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기초 하에 북한에 대해 변방외교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지원 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 실리외교 차원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본다.¹⁶⁾

4. 북한과 러시아 관계

북한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뤄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곧바로 모든 공화국과 수교함으로써 옛 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했다.

14) 박두복,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대남북한 관계」, 『북한학보』 제20집,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1996, pp.49-81

15) 중국의 『眺望』(1996.8.9호)지는 경제 발전을 위한 군사 충돌 회피, 연평균 7.4%의 경제성장, 대만과의 평화통일 추구 및 대만 독립 추구시 무력사용, 협력형의 안보전략 추구 등 향후 15년 간(2010) 중국의 안보전략을 소개한 바 있다.

16) 김승재, 「북한의 대외정책변화와 중·러관계」, 『계간 외교』 제54호(2000.7), pp.56-57

1995년 9월 7일 러시아가 “러·북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동맹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 1996년 4월 평양에서 제1차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회의가 열린 것은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양국은 부총리 급을 수석대표로 외무, 대외경제, 농업, 철도, 경공업, 임업 등 경제 각 분야에서 협력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결과 이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이 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제공, 금속공업 제품교환 등을 통한 양국 간 무역확대를 목표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적 관계도 차츰 회복되어 갔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리인규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그레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북·러 신조약 1차 회담이 시작돼 1998년 12월까지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4차례의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군사개입조항을 폐지하고 고려연방제 지지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북·러 우호선린협조조약에 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정식 서명했다.

새 조약 체결로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재조정은 1996년 11월 투자 장려 및 호상보호협정 체결, 1997년 4월 과학기술협력의정서, 11월 이종과세 방지협정 체결 등과 함께 농

업·어업·과학기술 협조에서 나타나듯이 경제협력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⁷⁾

특히 2000년 7월 푸틴의 방북 및 북·러 공동선언을 계기로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북·러 관계는 남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등거리외교와 상호간의 실리추구라는 새로운 기조 위에서 재정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존 관계 회복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 자원, 기술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으로서는 한·러간의 관계 발전을 저지하고자 한다.

셋째, 적극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배경과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안보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있고, 무기 수출을 비롯한 상품시장으로서의 북한의 가치이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의 부진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기존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관계가 군사동맹관계로 되돌아갈 수 없음은 물론, 이전과 같은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의 회복

17) 김승재, 앞의 논문, p.57

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산체제를 고수하는 한, 러시아와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정책 기조에서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고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⁸⁾ 또한 경제 이익을 비롯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북한과 서방 각국과의 관계

북한의 2001년 새해 대외관계 가운데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은 바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의 관계개선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12월 12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가장 미온적이던 영국과 수교한 경험은 북한에 있어 향후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지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2000년 9월 백남순 외무상 명의의 서한을 통해 EU소속 15개 회원국 가운데 당시 미수교국이던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그리스,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EU 집행위원회 대외관계 담당위원에게 수교를 제의한 것에 비추어 불래 올해에는 나머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심을 가질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이같이 서유럽국가들과의 수교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경제재건에 필요한 협력을 얻기 위함이 주된 이유이며, EU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화해 무드에

18) 러시아에서 좌파세력이 강화되었으나 공산정권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러시아의 개혁·개방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참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들 개별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는 아직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미흡,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의 미제거 등을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위원회 역시 소속국가들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과는 달리, 평양과 브뤼셀과의 연락사무소 설치 등 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스웨덴이 EU의 순회의장국을 맡게되는 2001년 상반기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0년 하반기 프랑스가 EU의 순회 의장국을 담당하면서 그 해 11월만에 열린 북한과 EU의 3차 정치대화가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2001년 말로 예정된 4차 정치대화는 진일보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의장국 성명이 북한과의 정치대화 촉진, 인적교류 확대 등 기존의 수동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난 것도 북한과 EU 및 EU 회원국들과의 수교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대남관계의 변화

북한은 1999년부터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시도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추구해 왔다.

북한의 대남노선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과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대남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남전략을 공산화 혁명전략의 틀 속에서 구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내부경제지원 고갈, 외교적 고립 심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면서 대남전략면에서 과거와 같은 강경일변도의 혁명전략적 성격이 보다 더 유연해 졌다. 즉,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남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지원을 받는 양면적 접근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 전략적 측면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전략을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구사하도록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대남전략 구도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북한

사정이다. 지난 몇 년간 외부경제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당장 크게 도와 줄 나라가 남한밖에 없다는 현실을 절실히 느껴왔다. 여기에 1999년부터 지도부가 국가기능의 정상화에 적극 나섰기 때문에, 식량 외에도 산업자원 조달을 위해서 외부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의구심을 품지 못했던 남한의 포용정책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음모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가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의 체제 안정감 회복도 대남관계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 체제는 1998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0년부터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남북대화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왔다.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했으며, 잣 수교를 한 이탈리아 외무장관조차도 평양을 방문하여 같은 주문을 하였다. 미·일도 협상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서방 기업이나 경제기관들은 대북 진출을 유보하며 남북관계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이 없는 한 그들의 대외관계 확장전략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닫도록 했을 것이다.

다가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갑도 정상회담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2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 60회를 맞이하여 그의 지도영역을 통일분야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강성대국 건설을 선언하거나 그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하게 된 배경은 그들의 대남전략이 과거의 혁명전략에서 생존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들의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전략도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¹⁹⁾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해 나오고 또한 남한과 함께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생존을 위한 전략적 변화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그 동안 북한이 취해온 행태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를 전략적 변화로 파악하든 아니면 전술적 또는 정책적 변화로 이해하든,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대남전략이 냉전시대의 혁명전략으로부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발전이라는 생존전략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인 것도 이러한 북한지도부의 인식 변화를 보여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19) 「연합뉴스」, 2001, 앞의 책 pp.39.

참고문헌

-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 연구』, 1999.11
- 김승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중·러 관계」, 『계간 외교』, 제54호, 2000. 7. 1
- 이종석,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계간 외교』, 제54호, 2000. 7.1
- 진정환, 「북한외교의 변화양상」, 『계간 외교』, 제54호, 2000.7.1
- 김종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1999. 6
- 박두복,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남북한관계」, 『북한학보』, 제20집 북한연구소, 1996
- 세종연구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전략』, 2000. 9
- 양영식 외 4인,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 대한매일신보사, 1999.11
- (주)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2000.10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12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 1999-2000』, 1999.12
- 방완주, 『조선개관』, 평양: 북한백과사전 출판사, 1998
- 북한 노동당규약(1980.10.13 개정)
- 북한사회주의 헌법(1998. 9. 5 수정보충)

IV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박 감 수

(통일교육원 교수)

제 1 절 |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93)

제 2 절 |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99)

제 3 절 | 북한의 군사력 (106)

제 4 절 | 대외군사 관계 (116)

KEY POINT

요점 →

- 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보루이며 통치기반이자 대남면에서는 혁명 무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 북한은 최근의 경제난으로 군병력을 활용하여 발전소 및 교량 건설, 농경지 정리, 관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핵심부대 이외에는 거의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된 경험을 갖고 있다.
- 예비병력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미 '동원된 상태'로서 세계 제1위의 병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군은 초전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동화부대를 중심 깊숙히 고속으로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추가적인 병력증원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갖고 있다.

제1절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과 특징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전문)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군의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별도의 대남 전쟁포기 선언과 평화보장 관련 실천이 없는 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내적으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남 면에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무력수단으로 해석된다.

김일성 주석은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데 있습니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능력을 해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건설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¹⁾

결국 북한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선’을 운운하며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결코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정책 기초는 4대군사노선으로서, 북한개정 헌법은(1998.9.5)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이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이 있음은 앞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수령의 군대’로서 인민군의 성격은 군간부들의 군창건보고대회 보고나 각종 간행물 및 방송논설 등을 통해 계속 강조되고 있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는 김정일 총비서를 국방위원

1)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진방에 대하여」 제하 인민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1964.12.23).

2) 『조국통일』, 1968. 2. 28일자, 인민군 창건기념일(1968. 2. 8)에서의 김일성 연설.

3) 『김일성저작집』(제7권), p.447, “전쟁이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정책의 연장입니다.”

장으로 재추대하였고 국방위원회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서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권한을 보유하고, 동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데에서 나아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시켰다.⁴⁾

여기에서 일체의 무력이라 함은 정규군 117만 명은 물론 교도대 173여만명, 노농적위대 414여만명, 붉은청년근위대 118만 여명 등을 포함한 동원가능 예비병력 748만 명을 총 망라한 무력이며, 전반적 국방관리란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의 군은 '군사력과 외교력의 관계는 현금과 수표와의 관계와 같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략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는 등 군사력을 통한 외교협상과 체제유지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특징은 방어보다는 혁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일관된 공격형 전투서열 유지, 병력통제와 관리를 위한 끊임 없는 정치사상 반복교육, 과도한 지하진지 건설 및 유지 등에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 극복과 공안통치를 위해 상당수의 군병력을 경제건설 현장과 치안유지에 투입하고 있다.

2. 군사전략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기습

4)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동 직책으로 재용립하는 추대사에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해설하였다.

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종심(縱深)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25남침과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 삼아 수립된 단기 속전속결전략은 현대전의 보편화된 특징이지만, 미군의 군사적 능력과 우리의 인적·물적 잠재력 및 현재의 대치상황, 한·미 동맹관계, 연합방위대세 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전략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전·후방 동시공격능력과 고속 종심공격능력, 선제기습타격능력의 제고에 주력함으로써 1980년대 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가 진진배치 등 3개월 이상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계속되는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1) 선제기습전략

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잠재력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통하여 북한 전체인구와 비슷하고, 북한

GNP의 수배가 되는 수도권, 경인지역을 조기 탈취하려고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993년부터 사정거리 50km이상의 170밀리 자주포, 70km이상의 240밀리 방사포를 중서부 전방지역에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70여 개의 비행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했을 뿐 아니라 서울까지 6분 비행거리에 있는 최전방지역에 130여대의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장비의 집중 및 전진배치 동향 등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기습전략을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속전속결전략

단기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별칭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킨미사일의 양산(品産)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이 속전속결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규모가 열세인 반면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적·물적자원이 본격적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 배합전략

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인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 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 두고, 후방에서는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1970년 말경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완성지지가 하달된 데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대통로' (땅굴) 작업을 명령하였는데, 그 이유는 월남패망 사례처럼 땅굴 침투부대와 지하당 세력이 연계되도록 하여 불의의 기습으로 상대측에서 제대로 응전하기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5차 당대회(1970.11.2)에서 행한 김일성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⁵⁾

사실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적으로는 부합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전쟁은 사상교육과 지형만 고려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의 교육수준, 무기의 질, 우발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전쟁 지속역량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자의로 도발할 수도 있으나 결코 뜻대로 종결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체계를 벗어난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실효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1972.9.19 「로동신문」 참조. 『인민군』, 평양: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 1987, pp.43-47.

최근에 들어 북한은 구 소련군이 진차부대의 신속 기동으로 NATO군 방어진지 돌파를 위해 운용하려 하였던 작전기동단(OMG) 개념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하게 원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제2절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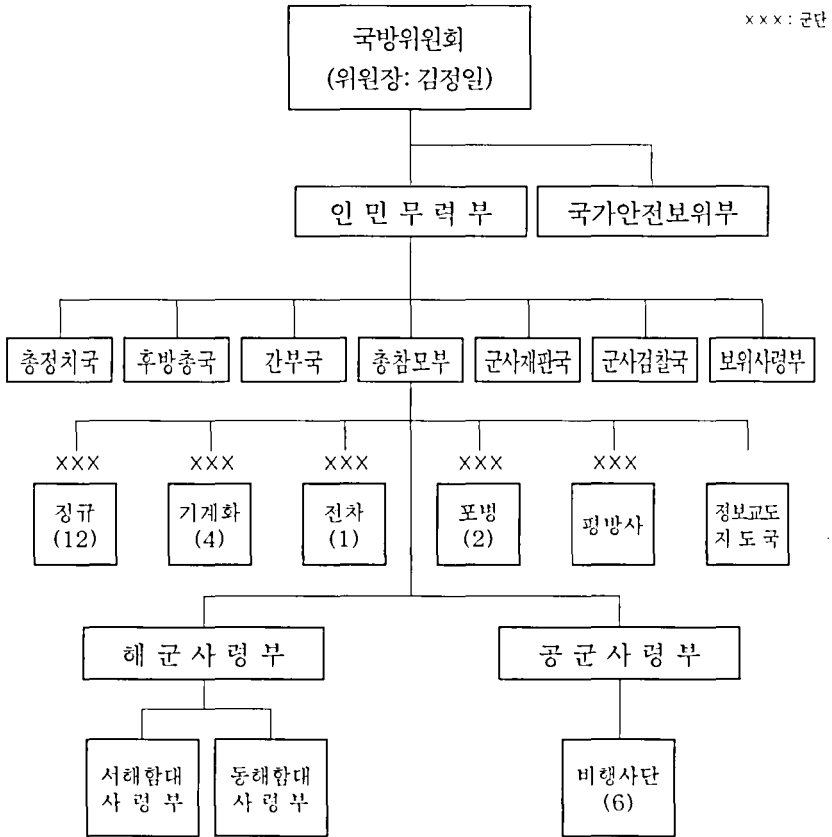
1.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북한 최고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가 실제적인 북한 군사지휘체계의 주축을 이룬다. 북한은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경보교도지도국과 해·공군 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단일군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김정일 총비서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직접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단독 지휘축선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4월에 수정한 제7차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독립, 확대하여 국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석 대신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

장이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나아가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설치나 폐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제2차대전때천황 직속으로 내각을 누르고 전권을 장악했던 일본의 전쟁지도기구인大本營(大本營)을 방불케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장을 위한 회의체 성격이 짙다.

〈표 5-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자료: 국방부편, 『국방백서』, 2000, p38

당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⁶⁾와 각급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당규약 제27조) 이처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 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전시동원 체제의 검토, 민병조직의 관리·운영 및 민병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직접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인민무력부의 구성상 예하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총 참모부와 총 정치국이다. 총 참모부는 군사지휘 계통이며, 총 정치국은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 계통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위사령부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어 이들이 군내의 정치·지도계통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북한에서는 군의 입대여부를 각 행정지역별 군사동원부가 결정한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5세가 되면 군 입대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졸업하는 해에 사단 또는 군단에 현지 입대하게 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역시 졸업하는 해에 입대한다.

6) 1982년 11월이후 당중앙위 군사위원회를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 임무를 군사정책 결정 및 지도에서 군 지휘권까지 부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 통일부, 『2000북한개요』, p. 151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가족 중 친가 6촌,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북무자 등) 등은 물론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생, 부모 고령의 독자 등)들도 정책적 배려를 이유로 입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무연한은 내각결정 148호(1958)에 의거,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7~10년씩 근무하며, 1995년부터 10년 근무연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도 특수부대(경보병 부대, 저격부대 등) 요원은 장기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⁷⁾

1996년 10월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에 따라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까지로 복무가 연장되었다. 군복무를 마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을 배치 받게 되며 직장에서 1~2년 간 근무하고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군기사고로 제대 시에는 직장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군관은 소대장 28세, 중대장 35세, 사단장은 52세로 연령정년제를 두고 있다. 군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본과는 2~3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군관선발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병 중 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자를 중·대대장의 추천으로 최종군단 당위원회 심사에서 확정한다. 임관후 중위진급에는 4~6년이 걸리지만 장성은 최저복무기간 없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진급한다.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⁸⁾

7) 북한에서의 인민군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로 정하지만 이 규정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8) 『김일성 저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518-524.

-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 ② 무기의 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 ④ 당 및 정치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 ⑤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 비밀의 엄숙한 유지
- ⑥ 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 ⑦ 군사정치 훈련에 어김없는 참여
-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 ⑩ 군대 안의 일치단결

복무중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사망시 10~15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긴 휴가는 30일간 받을 수 있는 물자휴가로 고향지역에 가서 특산물을 획득해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대급식에서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영농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3. 단계급 구조 및 당조직

북한 인민군의 계급은 「군사칭호」로 불려지고 있으며 군관(軍官) 15종, 하전사(下戰士) 6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대원수·원수·차수, ② 장성급에 대장·상장·중장·소장, ③ 상급군관에 대좌·상좌·중좌·소좌, ④ 하

급군관에 대위·상위·중위·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의 경우는 ① 하사관에 특무상사·상사·중사·하사, ② 일반병은 상등병·전사로 구분하되 사기진작과 서열 중시를 위해 다시 상급병사·중급병사·초급병사·전사로 4등분하였다.

차수 계급을 신설한 이후 북한군 장성 계급서열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 등 6계급 구조였으나, 1992년 4월 13일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을 이틀 앞두고 김일성 주석을 대원수로 추대하여 7계급 구조로 되었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현재 북한에는 대원수가 없는 상태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데 이어 1992년 4월 20일 군창건 기념 60돌에 즈음하여 '원수'로 전격 추대되었다. 호위사령관 이을설이 인민군 원수임에 비해 공화국 원수로 보다 격상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장성 1,400여명 중 약 1,000여명의 장성을 진급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인민군대 내에는 각급 단위에 당조직이 구성되어 인민군에 대한 정치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에 대해 당의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군대 내 중앙에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 '당위원회', 중·소대 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또한 당위원회와 별도로 군내에 정치기관을 조직해 놓았는데 인민무력부 산하에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있다.

이와 같이 정치기관들은 자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

위원은 군정치조직과 별개로 당비서국에서 직접 파견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군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당원인 군간부의 경우 핵심권력층에 진입하기 어렵다. 또한 인민군대 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는 각급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비당원을 노동당에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군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 당사일치(黨社一致), 상하일치를 강조하고 있다.⁹⁾

인민군대 내에 이와 같이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조직을 갖추고 사상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군의 성격이 영토 및 체재보존 임무보다 통치자와 당의 군대로서 혁명목표와 권력자 보호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9) 관병일치(官兵一致)는 군관과 사병, 당사일치(黨社一致)는 노동당원과 비당원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구 사로청)과의 화합 강조를 의미한다.

제3절

북한의 군사력

1. 상비전력 및 장비

2000년 12월 현재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7만 명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이 같은 병력수는 한국의 총병력 69만 명의 1.7배 규모이다(〈표 5-2〉 참조).

북한의 지상군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2개 포병군단과 야전군급 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전차군단을 포함하여 20개 군단사령부와 특수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지도국으로 편성된다. 사단 및 여단급 부대는 보병 80개 사단 및 여단, 15개의 전차여단, 30여 개의 포병여단, 24개의 기계화여단, 25개 특수전여단 등 총 170여 개 사단 및 여단이 있다.

특히 기계화부대와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하여 10개의 군단, 60여 개의 정규사단 및 여단, 1개의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2개의 포병군단이 평양~원산선 이남의 전방지역에 진진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강습돌파(強襲突破) 위주의 전격전 수행

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지상군부대의 특징은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자주포 포병군단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해 놓았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인 10만여 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는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격시에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기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을 뿐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수배되는 위(偽)진지와 모의 장비를 설치하고 공격시 이용할 갱도 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 구축함으로써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 전차(T-54/55/59 등) 2,750여대가 주종을 이루며 신형 T62 및 경전차 800여대, 구형인 T-34 전차 250여대를 포함하여 총 3,8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전차 보유대수 2,360여대의 약 1.6배 수준이다. 남북한 모두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중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일단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9,300여문(76.2/100/122/132/170밀리 등 다양한 구경)의 곡사 및 평사포와 3,200여문(구경107/122/132/240밀리)의 방사포,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고사포 등 13,800여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T-62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 등은 성능 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구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 가능한 천마호를 생산하고 23밀리 자주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총 990여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전투함의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470여척, 잠수함은 90여척(잠수정 40여척 포함)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함대로 분할되어 동해 570여척, 서해 420여척으로 분리·운영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또 소형함정이 많아 기상악화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원해작전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전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함기습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40여척의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STYX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보유한 90여척의 잠수함으로 남한 전해역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의 은밀한 침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서해와 같이 간만의 차가 심하고 개펄이 많은 곳에서도 목표지역에 기습 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부양정(고속 상륙

정, 시속 50노트 이상) 140여척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이 장비는 5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능력이 있어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공군은 MIG-23/29 등 60여대, 주력기종인 MIG-19/21, IL-28, SU-7/25 등 470여대, MIG-15/17계열 320여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840여대 및 헬기 320여대를 포함하여 총 1,71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의 40%를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MIG-21/23/29 및 SU-7/25기는 현지지에서 발진하면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5/17/19기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5/17기는 구형이나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워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중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공격 및 대지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MIG-29기 신예전투기를 조립 생산 하였고, 19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기 40여대, 러시아로부터 신형 MI-8 헬기를 도입하는 등 항공전력의 질적 보강을 도모하고 있다.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동원대상으로 하여 현재 748만여 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 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5일 내지 30일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공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1988년 4월부터 북한은 예비병력을 능률적으로 통합·지휘하기 위해 중앙당에 민방위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5세까지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행정단위와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고 훈련시간도 연간 50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 병력은 약 173만명이다.

노농적위대는 4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위주(여자 17~30세)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제대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위를 기본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 대원은 약 414만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고등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청년근위대 아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는다.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45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118만 명으로 인원과 훈련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기타 준 군사부대로는 인민보안성 및 안전원, 군수물자를 관리 지원하는 군수동원총국,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 약 43만 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으로서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3. 전략무기 개발 실태

북한은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운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연구소인 '듀브나 핵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는 한편 평성이과대학에 핵물리학과를 설치하여 졸업생을 핵연구단지에 집중 배치해왔다. 현재 북한에는 구소련과 중국 등지에서 연수받고 돌아와 핵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력이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구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힘써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기술을 자체개발로 성공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주기 완성에 주력한 바, 플루토늄 추출능력을 감안하면 초보적인 1-2기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은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1994. 10.21)를 통하여 대북경수로 제공 및 미·북한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1기) 완성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키로 하고 그에 상응하여 흑연감속로 원자로 건설 중단, IAEA사찰 수락 등에 합의하였으며, 그 후 KEDO와의 협상을 통하여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다(1995.12.15).

그러나 1996년 1월 IAEA의 임시 및 일반 사찰 수용을 발표하고도 계속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시료채취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면핵실험금지조약(CTBT)가입도 거부(1997.2.11)하고 유엔 연례핵군축회의(1997.2.25)에도 불참하였다. 이어 2000년 4월 5MW원자로의 폐연료 봉인작업을 완료했으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핵개발 포기에 대한 투명성 보장 여부와 북한의 합의사항이

행 여부는 계속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무기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가리워져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화학무기가 오히려 핵문제보다 '명백' 하고도 '현존' 하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강계, 용성 등 4곳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홍남, 만포, 아오지, 청진 등 8곳에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화생무기 저장시설도 군사분계선 바로 북쪽 왕재봉을 비롯한 6곳에 있으며 전방 연대 급까지 화학소대가 편성되어 있다.

화학무기의 종류로는 수포성·신경성·질식성·혈액성·취루성 등 유독가스 16종 2,500~5,000여톤을 보유하고 있고 생물무기의 종류로는 세균무기인 콜레라·페스트·탄저균·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작용제가 있으며 정주, 문천 등 3개소에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의도를 갖고 미사일 기술 입수에도 주력한 바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적인 생산단계로 발전하였는데, 현재 연간 약 100여기의 스커드 B/C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왔으며 1993년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지대지미사일 노동1호를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사정거리 2,000km~6,700km의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 했는바, 3단계 추진 미사일발사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의 궤도진입 시도에는 실패하였으나 다단계 탄체 분리, 엔진 연소 등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남한 전역은 물론 동경과 북경 등 동북아 주요 지역까지 사정권 내에 들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 5-2〉 남북한의 군사력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지 상군	56만명	69만명	100만명	117만명
		해 군	6.7만명 ⁹⁾		6만명	
		공 군	6.3만명		11만명	
지 상군	부 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49개 ²⁾		67개 ³⁾	
		여 단 ⁴⁾	19개		78개(포병30여개 여단 제외)	
	장 비	진 차	2,360여대		3,800여대	
		강갑차	2,400여대		2,300여대	
		야 포 ⁵⁾	5,180여문		12,500여문	
		헬 기	600여대			
해 군	수상 전투함	160여척		430여척		
	지 원 함	20여척		470여척 ⁶⁾		
	잠수함(정)	10여척		90여척 ⁷⁾		
	항 공 기	70여대		870여대		
공 군	진 투 기	540여대				
	특 수 기	40여대				
	지 원 기	230여대		840여대 ⁸⁾		
예비 전력(병력)		304만여명 ⁹⁾			748만여명 ¹⁰⁾	

자료 : 『국방백서, 2000.』

- 주) 1) 해병대를 해군에 포함
 2) 해병대 사단 포함
 3) 미사일 사단(1) 포함
 4) 보병, 기보, 진차, 특수진, 경비, 해병, 강습 등 기동/진투여단 포함 (진투지원/진투근무지원 여단 제외)
 5) 야포는 로켓, 유도무기, 다련장, 방사포 포함
 6) 해상경비정대 소속 해상경비정 170여척 포함
 7) 잠수정 40여척 포함
 8) 북한의 항공기(헬기)는 공군에서 통합 운용
 9)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10) 교도대, 노동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보안성 요원 포함

4. 최근 군사 동향

북한은 1990년 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세계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인식하고 군사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시한부 전쟁준비를 추진한 바 있는 북한은 그 후 계속 군사시설의 지하갱도 보강을 통해 중요 군수산업시설(180여 개소)에 대해서도 전시의 지속적인 생산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예비물자를 계속 비축하는 등 독자적인 전쟁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은 초급지휘관을 미혼자로 전면 교체하고 고급지휘관을 연소한 자들로 충원하였으며 199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형을 선정하여 사단 및 군단급 부대의 공격훈련을 강화했고 1996년에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군기사고 및 탈영 방지를 위해 정치학습과 군사규율 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1997년에는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기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 훈련을 강화하고 해·공군 전문훈련을 대폭 증가시켰으며 1998년 3월에는 민·관·군 통합 국가급 전시전환훈련을 목적으로 공개리에 전시동원령을 선포하는가 하면, 그 후에는 자원절약형 및 도상 훈련을 강화하면서도 부주(浮舟)를 장착한 AN-2기의 수상이착륙훈련을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대구경 야포와 다단계 로켓발사대를 비무장지대 인근 지하시설에 대규모로 배치하는 등 전 분야에서의 전시대비태세와 훈련상태를 점검하여 왔다.

2000년 2월 26일에는 평양체육관에서 5년 만에 다시 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

를 개최하여 김일성 부자의 녹음 교시로 듣고 충성을 다짐하였고 그 후 3월에는 기존 휴전협정을 무시하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보도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한 바 있고, 6월에는 극심한 에너지난 가운데에서도 대규모 하게 기계화 기동 훈련을 실시하였다.¹⁰⁾

남북정상회담이후 전선전역에 대남 비방 방송이 대폭 감소된 반면 부대내의 정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하고 훈련 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점도 특징적이다.

10) 2000년 4월 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는 군사비를 29억 5,877만 원(미화13억 6천만 달러)으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 158억 불의 30%(47.8억 불)로 추정되고 있다.

제4절

대외 군사관계

제2차 대전후 강대국들의 음모와 스탈린과 김일성의 공모, 모택동의 지원 약속 하에 발발한 대리전 성격의 6·25 전쟁 결과 북한은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소실하였고 전후 한동안 피폐한 북한의 산업복구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은 다시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는 바, 1961년 7월 6일에는 김일성 수상이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7월 11일에는 북경을 방문하여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중 조약은 체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방도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익을 제기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조·소 조약의 경우 러시아는 소연방 소멸 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연방 공화국 대통령특사가 방북하여 자동개입조항인 제1조(피침시 군사 등 즉각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1995년 9월 7일 동조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였으며, 그 후 1996년 9월 10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 후 199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 개입 및 지원” 대신 러시아와 몽골, 베트남과의 우호관계 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 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조약을 가 조인한 후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으로 정식 서명되었다.

이밖에도 북한은 1982년 11월 카다피 리비아의 원수가 평양을 방북하였을 때 「조선·리비아 우호협력동맹」을 체결하여 쌍방은 군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군사자료·군사전문가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을 합의하였으며, 1986년 3월 쿠바 수상 카스트로의 방북 시에도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역시 정치·경제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비동맹 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목적도 있으나 중동과 아프리카, 중미지역과의 군사유대는 무기판매, 군사기술지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외교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바, 양측은 1971년 8월에 체결한 군사교류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2~3회의 군사 대표단을 상호 교환 방문토록 하고 있다. 200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의 6.25 전쟁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츠하오티엔 국방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였을 때, 환영식에는 당·정·군 간부들이 모두 참가하여 군간부들만 참가하였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일행 환영행사와 대조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세계안보정세종합분석(1999-2000)』(상·하), 2000.
국방부, 『국방백서』: 1998, 1999, 2000.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통일부, 1998.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6권 4호, 2000.
송대성 외, 『평화체제 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세종연구소, 2000.
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2000.
육성소 외, 『북한군의 동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유석렬, 『북한체제 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1997.
이동욱 외, 『북한의 군사전략』, 평화토론회, 1998.
이춘근, 『북한핵의 문제』, 세종연구소, 1995.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판북원, 1999.
정영태,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역할: 지속과 변화』, 1995.
조지연, 『통일과 강한군대』, 행집출판사, 1997.
통일부, 『북한개요』: 1999, 2000.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법문사, 1998.
인민무력부, 『인민군』, 평양:조선인민군 군사출판사, 1987.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V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 전망

권 영 경

(통일교육원 교수)

-
- 제 1 절 |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121)
제 2 절 |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26)
제 3 절 |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143)
제 4 절 | 북한의 경제회복전략과 북한경제의 전망 (154)

KEY POINT

요점 →

- 북한은 그동안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중화학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 군사·경제병진 전략 등 3대 발전 전략하에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등으로 인한 대외경제관계 단절로 9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겪었으며, 그 결과 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 북한 경제는 1999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자력에 의한 경제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 북한은 최근 경제회복을 위해 5대 선차부문 우선 전략, IT산업 육성을 통한 추격발전전략을 추진함과 아울러 해외자본 도입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도 모색 중이다.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최우선적인 경제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이었다. 자립적 민족경제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며 자체의 특정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¹⁾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은 경제발전론적 시각에서 볼 때 대내지향적·수입대체적 발전전략이다. 북한은 국민경제의 완전자립성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에서 대외무역관계를 전개하고 그것도 대부분 구소련 및 중국과 이루어지는

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3권) p.79~80.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하였다. 수출은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운동을 벌이고,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원자재 국내조달비율을 60%에서 70%로 끌어 올리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²⁾ 그 결과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10% 내외에 머물러 1970년대 세계 석유위기와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자립경제발전노선은 북한경제를 국제분업질서로부터 유리시켜 '폐쇄경제' (closed economy)형으로 만들고,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체질을 갖추게 하였다. 즉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라는 국제경제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자립경제의 구축을 위해 동시에 추진된 중공업 우선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북한과 같은 후진경제가 비교적 쉽게 외화기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재공업 부문의 낙후도 가져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경제발전 과정 초기에 빠른 공업화를 달성하고 일시적으로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을지 모르나,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 및 국제분업의 이익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북한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1969년 당시 한때 기계·설비의 북한내 국내자금율은 98.2%에 달했다고 한다. 『현대북한경제입문』, 1993, 대동, p.126.

2.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자립적 민족경제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의 중심은 중공업의 선차적 발전에 있다.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여야 자립적 공업체계를 확립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도 실현할 수 있다”³⁾ 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업 우선주의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의 선차적 발전을 통해 생산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경제정책 집행과정에서 중공업 우선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북한이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은 구 소련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구 소련은 많은 논쟁을 통하여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이 중앙집권적 사회주의계획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 북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핵심이 되는 생산수단을 공급하는 중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재정투자지출 중 70% 이상을 중공업 부문에 편중 지출하였다.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북한의 산업구조는 급속히 중공업 부문 편중

3) 『경제사건(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15~716.

4) 구 소련은 192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NEP)’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공업화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당파간 논쟁을 벌였으나, 당시 펠드만(G. Feldman)이 제기한 중공업우선주의 노선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이후 후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성장 모델로 진화되어 나갔다. A. Nove,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1992 참조

구조로 재편되어 나갔다. 공업부문이 전체 사회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6년에는 23.2%에 불과했으나, 1949년에는 35.6%, 1964년에는 62.3% 그리고 1998년에는 67.0% 수준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구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빠른 시일 내에 공업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단기적으로도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공업총생산 증가율은 계획기간별로 볼 때 제1차 5개년 계획기간(1957~1961)과 제1차 7개년 계획기간(1961~1967)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차츰 둔화되어 가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시키는 데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농업과의 연계성 부족과 시장확대의 제약 등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선택한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투입물(input)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높은 자본축적을 이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투입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보다 양적 투입량 증대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경제성장전략이다. 그러나 양적인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이란 어느 일정 단계를 지나면 한계에 봉착하므로, 북한의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은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 군사·경제 병진노선

북한은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을 군수산업 육성과 결합시켜 동시적으로 추진해 왔다. 원래 구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쟁 과정에서 군사력 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 확보를 절대시하였으며, 이를 경제성장전략과

연결하여 추진했었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군사·경제 병진 노선은 196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이 노선이 채택되면서 이후 북한 예산에서의 군사비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⁵⁾ 북한의 산업은 '군산복합형'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특히 중화학공업이 기계,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에 계열화됨으로써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은 민수산업을 관리하는 제1경제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함으로써, 북한경제 구조를 제1경제(민간경제)와 제2경제(군수경제)로 단절되는 구조로 만들었다. 산업생산에서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⁶⁾ 이로 인해 북한 경제성장에 커다란 제약이 가해졌다고 보고 있다.

5) 1966년까지만 해도 북한 예산에서 군사비의 비중은 약 10% 정도였으나, 1967년~1971년 간에는 30% 이상 증액되었다. 1972년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데탕트 추세와 남북대화의 시적으로 14~17% 사이로 편성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예산에 은폐되어 축소 발표되고 있다. 많은 전문 연구기관들은 북한 예산에서의 실제적인 군사비 비중은 25~30%인 것으로 보고 있다.

6) 중국 심양군구 소속 87027부대의 한페이스(韓佩石) 연구원은, 2000년 겨울호 『동북아연구』에서 '제2경제위원회 산하 북한의 군수산업에는 130여 개의 군수기업, 60여 개의 병기수리 및 부속품 제조창, 100여 개의 민수품공장 등이 있으며 산업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4-1〉을 보면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1990년대 이전에는 평균 25% 내외를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31.4%까지 상승하는 반면, 광공업부문 비중은 한 때 60% 이상까지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25.6%까지 떨어져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역행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⁷⁾ 최근 농림수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광공업부문 비중이 낮아진 것은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래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3차 산업부문은 서비스부문을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는 북한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그 비중이 별로 높지 않았다. 최근 이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상업, 유통, 금융, 보험, 서비스부문 등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대형수력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 건설부문에서의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화학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전략 및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북한의 공업 구조에 중화학공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공업구조의 고도화' 현상도 가져왔다.

중공업 대 경공업 비율이 거의 3:1로 나타나는 북한의 '공업구조 고도화' 현상은 현재의 남한과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첫째, 총국민생산액 중 농업생산액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둘째 심각한 산업불균형의 진행과 더불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 및 군사·경제 병진노선에 의해 경공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공업구조 고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경공업 부문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설비시설 규모가 큰 중화학공업부문의 정상화는 애로를 보이는 한편, 폐자재 및 내부자재를 활용하는 8.3인민소비품 생산 및 지방경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북한은 본래 사회총생산을 체계함에 있어서 농업, 공업, 건설, 화물운송, 생산적 체신, 생산적 상업 등 6개 부문으로 나누고 전기·가스·수도 부문을 공업생산액에 편입하고 서비스부문을 추계하지 않는데, 북한의 추계 방법에 따른 1990년도 광공업부문 비중은 총사회적 생산의 45.3%이었다.

〈표 4-2〉 북한의 공업구조 추이

(단위:%)

부 문	1956	1965	1975	1980	1990	1995	1999
중 공 업	52.4	51.2	63.7	64.8	74.1	69.8	66.7
경 공 업	47.6	48.8	36.3	35.2	25.9	30.2	33.3

자료: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2)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민총생산에 관한 총량 경제지표로서 '사회 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⁸⁾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정보·군사분야 연구기관 등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총 GNI와 1인당 GNI를 추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발표하고 있는데, 그 추이는 다음 〈표 4-3〉과 같다.

1999년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158억 달러로서 남한의 약 1/26 수준이다. 그리고 1인당 GNI는 714달러로서 1/12에 불과하다. 북한경제는 본래 1970년대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속도

8) 북한에 따르면 사회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그리고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그 래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 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754) 그러므로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4-3〉 북한의 국민소득 추이

(단위:억 달러, 달러,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명 목 G N I										
북 한 (A)	231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58
남 한 (B)	2,523	2,949	3,143	3,452	4,017	4,881	5,183	4,740	3,168	4,021
(A) / (B)	10.9	12.9	14.9	16.8	18.9	21.9	24.2	26.8	25.1	25.5
1인당GNI										
북 한 (A)	1,142	1,115	1,013	969	992	1,034	989	811	573	714
남 한 (B)	5,886	6,810	7,183	7,811	8,998	10,823	11,380	10,307	6,742	8,581
(B) / (A)	5.2	6.1	7.1	8.1	9.1	10.5	11.5	12.7	11.9	12.0
경제성장률										
북 한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남 한	9.0	9.2	5.4	5.5	8.3	8.9	6.8	5.0	-6.7	10.7

자료: 한국은행

진과 같은 김정일식 경제정책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에 의한 경제의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저성장, 경제침체의 길로 들어섰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대외경제관계 단절로 1998년도까지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997년에 저점을 통과한 후 1998년도에는 전년 대비 +5.7% 성장 그리고 1999년도 이후에는 드디어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정식 출범에 따른 체제안정화와 더불어 1998년도 이후 대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무상원조, 금강산관광사업에 따른 외화의 유입 등이 일부 공장가동의 정상화를 초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재정규모

북한 재정의 중요한 기능은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제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재정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총 GNI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외에 운영자금까지 부담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적 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정보고' 라는 형식으로 내각의 재정상(장관)이 전년도 및 당해 년도 국가예산규모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1994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1994년도 예산규모를 발표한 이래 5년간 재정 상황을 발표하지 않다가, 1999년 4월 8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재정규모를 공개하고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 북한의 재정규모는 93.1억 달러이고 1999년도 예산규모는 93.9억 달러(결산은 92.2억 달러)로서 재정규모가 191.9억 달러였던 1994년도이래 1997년도까지 연평균 21.9%씩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4-4〉를 보면 1998년도 재정규모는 1994년도에 비해 5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난에 따라 국가재정활동이 축소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규모 축소는 곧바로 자본투자 위축으로 연결되어 지난 9년 간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0년도 북한의 재정 예산은 미화로 93.6억 달러로서 전년도 결산규모보다 약 1.5% 높게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재정규모는 남한의 약 1/8 규모이지만 남

〈표4-4〉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연 도	달러표시(억 달러)	원화표시(억원)	대미환율(원)
1998	143.9	316.6	2.20
1990	163.7	355.2	2.17
1992	185	394	2.13
1993	187	402	2.15
1994	191.9	414.4215	2.16
1995	(157.8)	(323.4974)	2.05
1996	(118.0)	(252.5220)	2.14
1997	91.3	197.1195	2.16
1998	93.1	200.1521	2.15
1999	92.2	200.1821	2.17
2000	93.6	204.532	2.18

주 : 1) 1995, 1996년 수치는 1994년 이후 연평균 감소율 -21.9%에 의거한 추정치이고 1997년 통계는 한국은행 추정 결과.

2) 1999년도는 결산규모이고 2000년도는 예산규모임.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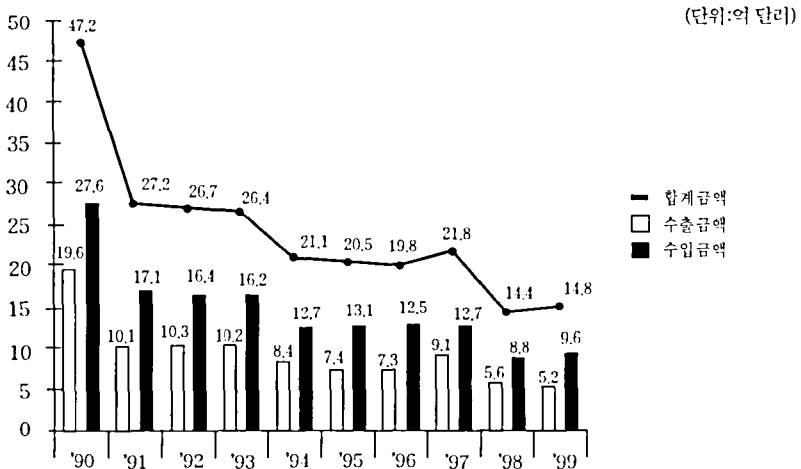
북한 대비 GNI비율 1/26에 비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예컨대 남한의 경우 1999년 기준 총 GNI 대비 재정규모 비율은 19.1%이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59.2%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 재정을 보면, 경제회복을 위한 이른바 5대 선차부문, 즉 전력, 농업, 석탄, 금속, 철도·운송 부문과 과학기술부문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증가 추세에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4) 무역규모

북한의 무역규모는 1960년 3.1억 달러, 1970년 7.4억 달러, 1980년 34.5억 달러,

1988년 52.4억 달러로 198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 중단되거나 급락하면서 1999년 14.8억 달러, 즉 20억 달러 이하까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그림 4-1)와 같다.

〈그림 4-1〉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0.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처음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였다. 1990년 25.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과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된 1991년도에 전년 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4.6억 달러로 줄어들고,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9년 5천여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표 4-5〉 참조)

〈표4-5〉 북한의 구소련·중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구 소 련 (러시아)	총무역	24.7	4.6	3.2	3.5	1.5	0.8	0.6	0.84	0.65	0.50
	수 출	10.5	1.8	0.7	0.5	0.4	0.1	0.2	0.17	0.57	0.01
	수 입	15.2	2.8	2.5	2.9	1.1	0.6	0.4	0.67	0.08	0.49
중 국	총무역	-	-	6.9	9.0	6.2	5.4	5.6	6.5	4.1	3.7
	수 출	-	-	1.5	2.9	1.9	0.6	0.6	1.2	3.5	0.4
	수 입	-	-	5.4	6.0	4.2	4.8	4.9	5.3	0.57	3.3

자료: 중국 「해관통계」, 각년호 및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구소련은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 기초 원자재의 주된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장·단기 경제협정을 통하여 북한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의 부진은 단순한 무역감소 이상의 충격을 북한 경제에 미쳤다.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1990년대 초반에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1993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교역은 9억 달러로 전년대비 28.6%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당시 북한 원유 도입량의 77.2%, 곡물도입량의 68%를 공급하고 있어서 구소련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 교역물자의 부족으로 1994년도부터 대중국 교역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도에는 3.7억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중국은 1996년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서 북한이 도입하는 식량, 원유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말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은 14억 7,954만 달러로 1998년에 비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 추세는 2000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다. 즉

2000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8억 4,929만 달러로 전년비 27.4%나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경제회복 조짐으로 인해 식량, 에너지 자원의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장가동 정상화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수입 및 임가공제품의 수출 증가로 대외무역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추세를 살펴보면 이러한 회복조짐과 더불어 무역상대국의 비중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 일본에 2/3 가까이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은 1위의 수입대상국, 일본은 1위의 수출대상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도부터는 대중국 교역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대신 인도,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들의 교역 및 남북경협 비중이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⁹⁾ 특히 남북경협은 민족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 편입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만일 같이 가산할 경우 2000년도에는 그동안 3위에서 2위로 격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⁰⁾ 이로 인해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일본으로부터 남한으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최근 북한의 무역회복 추세는 무역다변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과 남북경협 활성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보다 상세한 내용은 KOTRA, 「2000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특징」, 『북한뉴스레터』 2000년 11월호 참조.

10) 2000년 12월말 현재 남북교역은 4억 2,500여만 달러로 사상 최대이다. 현재 시점에서 대중국, 대일본 교역액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2000년 11월 말음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을 살펴보면, 대중국 교역이 4억 3,882만 달러, 대일본 교역이 3억 8,499만 달러, 남북교역이 3억 9,976만 달러로서 남북교역이 제2위의 비중을 차지한다.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북한의 경제난은 모든 공급경제 부문에서 동시적으로 애로 현상이 발생한 정도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 (Shortage of Supply)' 현상이다. 경제난의 형태는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구체적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량난

농촌진흥청의 북한 곡물생산 추정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다음 <표 4-6>에서 보듯이 1992년 427만 톤 규모였으나, 매년 감소되어 큰 흉수가 있었던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345만 톤과 369만톤 생산에 그쳤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자연재해로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식량문제는 농업생산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대에 북한은 식량생산량이 연평균 약 415만 톤 정도에 불과하여 이미 정량 배급기준으로도 평균 200여만톤 정도의 부족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1인당 배급량을 22% 줄이고 부족 식량의 대부분을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문제'가 전면에서 부각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제지원 단절, 농업관련물자 도입과 기술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북한의 식량생산은 400만톤 이하로 격감하기 시작했다. 이는 본격적인 자연재해가 없었

던 1990년도에 이미 1989년 대비 쌀 생산량이 32.5%, 옥수수는 27.3%나 감소하고 있었던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식량감소 현상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북한식 농정'의 실패, 사회주의식 집단영농 생산방식의 모순 등이 누적된 결과도 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1999년도 식량생산량이 422만 톤으로서 잠시 400만 톤대를 회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00년도 식량생산량은 359만 톤으로 다시 300만 톤대로 감소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문제'는 당분간 구조적인 문제로 진행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이렇게 '식량문제'가 구조적으로 진행되자 국제사회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절대 식량부족량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소 조짐은 북한 스스로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계속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4-6〉 연도별 북한식량 부족량 및 외부도입량

(단위:만톤)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 요 량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1	518
생 산 량	443	427	388	413	345	369	319	389	422
부 족 량	133	142	188	167	233	214	192	162	96
도 입 량	83	109	49	96	105	163	104	107	
절대부족량	50	33	139	71	128	51	88	55	-

주: 1) 생산량은 전년도 수치 2) 도입량은 자체 수입량 및 외부지원량
 자료: 통일부

최근 북한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첫째, 1996년부터 농업관리방식인 분조관리제를 일부 개선하여 협동농장의 20명 단위 분조를 7명 단위로 축소하고, 할당생산량을 축소하여 잉여농산물을 개인적으로 장마당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일부 협동농장에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거나 협동농장 지배인을 농민들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UNDP가 세운 「북한농업 재건계획」하에 약 10여만 정보가 넘는 경작지에 서 이모작을 실시하거나 '옥수수사이그루재배법'을 도입하여 그간의 식량 위주 단 작체계를 수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1999년도부터는 '적기작작' (適期適作) 및 '적지작작' (適地適作)을 강조하며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강조해 왔던 주체농법에 대한 개선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자농사혁명'을 강조하여 옥수수 경작으로 인해 지력이 고갈된 밭작물 대체작업도 벌이고 있다.¹¹⁾

셋째, 강원도(3만 정보), 평안북도(5만 5,000정보), 황해남도(10만 정보 계획) 순서로 대대적으로 토지정리사업을 벌이며 경지규모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밖에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양어사업,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 운동',¹²⁾ 타조가금사업 등 축산업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집단영농방식의 기본 체계를 그대로 놔둔 채 기술적 차원에서만 내려지는 개선조치이기 때문에 식량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영농방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달리 해결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 FAO, WFP에 따르면 북한의 감자 경작규모는 1998년 4만 8천 정보, 1999년 17만 정보, 2000년 약 20만 보, 2001년도에는 40만 정보까지 늘릴 추세라고 한다. 만일 감자경작지가 40만 정보까지 증대된다. 북한 전체 경작지의 약 1/6이 감자 경작지로 전환된 되는 것이 된다.

12) 2001. 1. 20 일자 로동신문에 따르면 2000년도말 현재 북한에는 입소 30만여 마리, 토끼 359만여 마리가 증가하고 7만 7천여정보의 풀밭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2) 에너지난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7 참조). 북한의 공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인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공급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생산력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주요 원인이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구조가 일반적으로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석탄의존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립경제 노선에 따라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 석탄 중심의 에너지공업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채탄장비의 노후화, 탄광의 심부화, 신규설비의 미도입, 자재의 공급애로 등으로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석탄생산량의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경제권이 붕괴하자 1990년 당시 벌써 석탄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23.4%나 감소하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9년 현재 석탄생산량은 1989년 대비 40.1%나 감소한 2,100만 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4-7)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만톤, %)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석 탄	3,508	3,315	3,100	2,920	2,710	2,540	2,370	2,100	2,060	1,860	2,10
	6.3	-23.4	-6.4	-5.8	-7.2	-6.3	-6.7	-11.4	-1.9	-9.7	12.9
원유도입	-	252	189	152	136	91	110	94	50.6	50	31.7
	-	-	-25.0	-19.5	-10.5	-33.0	20.8	-14.6	-46.2	-1.2	-36.6
발전량	294	277	263	247	221	231	230	213	193	170	185.7
	4.2	4.2	-5.0	-6.1	-10.5	4.5	-0.4	-7.4	-9.4	-11.9	9.2

주: 통일부, 한국은행

전력생산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북한의 전력생산구조가 수력 대 화력의 비율이 6:4로 수력의 비중이 높지만,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석탄 화력발전소로 석탄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데 있다. 여기에 저열탄의 대량사용으로 화력발전소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력발전소의 경우, 상당 부분 일제시대나 1950~1960년대에 구소련과의 경제협력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서 발전효율이 낮고 고장도 잦은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댐의 담수율도 낮아 정상적인 전력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1999년 현재 발전량은 185.7억 kw/h로서 1989년도에 비해 36.8%나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발전능력의 25%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북한은 1998년도 이후 “전기문제가 풀려야 쌀도 나오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며 전력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즉 연제(그을음), 벗겨와 같은 대체연료의 개발이나 자체 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예컨대 조수력이나 풍력, 낙차(落差)를 이용한 중소형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대형 수력·화력발전소 건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발전소는 산업경제 정상화에 필요한 전력난 해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최근 준공되고 있는 안변청년2호수력발전소나 태천화력발전소는 강우량이 일정하지 않고 석탄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완전한 가동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의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겠다.

한편, 원유도입의 급격한 감소도 에너지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의 원유도입량은 1990년에 252만 톤이었으나 구소련으로부터 도입이 대폭 감소·중단됨으로써 1999년도에는 1990년 대비 무려 87.4%나 하락한 31.7만톤만 도입되고 있다. (<표4-7> 참조) 최근 북한은 원유 도입을 전적으로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화가득 애로가 타개되지 않는 한 북한의 원유부족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원자재난

북한 산업시설의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은 원부자재의 부족이다. 원부자재의 부족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있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금속, 비료 등 원부자재 생산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전·후방 산업연관관계의 단절이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재난은 몇 가지 주요 원자재 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표 4-8>을 보면, 철광석의 경우 1991년 대비 1999년도에 53.6%, 비철금속의 경우 48.5%, 강철의 경우 60.8%, 시멘트의 경우 20.7%, 비료의 경우 28.8%나 그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역시 마찬가지로 1999년도부터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외화가득의 문제, 에너지부족 문제 등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자재 부족 애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시설들 대부분이 구소련의 프로젝트 하에 건설된 이후 보수 및 대체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설비들이 신투자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13) 북한은 1997년부터 러시아와 과거 소련의 지원 하에 만들어진 산업설비들을 보수하는 프로젝트를 20여 개 추진 중이라고 한다.

〈표4-8〉 북한의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단위:만톤)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철 광 석	816.8	574.6	476.3	458.6	422.1	341.0	291.0	289.0	378.6
비철금석	22.7	17.8	16.4	16.0	15.4	11.6	10.8	9.7	11.7
강 철	316.8	179.3	185.9	172.8	153.4	120.8	101.6	91.5	121.3
시멘트	516.9	474.7	398.0	433.0	422.0	379.0	331.0	315.0	410.0
비료	108.1	104.3	121.2	99.3	91.0	72.1	58.0	52.7	77.0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NP 추정결과」, 각년도.

(4) 외화난

외화난도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내부저축의 부족과 고갈이 발생하면 해외저축을 통해 부족한 투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외채상환불능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자립경제노선으로 외화가득 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이 해외저축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직후부터였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무상원조 12.8억 달러, 유상원조 34.7억 달러 등 총 47.5억 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전후 경제복구, 군사력증강, 사회주의적 경제개발 등에 투자했었다. 이 중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0.4억 달러는 60년대 이전에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유·무상으로 들여온 것이었다.¹⁴⁾

그러나 이 당시 서구 자본주의국가로부터 들여온 외채는 1970년대 후반 외채상환

14) 통일부, 『2000 북한개요』, 2000, p.385.

불능사태가 발생하면서, 1999년 현재 그 규모가 123억 달러에 이르러 명목 GNI의 77.8%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표 4-9〉 북한의 외채규모 추이

(단위:억 달러,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외 채	78.6	92.8	97.2	103.2	106.6	118.3	120.0	119.0	121.0	123.0
외채/명목GNI	34.0	40.5	46.0	50.3	50.3	53.0	56.1	67.2	96.8	77.8

자료: 한국은행

따라서 북한이 해외저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외채상환불능 상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국가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995년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신용도는 조사대상 170개 국가중 167위였고, 1996년 「유로-머니(Euro-Money)」지에 의하면 178개 국가 중 176위로 평가되어 있다.

제3절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 과정과 과제

1. 대외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해나가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외경제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다.¹⁵⁾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이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15) 북한이 1960년도까지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받은 제정원조는 총 17억 6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2억 7,800만 달러가 무상으로(75%), 4억 2,800만 달러가 유상으로(25%)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 원조의 45%는 소련이 30%는 중국, 그리고 나머지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담당하였다 한다.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대외무역정책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1998, p.24.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가 줄어들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건설에 따라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현실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 당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외무역을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위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 그리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 정도로만 인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간의 등거리 외교에 의해 필요한 경제원조를 얻으려는 정책이 중·소 분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국의 문화혁명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상원조도 중단되면서 사회주의국가 일변도의 대외경제교류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내포적 공업화' (Intensive Industrialization) 추진을 위해 보다 선진적인 자본설비 및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방국가와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되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북한은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서방 선진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비사회주의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경제거래로서 비계획경제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다음 3단계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1)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북한은 1971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6개년 경제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했었다. 이 계획은 1961년~1967년 중 추진된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으로 '사회주의공업국'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다 내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공업과 국방산업 발전, 특히 기술혁명과 산업설비의 근대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 북한은 본래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기대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의도한 만큼의 원조가 어려워지자 대외경제관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즉 서방국가로부터 기술 및 대규모 설비 플랜트 등을 차관 형식으로 도입하는 제1차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해나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다음 <표 4-10>에서 보듯이 1960년대에 비해 1970년대 상반기 소련보다 서방선진국가로부터 압도적인 차관도입 실적을 보이게 되었으며, 무역구성비 또한 1971년 공산권 80%, 비공산권 20%에서 74년 공산권 40%, 비공산권 60%로 역전되어 나타났다.

<표 4-10> 북한의 국가별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실적(1961~1976년)

(단위: 만달러)

년 도	소 련		중 국		기타 사회주의국		OECDR국		합 계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무상원조	차 관	
1966~1969	-	19,668 (58.4%)	-	10,500 (31.2%)	-	3,500	-	-	33,668
1970~1976	-	90,600 (41.5%)	-	160	-	-	-	124,200 (57.8%)	214,960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 통계집』, 1986.

그러나 1972년 불어닥친 석유위기로 북한이 수입하는 원자재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등 수출가격은 감소함에 따라 75년부터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76년부터 25억 달러라는 누적채무 문제와 아울러 '채무불이행' (Default)¹⁶⁾이라는 사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1980년대 들어 오면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피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합영법의 제정이었다.

(2) 합영법의 제정과 합영사업의 실시

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10호 결정으로 '합영법'을 공포하여 대외경제 교류형태로 단순한 물자교역 형태외에 합작경영, 기술협력 등 새로운 범주를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북한이 이렇게 차관도입정책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첫째, 차관도입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외채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둘째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술도입도 용이하게 하여 외화기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 셋째 중국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장점에 주목하게 된 점, 넷째 합영사업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지 않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통제 하에서도 관리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남한의 적극적인 대외지향정책으로 1980년대 들어와 무역규모 및 경제력 면에서 남한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에 자극 받은 점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6) 북한의 채무불이행은 1976년 일본에 채무상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은 1976년, 1979년, 1983년 세 차례에 걸쳐 약 800억 엔에 이르는 채무상환을 연기에 주었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했던 서방국가로부터의 합영사업 유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의 대외신용도 추락과 무역대금 미결제 문제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유일하게 프랑스와 합영사업 제1호로 체결되었던 양각도호텔 건설사업도 북한측의 무리한 요구로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북한은 조총련기업들과의 합영사업에 역점을 두게 되는데, 조총련기업들과의 합영사업은 1986년 소위 김일성 주석의 '2.28교시'에 의해 1992년까지 활발하게 추진되어 나갔다. 합영법에 의한 조·조 합영기업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약 100여 개 정도이고 건당 평균 투자액이 약 100만 달러로서 거의 2/3기업들이 주로 1차산업과 경공업, 식당·상점 등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그리고 현재 조업중인 기업은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결국 1980년대 합영법제정과 합영사업 실시는 '조·조합영'의 형태로 그치고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북한이 조총련기업들과의 합영사업을 일종의 '애국공장'¹⁹⁾ 사업으로 여기고, 기타 국가들과의 합영사업의 경우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기업관리방식과의 충돌, 합영사업 공장을 독자적인 사업단위로 여기지 않고 국가 계획생산활동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당국의 행위 등등 한마디로 계획경제시스템 속에서 합영사업을 관리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도 때문이었다.

17) 조·조 합영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아카데미, 2000 참조.

18)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 모란봉 합영회사의 경영자였던 진진식씨는 이미 1993년 12월 일본 T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 가동중인 합영회사가 20개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19) '애국공장'이란 김일성·김정일부자 생일기념 축하사업, 조국경제건설에의 공헌, 충성의 모금운동이란 각종의 명분하에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조총련에 의해 헌납된 애국리면공장, 애국병제조공장, 애국맥주제조공장 등을 말한다. 조총련이 북한에 기증한 이 공장 수는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합영사업의 실시는 북한이 국제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외경제관계의 다각화·다양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 추진되는 신무역정책의 토대가 되었지만,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의 보완적 요소로만 여기고 해외자본이 유입된 경제단위를 계획경제시스템의 한 요소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자본의 충당에 구소련 및 중국이 아직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한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우호무역'이 사라지고 대외적으로 고립되면서 북한의 이러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위기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형태의 외자유치정책, 즉 1980년대 합영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북한은 그 대안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은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 7월부터 냉전 후 동북아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의 하나로서, 두만강유역의 3개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국가간에 '두만강개발계획'(UNDP 프로젝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경제특구정책의 커다란 성공으로 두 번째 개혁·개방 단계로 진입하려는 중국의 사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 10월 당시 정무원 총리였던 연형묵이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천, 주해, 천진, 광주 등을 시찰한 후 1991년 12월 함경북도 최북단인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선포하였다.

북한이 1995년, 2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수정해 놓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나진·선봉을 2001년~2010년까지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중개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공업부문 약 36억 달러, 인프라부문 약 9억 달러, 서비스부문 약 1억 달러 등 총투자건수 119개에 47억여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²⁰⁾ 1996년 9월과 199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포럼을 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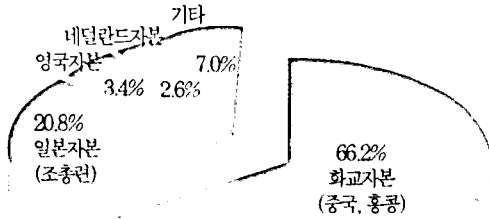
그러나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 불안정, 기초 인프라의 부족, 남한 기업 참여의 배제 등 요인으로 인해 1999년 3월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총 111건에 7억 5,077만 달러의 계약 체결과 1억 4천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²¹⁾ 그나마도 대부분 호텔, 식당, 운수·상업 등 서비스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화교자본이 거의 2/3정도, 일본자본 그것도 조총련자본이 약 20% 정도로 서방 선진국 자본의 투자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이러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필요성을 현실화하여 직접 실험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단위도 허용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낳게 하여 여타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20) 이 계획안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996년 7월 발간한 투자대상종합목록에 따른 것이다.

21) 『금수강산』, 2000년 3월호, 라진-선봉시 인민위원장 김수연의 인터뷰 내용.

〈그림 4-2〉 나진·선봉 경제특구 국별 투자 비중



자료: 자료: 1997년 12월 말 기준 통계(KOTRA, 「북한뉴스레터」)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²²⁾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현재에는 위축되어 있지만 ‘북한식 변화’의 길로 가는 하나의 모델로서 지속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현대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이 또 하나의 경제특구로서 제도화되고, 신의주가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된다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이것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시작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22) 북한은 나진·선봉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선 과거 합법법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북한에 보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경제무역지대법, 토지입대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지금까지 총 58개정도 제정, 정비하고 있으며, 법 조항을 수시로 베트남이나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고 있다.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

(1) 대외경제개방 조건의 미비

사회주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역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 개방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대외무역관리체제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의 단위 무역기업들 및 합작·합영 기업소들은 신무역체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에 있는 당·정 조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개별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과 합작·합영 및 단순교역을 하는 기업들은 아무런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중앙과 닿아 있는 개별적 인맥의 유무 여부에 따라 성공 내지는 실패의 기업성과를 보이게 되어 있다.

둘째, 대외경제개방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미 대외경제개방을 하여 상당한 성공을 보이고 있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들보다도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이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북한은 대내외적 정치부문의 안정성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정도, 국제화 정도, 외환의 사용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자관리 및 노동생산성 수준, 인프라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국가들보다도 뒤떨어지는 형편이다. 결국 북한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보다 유리하게 개선한다 하더라도 대내외적 정치부문의 안정성 및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한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정치개혁 및 경제시스템 개혁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개방이란 시장경제시스템과의 접촉 및 도입이므로 일부 경제시스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기존 정치시스템 일부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치가 없게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외화가득을 위한 수출산업의 육성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 정치·경제시스템 일부를 개혁하지 않는 실용주의적 경제운영원리만 강조하고 있어 대외경제개방의 성과에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다.

(2) 열악한 SOC사정 및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에 처음 진출할 때, 동 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해외시장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기지 활용만이 초기 투자의 주요 목적은 아니었다. 배후에 있는 소비시장의 성숙에 따른 내수시장 선점도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오랫동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소비자 구매력 자체가 고갈되어 있고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 진출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북한은 SOC분야의 낙후와 산업연결관계의 연결고리도 일부 끊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란 중간재를 생산하면 소비재 시장이 부재하고 소비재를 생산하려면 중간재가 없는 현실로서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3) 분명한 개혁·개방 계획의 미수립

경제개혁과 대외경제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혁적 개방에 대한 정치세력의 의지와 안정성, 개혁·개방에 대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개혁의 초기에 공산당 정권이 매우 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덩소평이 “개혁·개방은 10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개혁의지 또한 확고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추진할 수 있었고,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사결정권한도 안정적으로 분권화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 현재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이 현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뚜렷한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이 아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직전 장쩌민 주석을 만날 당시 ‘북한식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001년 1월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도 직접 시찰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혁·개방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경제개방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장기적 방향이 분명한 ‘변화의 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의 분권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와의 관계 설정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북한의 경제회복전략과 북한경제의 전망

최근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행진을 멈추고 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4.3%의 경제성장을 하더니 1999년에는 플러스 6.2%의 경제성장을 하였고 2000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 규모도 1998년도에 수출입 합쳐 14억 4천만 달러였지만 1999년도에 14억 8천만 달러로 약간 증가하고, 2000년도에는 20%~30%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일차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외원조가 주요 역할을 한데 힘입은 바 크지만, 북한당국의 노력도 일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은 현재 어떠한 경제회복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1996년 농업관리 방식인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협동농장 작업반 단위를 20명에서 7명 수준으로 낮추고 초과생산량의 자율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9월 헌법개정 당시

일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는 조항을 삽입하고²³⁾,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연구원을 설립하는가 하면, 기업·협동농장에서의 독립채산제 및 인가개념 도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14개에 이르는 외국인투자관련법 조항을 대폭손질하여(1999년 2월) 과거에 모호했던 법조항들을 분명히 하거나 보다 더 유리한 조항으로 바꾸고 있으며, 경제관련법들도 계속 제정함으로써 법에 의한 경제정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마코드기구, 국제섬유수출기구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고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의 가입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상품전시회 및 국제박람회를 개최 또는 참가함으로써 국제상품시장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대외관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진후 경제재건을 위한 일종의 외연적 경제성장전략 역할을 하였던 친리마운동을 '제2의 친리마운동'으로 다시 내걸은 가운데, 1998년 10월 내각결정명령 2호로 발표된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5대 선차부문 즉 식량, 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부터 산업생산력 회복에 주력하고 이 부분들의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부문의 연쇄반응적 회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북한은 1999년도 재정예산에서 5대 선차부문에 대한 예산증가율을 10~15%까지 편성하고, 2000년도 예산에서도 석탄, 전력부문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10% 이상 증가된 비율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식량부문을 대외원조 및 '감자농사혁명'에 의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산업의 정상화에 산업생산력 회복의 관건이 있다

23) 1998년 개정 헌법 22조에 소유주체로 기존 협동단체외에 사회협동단체도 포함시키고, 헌법 24조에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노동보수, 텃밭경작 등 개인부업생산물외에 개인거래를 통해 얻은 물품, 상속, 증여재산, 짐승 등 산에서 채취한 나뭇, 저작권, 특허권으로 받은 보수 등도 포함시켜 소유권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헌법 37조에서는 특수경제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경제특구 외에 보세가공특구, 관광특구 등도 설치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²⁴⁾

셋째, 과학기술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는 가운데, IT산업의 집중 육성에 의한 경제회복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며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피한 하드웨어산업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단시간내 성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회복을 노린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내각 내에 전자공업성을 신설(1999년 11월 24일)하고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1998년도에는 전년대비 10%, 1999년도에는 전년대비 5.4%를 증액시킬 정도로 투자재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컴퓨터 보급률이 낮아 실효성은 없으나 교육성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IT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열심이다.²⁵⁾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구체적인 경제회복전략들은 아직은 '모기장식 개방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체제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장하고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째, 북한경제는 이미 1997년 IMF가 북한경제를 실시하고 결론을 내렸듯이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일부 경제운용방식에서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도입 및 대외경제관련법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그 회복 전망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4) 1999년 11월 3일 중앙방송: "전기와 식탄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강국 건설의 성과가 결정된다" 고 하였다. (체2의 친리마 대진군 신구자대회 토론에서 신태록 내각 전기식탄공업장)

25) 오민 북한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지도국 국장의 2000년 12월 18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참조.

둘째, 계획경제 시스템은 오히려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경제운용 프로그램들만 실용주의를 도입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 계획경제 시스템도 일부 수정하면서 실용주의적 경제운용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국 향후 북한경제의 전망은 경제체제의 모순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동시에 해결되어 나가지 않는 한 그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신년 벽두부터 “2000년대에 들어선 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 하며 ‘신사고’를 강조하고, 2000년 5월 중국의 실리쿤 벨리인 중관총 방문에 이어 2001년 1월 상하이 중국 경제특구를 방문함으로써 ‘북한식 경제특구’ 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됨을 볼 때, 그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각월호.
_____, 『클릭! 북한경제』, 2000.
_____, 『9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0.
박석삼, 『전환기의 북한경제』, 한국은행 조사부, 2000.
배종렬·박유환, 『남북한 경제협력: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0.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아카데미, 2000.
양운철 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전환』, 세종연구소, 1999.
연합뉴스, 『북한연감:2000, 2001』, 1999, 2000.
유승경, 「북한경제의 위기구조와 개혁·개방을 위한 제언」, LG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98-1, 1998.
윤창호 외, 『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울아카데미, 2000.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2000.
조명철·홍익표,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투자환경』,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8.
한국무역협회,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안내서』, 1996.
_____,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2000.11
통일부, 『2000 북한개요』, 2000.
_____, 『200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2000. 1
_____,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이론: 경제학』, 1996.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각월호.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00.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북한 교역·투자 가이드』, 2000.
_____, 『통일경제』, 각월호.

참고문헌

김일성종합대학,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1995.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VI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김 경 응 · 박 갑 수

(통일교육원 교수)

제 1 절 | 북한의 교육(163)

제 2 절 | 북한의 문화와 예술(176)

제 3 절 | 교육과 문예의 새로운 흐름(194)

KEY POINT

요점

- 북한교육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공산주의화' 하는 것이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가장 중시하면서, 이들을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북한의 문화예술은 미(美)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외에 대중을 공산주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무기'로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북한이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려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문화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부수효과도 감안하고 있다.

제1절 북한의 교육

1.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 화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은 정치사상교양을 가장 중시하면서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이념적 기초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론 체계화하여 교육지침으로 삼고 있다. 북한 헌법 제43조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이념에 대해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했다.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과 교수교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1977년 9월 공포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이 테제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발표

된 김일성의 연설, 교시 등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이 테제에 정리, 수록된 교육의 기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고, 이와 같은 교육을 '인간개조'라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인간개조의 본질을 사상개조, 즉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라 풀이한다. 교육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은 ① 당성·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주체의 확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이 계급적 본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성과 노동계급적 성격이 교육에서 나타나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교육은 혁명의 환경과 목적에 맞도록 전개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육에서의 주체'를 역설한다. 1999년 8월에는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 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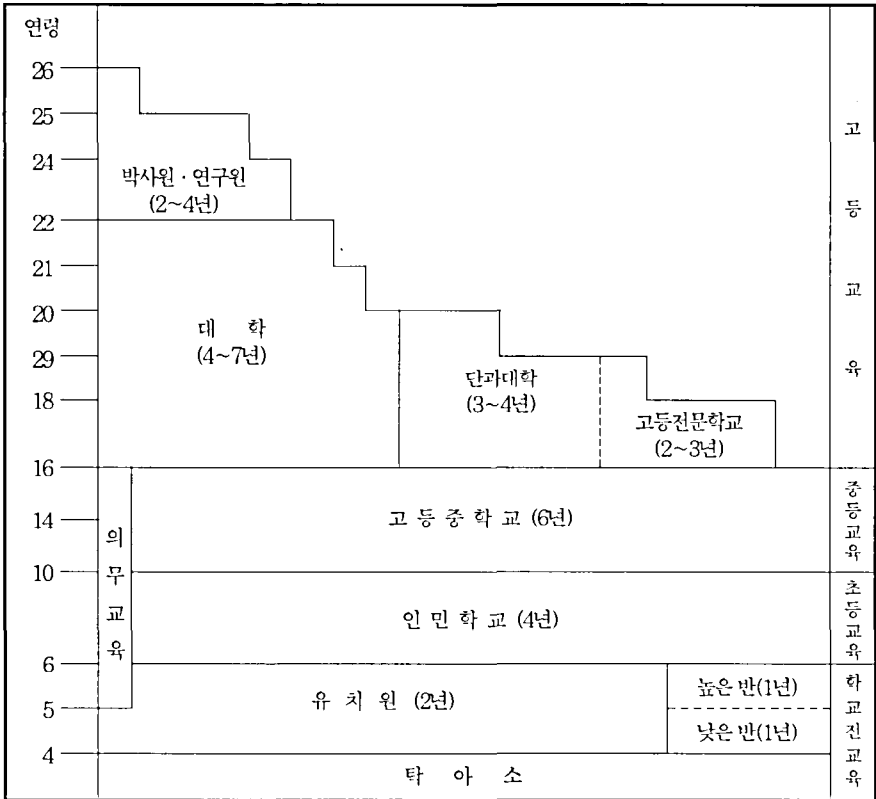
2. 교육제도

(1) 학 제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7년, 박사인·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치원 1년(높은 반)을 포함,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교 6년기간을 합쳐 '11년제 의무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표6-1〉에서 보듯 북한에서는 4-6-4(7)제의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실시한다.

〈표 6-1〉 북한의 교육체계



(2) 보통교육

북한은 현재 보통교육(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제로 한다. 이 같은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 방침은 1972년 제5기 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9월부터 학교전(유치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된 것은 1975년 9월부터이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유치원 높은 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고, 인민학교(4년)와 고등중학교(6년)를 의무교육으로 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한 것은 '무료교육'의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정치사상교양을 되도록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탁아소나 유치원 교육을 '학교전 교육'이라고 이름짓고, 혁명사상 교양과 도덕 교양을 향한 '첫 공정'으로 중시하고 있다.

(3) 고등교육

북한은 고등교육을 '장학제'로 표방하여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고등교육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현재 북한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280여 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도별로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약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공산대학 등이 있으며,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각종 공장대학들이, 대규모의 협동농장과 수산사업소에는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있다. 북한에서 발표한 통계로는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600여 개 있다고 한다.

각 도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 직업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능공을 양성한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사상 검토를 비롯, 추천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치러야 하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보통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부는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을 누린다. 대체로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10% 안팎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특수교육제

1) 특기자교육

북한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각 도에 특수학교들을 건립했다. 인민학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교육하는 제1고등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교육을 위한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등이 있다.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 특기자들을 위한 예체능 전문학교도 있으며,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도록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1984년 9월 평양 제1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현재 각 지역에 20여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영재를 배양하는 기지'가 되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일류대학으로 추천, 진학할 수도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1947년 10월 21일 당시 민족보위성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인민학교 졸업후 입학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사관학교식 교육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9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사범교육

교사의 역할이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범교육을 중요시한다.

교원양성기관으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 도(직할시)마다 1~2개씩 설치되어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교 교원을, 교원대학에서는 인민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또 교원충당을 위해서 주간의 정규교육 이외에 통신·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재교육을 실시 단기강습반을 모집, 양성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교원양성기관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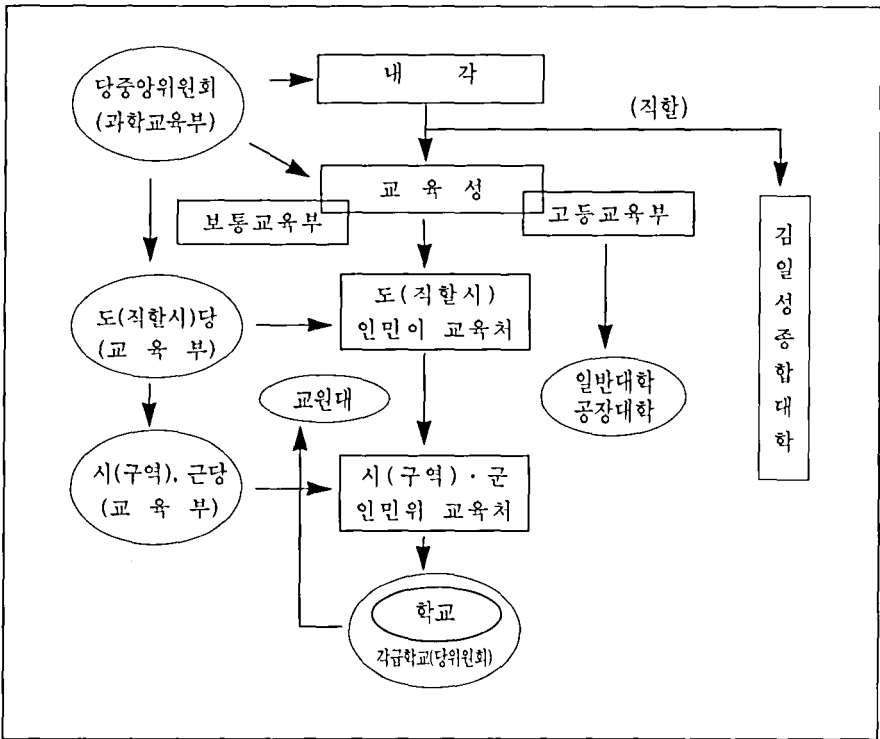
|

3. 교육행정 체계

북한의 교육정책은 '당적 지도'의 원리에서 수립, 추진된다. 교육에서 당적 지도는 당과 수령에 무조건 충실하게 함은 물론,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체제 적응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이 모아진다.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지도·통제한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 학교의 학교 당조직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내각(행정부)의 경우, 중앙의 교육성은 각급 도(직할시) 및 시군 행정기관(지방인민위원회)과 교육기관들을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한다. <(표 6-2)참조>

(표 6-2)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4. 교육내용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① 정치사상교육, ② 과학기술교육, ③ 체육교육으로 대별한다. 정치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와 혁명활동을, 과학기술교육으로는 일반과학과 전문기술을, 체육교육으로는 노동과 국방에 임하는 체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인민학교 교과과정의 경우 <표 6-3>에 보듯이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2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고등중학교는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으로 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민학교 교과목의 구조상 특징은 국어가 전체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고등중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과목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북한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성은 <표 6-4>의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물론, 북한 교과서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표 6-3〉 인민학교 교육과정

번호	구분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1	1	1	1
3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1	1	1	1
4	공산주의 도덕	1	1	1	1
5	수학	5	5	6	6
6	국어	8	8	7	7
7	자연	2	2	2	2
8	위생	1	1	1	1
9	음악	2	2	2	2
10	체육	2	2	2	2
11	도화	1	1	1	1
12	공작	1	1	1	1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학기 16주, 2학기 18주(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말 1주일간 봄방학)

〈표 6-4〉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정일 원수님 혁명력사				2	2	2
3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활동	1	1	1			
4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2	2	2
5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1	
6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20	미술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5. 교육방법

첫째, 깨우쳐 주는 교수 교양방법이다. 이는 한 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야기·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배우는 학생은 토론과 논쟁의 '문답식 방법'을 통해 잘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설과 설복'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기본방법은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항일혁명 인물들의 투쟁'이나 '누구누구를 따라 배우자'는 방식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종합방법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혁명의 실천으로 써 먹어야 '산 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을 막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끌어내는 이론적인 기반도 되고 있다.

셋째,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방법이다.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의 품성과 태도를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정치생활'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당이 차지하는 정치사회화의 매체비중은 절대적이다. 조직생활을 통해서 사상교육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치활동에 참여케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에는 '조선소년단'에서, 그 이후의 청소년 시절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소년단의 활동은 '과외교양기지'로 일컬을 만큼 중시하고 있다.

또 성인이 되어도 각자가 직장조직 외에 각종 직업조직 등에 참가해야 하므로, 평생동안 조직활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직의 벽은 이중·삼중으로 둘러 싸여 있

어서 조직생활의 틀을 벗어난다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제나 조직을 우선하는, 즉 집단 우선의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다른 정치사회화의 일차적 매체인 가정과 '사회교양수단' (당과 외곽조직단체, 언론매체)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은 '사회의 거울'로서가 아니라 '당의 얼굴'로서 중시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개인 찬양·충성,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노력동원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혁명사상 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일관되어 있음을 이미 파악하였다.

북한의 어린이,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하나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처럼 각 '교육공정'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경우 '토요일 학습, 수요일강연회에서 매일 2시간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이다.

북한의 교육내용은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긍정적·부정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유형들은 지도층의 언급과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입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주제들은 가장 역점을 두고 학습해야 할 분야이다. 부정적인 투쟁 주제들이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해 가는 데 저해되는 일체의 장애 현상과 '계급적 원수'들이 해당된다. 이런 부정적인 주제들은 부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긍정적인 내용과

극적이리 만치 대비를 이룸으로써 부정적인 투쟁의식을 더욱 북돋는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다섯 가지 '혁명적인 사회주의 교육방법'을 기초로 하여 가능한 모든 매체(당, 가정, 교육기관, 조직단체, 대중매체 등)들이 관여하게 된다. 교육·교양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당원으로부터 핵심군중(계층)으로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에게 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2절

북한의 문화와 예술

1.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

(1) 북한의 문예정책

1998년 개정 북한 헌법은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제52조)고 규정하여 문화·예술의 혁명성과 사상성·예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성과 사상성 중시와 함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절대적 행동지침이 되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1974.2, 당 중앙위)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한다”(3항),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4항)고 규정하여 북한의 문예정책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위의 헌법 조항과 김일성교시, 10대원칙을 보더라도 북한의 문예정책은 우선 먼저 사회주의체제의 옹호 및 합리화, 통치자 우상화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미적 가치 추구가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북한은 문학예술에 대해 “당의 정책을 구현하여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문예의 기능이 예술의 본질인 미의 추구보다는 혁명의 전파, 사상의 전달이란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해방직후 북한 문화예술계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월북인사들의 적극적 지지가 큰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문예정책 기조에 나타난 문예창작활동의 구체적 목표는 ① 당정책 구현 및 선전선동, ② 김일성·김정일 및 가계 우상화, ③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④ 정치사상 교양, ⑤ 노력동원 및 노동의욕 고취 등 5개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문예정책은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제국주의적 사상·문화침투를 막으며 수령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위업에 기여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 이 점은 개정 헌법의 다음과 같은 조항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제40조)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

1) 『김일성 저작선집』(제2권), p. 579. 김일성 주석이 작가·예술가에게 내린 교시(1962. 11)에 잘 나타나 있다. “문화 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제41조)

북한이 주장하는 문화혁명은 “그 기본 업무가 전체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체 낙후한 생활양식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덕기풍을 확립하게 하며 사회주의적 사상의식과 높은 과학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있다”²⁾고 한다.

또한 북한의 문화는 혁명성에 바탕을 두어 문화도 혁명수행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3대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수행할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강조되고 있다.

과도기 단계의 혁명목표로는 이른바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라는 두 개의 고지 점령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사상적 요새의 점령이란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자면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의 수행도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혁명과업’의 하나로, 사상혁명과 함께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³⁾

결국 북한에서 문화란 독자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3대 혁명에 입각한 공산주의적 정치사회화의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선전에서 학교교육은 물론, 문화예술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에서 당성·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전제 하에 민족문화의 계승·

2) 『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5, p. 1506

3) 김정일의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 1. 3

발전과 예술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정치에서 미분화된 상태에 있으며 문화정책 역시 단순히 학술·예술·민속·체육·언론·교육 등 어떤 특정 문화적 영역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이념문화에 예속되고 이밖에 가족에 관한 정책, 언어 및 국어교육 정책, 나아가 법의식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정치활동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1970년대에 후계자가 결정되면서 문학·예술 각 부문에 걸쳐 당 중앙의 현지도와 직접 참여가 이뤄지는 등 문학·예술 부문 역시 김정일 시대로 집어들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문화예술론」을 저작하여 영화부문의 성과를 올리고 「무용표기법」으로 무보(舞譜)를 기록할 수 있는 타자기를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3대 혁명노작을 가극화하고, 태평소·해금·피리 등 민족악기의 개량사업을 통해 서양 악기와 합주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국악 5음 체계(궁·상·각·치·우)를 혁신하였으며, 또한 가야금의 현을 늘려 음역을 확장하고 명주실 줄을 쇠줄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

또한 북한의 문학 예술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주민들의 대남 투쟁의식과 혁명성을 고무·선동하는 일이다. 김일성 주석 자신도 “우리의 문학 예술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해야 할 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인민의 투쟁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체제위기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혁명성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는 바,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는 항일혁명 문

4) 김정일 위원장이 작품 창작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발표된 대표적 첫 작품은 「불편의 력사」이다. 1970년대 초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15권으로 발행되어 주체사상을 의식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학과 수령 형상 문학이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휘파람과 같이 가볍고 밝은 노래 창작도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숨은 영웅 형상화 문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틈새로 들어오는 외국문화·서방사조 등으로 문화적 취향이 변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 주도의 공식문화에는 소극적이나 남한가요, 신식 헤어스타일, 패션 등 비공식적인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남북간에 약간씩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2) 문예이론과 창작원칙

북한의 문예이론 가운데 문예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이론으로는 주체문예이론, 종자론(種子論), 군중예술론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속도전 이론', '진형화 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 이론' 등이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이론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로 설명된다. 이는 논리적 성격으로 볼 때, 이념적 보편성과 형식적 특수성을 포괄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의 결합'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체의 문예이론은 당성·계급성·인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토대로 주체사상의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

하고 혁명투쟁의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반영하며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에 맞게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민 호응도와 인기를 고려한 대중성도 과거와 달리 중시되어 가는 실정이다.

‘종자론’은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에 의하면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창작, 실천하는 과정에서 당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문예이론의 새로운 개념”이며,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근본문제로 되며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문예이론이 미학원리(美學原理)라면 종자론은 예술창작에 임하는 실천강령이다. 여기서 종자란 작품의 사상·예술적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자 북한사회가 공동의 이념과 가치로 규정하는 일체의 가치체계를 하나의 이데아로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자’란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미적 요소이자 사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사상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취급된다. “종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중예술론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문화예술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북한의 군중예술론의 창작 주체가 개인보다는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공산주의적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과정은 문학예술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수준을 전문 작가·예술인들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군중문학 예술을 전문예술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꾼 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 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바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

켜야 하겠습니까.⁵⁾ 특히 김일성주석은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글 쓰는 것을 신비화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대체 문학과 예술이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고 지적하며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광범위한 대중 속에서 그들의 발전을 도와준다면 모든 군중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계급의식과 적개심으로 혁명투쟁을 각오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사상 의식화의 최초 과정이자 북한 문화예술의 종자를 받아시키는 힘이 된다.

김일성 주석은 1970년 2월 17일 과학교육 및 문화예술 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교육과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에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인식단계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상을 철저히 폭로·인식시켜야 하고, 둘째, 증오단계로서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적(敵)인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극렬하게 증오하며, 셋째, 결심단계에서는 최후까지 기꺼이 목숨을 던져 투쟁하려는 혁명적 각오를 가져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 역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이 사상교양 사업에서 중핵적 요소가 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준다는 것은 그들이 혁명하려는 사상과 관점, 다시 말하여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 부시고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높은 각오와 강인한 의지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⁶⁾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인은 전문적 창작가라기 보다는

5)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462.

6) 정윤모,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 데 대한 주체의 이론』,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7, p.217

혁명투쟁을 강조하는 당과 수령의 가치관과 미의식을 인민 대중에 주입시키는 지도 교사로서의 역할이 더 중시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북한 문학예술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문예의 근본이 되는 창작방법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자기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와 정서에 맞는 민족적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⁷⁾

2. 문화·예술분야 활동실태

(1) 문학

북한의 문학은 주민들에게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웅주의를 심어주고 혁명 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의 초인적인 모습을 그려내도록 '수령형상 창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중을 둔다.

7) 『위대한 영도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리론(문예학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6, pp.108~109

주체문예이론이 대두한 1970년 초반부터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불리는 「피 바다」, 「꽃피는 처녀」, 「한 자위대 단원의 운명」 등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다는 명작들을 다시 장편소설로 개작하여 사상 예술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의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3대혁명 기수들과 3대혁명 소조원,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내고자 하였던 바, 이는 지난날 친일지주와 소작인 등 선악으로만 구분되던 인물 평가에서 나아가 생산성 향상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모범적·긍정적인 인물로서의 노동영웅을 이상화하는 구도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1980년대부터는 북한문학의 소재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김일성 가계를 소재로 일방적 충성만 촉구하던 문학이 대중으로부터 내심 외면당하자 김정일의 지시로 생활 속의 소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작품의 소재가 다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외부의 변화상이 반영되어 사상과 주제는 김일성 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이되 줄거리는 남녀 애정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송가」(1987년 남대현 작)등이 대표작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북한은 기존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김일성 부자가계를 우상화하고 당 정책을 선전하며 체제를 찬양하는 한편, 각종 문학상을 제정하여 인민학교 학생에서 근로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창작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상징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2) 음악 및 가극

북한 음악의 창작과 표현의 기본방침은 한결같이 사상교양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며 서양음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둘째,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선율을 창조하며 셋째, 기악보다는 성악에 비중을 두고 넷째, 곡조보다는 가사를 중시하는 데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음악을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발간한 노래집의 반 정도는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양식을 따르는 국민가요식의 민요 조 선율을 띠고 있고 화음과 리듬보다는 가사와 멜로디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화성은 극히 단조로와 일반 주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으나 변화가 없고 지루하며 창법에서는 비성(非聲)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요에서는 당 정책선전 가요·서정가요·혁명가요·조선가요 등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일성 부자 찬양을 위한 송가(頌歌)이다. 조선문학예술년감(1998)에 보천보전지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조선인민군협주단, 만수대예술단 등 이상 4개 단체가 신작 발표하여 악보가 소개된 76개의 곡목을 살펴보면 김일성 부자 찬양이 52개 곡목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음악에 맞게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동시에 합주토록 함으로써 악기개량에 관심을 보여 주는 한편 이와 함께 전통음악의 양화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의 가극은 음악과 무용, 무대미술이 합쳐진 종합예술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어미니」와 유사하다는 「피바다」를 시초로 「꽃피는 처

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의 5대 혁명가극의 공연이 주종을 형성한다.⁸⁾

방북한 외국의 주요 인물을 초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5대 혁명가극 중 한 두 개를 관람시킬 정도로 무대장치의 대형화, 연속적 군무의 전개, 대규모의 합창 등에서는 나름대로의 리얼리티와 긴장감을 전달해 주고 있다.

(3) 무용

북한의 무용이 독자적인 분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용이 가극의 한 부분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예술분야에 비해 가장 활동이 미미하고 음악, 재담(코메디)과 곁들여 종합 공연할 때 작은 부분으로 삽입되는 정도이며 아동무용이 무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무용의 동작은 우리의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기본을 이루고 있으나 무용형식에서는 육체의 아름다움, 율동미, 시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무용수의 보조기구도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 도구 등이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무용은 우아하고 섬세한 율동미보다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동작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에 주력하면서 춤동작, 가락, 보법(步法)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키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이라고 불리는 현대무

8) 「문학예술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800.

용이다.

북한에서 15년 만에 완성하였다는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1987년)은 사람의 몸동작을 4가지 형태와 11가지의 동작으로 구분하여 이를 모음적 기능으로 설정하고 12개의 자리부호, 7개의 방향부호를 자음적 기능으로 한 후 이들 기본부호를 임의의 형태로 결합시키면 어떠한 무용동작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내외 무용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⁹⁾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외국 수반 환영식에 수만 명을 동원하여 화려한 집체예술로 연출하고 있다.

(4) 미술

북한에서는 미술분야를 사회적 기능에 따라 기념비미술·영화미술·무대미술·장식미술·산업미술·건축미술·일반미술로 나누고 있다.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다”¹⁰⁾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예술부문 중에서도 당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술의 특성이 직관을 통한 의미의 전달에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정치사상교양과 노력동원 등을 목적으로 선전화(포스타), 우상화동상 조각, 혁명기념물 건축 등을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일성 부자 가계의 우상화와 기념비적 건축 건립을 오랜 기간 특별 지원함에 따

9) 남한에서도 이미 1971년 시도소리의 대가였던 명창 김정언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무용동작으로 조합시켜 지술까지 발표한 선행연구가 있어 비교가 된다.

10)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 미술로 발전시키자, 제9차 국가미술전람회에서의 김일성 교시 (1966. 10).

라 북한의 사실주의적 동상제작은 외화벌이에 일조할 정도로 세계 수준 급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미술작품은 대부분 김일성교시에 따라 창작된 것으로 미술에 대한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명의 길과 인민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형상화해야 하고 착취사회의 본질을 실감 있게 보여주어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되 사회주의사회에서 누리는 행복을 알게 할 것, 조선헌화를 바탕으로 하되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을 연구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 것, 공장과 농촌 등 현장에 직접 나가 노동자들과 일을 같이 함으로써 당이 요구하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체험적 창작을 이루어낼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미술의 중점분야를 조선헌화와 조각에 두고 작품소재는 노동 장면, 항일혁명 활동, 김부자 우상화, 반제 사회주의 찬양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미술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방지하고 당의 방침을 보다 깊게 반영한다는 명분 하에 소품보다는 김정일 위원장 지시에 의해 수백 개의 대형벽화가 제작되는 등 대작 중심의 다수 인이 참여하는 집체적 창조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개념을 중시하여 1998년 말에는 43,000여 점의 도안을 14권의 책으로 편찬하였다.

한편 미술가동맹에서 서예부문이 독립된 분과위원회로 결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서예를 과거 양반 전유물로 대하는 인식이 있는 데다 정치선전면에서 이용가치가 적기 때문이다.

(5) 영화 및 연극

북한에서는 다른 어느 예술장르보다 영화를 중시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연감』에서 『영화연감』을 별도로 출간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영화가 대중을 상대로 호소력과 전파력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 부자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영화에 대한 개인적 취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도 하고 정서교양도 하여야 합니다”¹¹⁾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저술했다는 『영화예술론』(1973)에서 사상적 알맹이(종자)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하고 연출가는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는 감정의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자본주의의 ‘연출 제일주의’를 배격하고 여러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배우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일정한 세계관과 구체적인 공산주의 사상 감정·생활체험 등을 미적·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재현하는 노동계급적 예술가로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노래가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을 중시하여 한편의 영화 속에는 반드시 3~4곡의 주제가를 넣음으로써 신과조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북한영화는 긍정전형(肯定典型)과 부정전형(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11) 『조선영화』, 1992년 1월호, p. 51.

설정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로 '공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강화되어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감화로 누우쳐 오류를 시정하는 스토리가 주 테마로 변화되었다.

영화제작에 있어서도 1960년대 천리마 운동 이후 대형화,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 시리즈화 등 방대한 작품제작에 치우쳤으나, 대작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해외영화제에서 외면 받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줄이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였다.

1987년에 제작된 「보증」도 기존 북한 영화의 틀을 깨트리고 북한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간부들의 부정부패, 권위주의, 토대와 성분에 따른 인간차별 등을 표현코자 노력하여 대중들의 지지가 높았다. 신(申) 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그러한 변화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자주성의 확보 및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1992년부터 50부작을 목표로 하였던 다부작 예술영화인 「민족과 운명」(1999.11 현재, 53부작 개봉)을 계속 제작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는 신상옥·최은희씨가 북한에서 제작한 「소금」, 「사랑 사랑 내사랑」,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 7편과 이훈구 작가의 시나리오로 만든 「봄날의 눈석이」, 「생의 흔적」, 「자연에게 물어보라」 등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주의인데다 비교적 정치성·사상성이 적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풍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한은 비동맹권을 중심으로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해 오고 있는 바, 2000년 9월 제7차 축전까지 약 500여 편의 영화가 출품, 심사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기울여 4.25 아동영화촬영소에는 1천여 명의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양성해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합작으로 연 수십 편을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연극이 큰 빛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연극인들은 연극보다는 가극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었다. 무용과 노래 등을 곁들인 일종의 오페레타 성향을 띠고 있는 북한 연극은 1980년대에 들어 대작 위주로 창작되고 있는데 「성황당」, 「혈분만국회의」,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일당」 등이 대표작으로 이들 연극들은 모두가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이른바 「혁명연극」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새롭게 각색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단막극, 경희극 등 대중정서에 맞는 코미딕한 연극을 더 좋아하고 있다. 1978년 6월 14일 김정일 위원장이 연극 「성황당」을 대규모 무대에다 음악·무용 등을 가미,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발전을 보게 됨에 따라 북한에서는 이후 공연된 「초식」, 「어머니와 아들」 등의 연극들은 기존의 연극내용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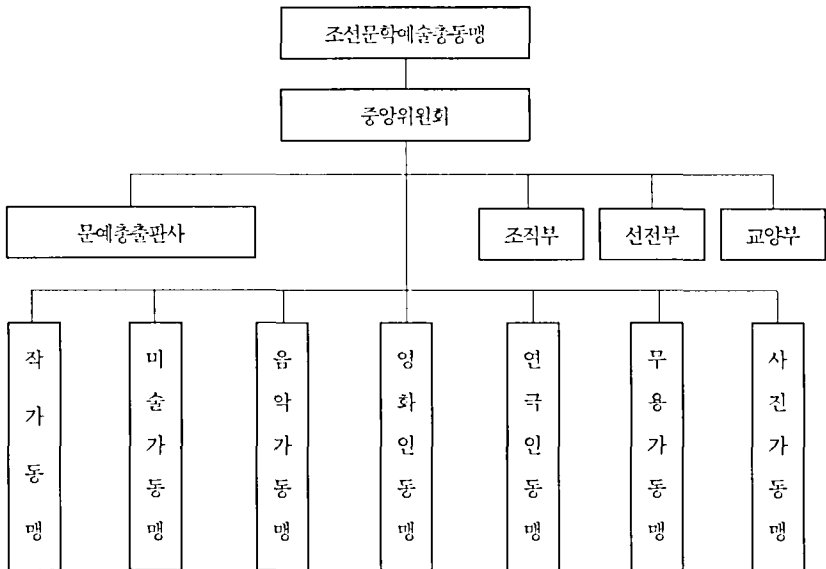
3. 문예단체 기구

북한의 문학예술 업무를 조직·운영하며, 당의 정책과 유일사상에 충실하도록 하는 직업 예술인 단체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이다. 이 조직산하에 영화·문학·음악·미술·무용 등 분야별 예술가 동맹이 있다.

그러나 문예총은 대외 문화교류의 형식상 기구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각 문화성의 행정적 관리체계에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고, 문화성은 다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도·통제를 받는다. 모든 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 문학예술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 등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예술작품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재의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문화성과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북한의 문화예술인은 받는 대우만큼 더욱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이 1주일에 1회씩 생활총화를 함에 비해 문화예술인은 2일에 1회씩 생활총화를 하게 된다.

〈표 6-5〉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구



주: 각 동맹 중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도에는 총동맹 지부와 부문별 동맹 지부가 있다.

문예총에 소속된 각 장르별 예술가들은 문학예술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공훈과 역량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된다. 인민예술가·공훈예술가를 비롯하여 1급에서 8급까지 구분되며 이 중에서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는 국가영웅으로 추대되고 있으며, 최고 명예인 국기훈장의 급수가 인정되어 인민예술가는 국기훈장 1급, 공훈예술가는 국기훈장 2급에 해당된다.

또한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는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어 근로인민대중들의 예술활동은 이러한 소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군중문화단체로 활동하지만, 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에 발표되기도 한다. 이들 중 더러는 후보 맹원으로 발탁되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맹원이 됨으로써 직업적 작가나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그 외에 작품의 현상모집에 참여하여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급 공연단체로는 1946년에 평양가극단으로 창립된 만수대예술단, 그 이듬해 창립된 인민군협주단, 1970년대 초반에 창립된 피바다가극단과 모란봉예술단을 개칭한 평양예술단이 있다. 이색적으로 교예(서커스)를 예술의 차원까지 올린 평양교예단(1946년 창설)은 북한전역의 공연단체중 주민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다. 전속극장(평양교예극장, 3,500석)을 가지고 있으며 1987년, 2000년 몬테카를로 국제서커스대회와 2000년 런던 세계 서커스 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중앙과 각 시·도별로 연극단과 예술·가무단이 각각 편성되어 있다.

제3절

교육과 문예의 새로운 흐름

북한은 지난 50여년 동안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전체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화 해 왔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이념화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전개해 왔다.

북한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전체 주민들을 당과 수령에 충실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북한 교육은 정치사상교양이 핵심이며, 이를 사상개조·인간개조의 차원에서 다룬다. 그래서 정치현실과 불기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교육은 교육학 영역은 물론,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일종의 지속적인 혁명프로그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집단주의적, 정치 교화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간의 개성을 뒷전으로 미뤄 둔 채 모든 사람을 획일화하여 완전 개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체제가 의도한 대로 인간형이 '교양 되었다고 해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아랑곳없이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하겠다.

현재 북한의 교육은 남북한 관계 개선과 평화를 지향하는 분위기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사이의 평화 정착과 '사람의 통일'을 향한 민족공동체의 회복 과제를 비롯해서 남북이 교육을 통해 이뤄야 할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대해 이념적 해석을 가하여, 소위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라는 새로운 도덕관을 내세워 왔다. 김일성 주석은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

“민족문화유산과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언제나 계급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대해야 하며, 우리 혁명의 이익에 맞게 평가하고 치리해야 한다. 민족문화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교양적 의의가 있는 것부터 복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은 주체의 혁명이론을 구성하는 인간개조이론과 사회개조이론이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민족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고 자기 민족의 특성과 자기 나라 혁명의 이익에 맞는 주체적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화추세에 따라 문화의 확산·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급세기에 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며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보존시키려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해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결합시켜 조화점을 찾으려는 바, 민족에 중심을 두고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면서 시대에 맞게 '현대적 미감'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상적인 북한식 사회주의 생활양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고전문화 유산을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 것과 보존해 두기만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근로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계속 이어 받아야 하나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거나 공산주의문화를 건설하는 데 별로 의의가 없는 것들은 소극적으로 보존만 하는 경우도 있다. 판소리처럼 반인민적인 양반계급이 즐기는 것은 보존은 해도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민족문화와 관련하여 단군릉을 발굴(1993)하고 최고인민회의(1993.12.9)에서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과 관련한 의제를 채택하였으며, 동명왕릉과 개성의 왕건릉을 개축 복원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 문화유물 보호법(전문6항 52조)을 제정하고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수집, 복원 및 보존관리, 교육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문화유산을 옹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는 문화적 정통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정통성까지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8년부터 전국의 유물유적 보수사업을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1998년 7월 21일에는 늦기는 하였으나 유네스코 관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 협약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2000년 4월 14일에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중국·이집트·몽고·러시아 등의 문화예술인이 참석한 제3차 미학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국의 민족악기 개량발전, 민속무용의 발굴 및 경험을 토론한 바 있다. 또한 평양교예단이 2000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모나코의 제24차 몬테카를로 국제 교예축전에서 공중철봉 비행종목으로 금상을 수상하고 2000년 5월 25일에는 이티오피아 정부와 2000년~2002년도 문화교류 계획서를 조인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 교류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12)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2, p.59.

참고문헌

- 김경웅, 『북한정치사회화론』, 박영사, 1995.
_____, 『신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9.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택사, 1990.
문화관광부,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방법론 연구』, 1998.
문화체육부,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1996.
배찬복, 『남북한 정치사회화』, 법문사, 1989.
북한연구학회편,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 한울아카데미, 1999.
오기성, 『남북한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1999.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8.
임채욱, 『통일문화와 북한문화의 가치성』, 문화방송, 1998.
전우태,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오름, 2000.
정식홍, 『남북한 비교론』, 사람과 사람, 1997.
통일부, 『북한인민학교 교육 및 학생생활』, 1998.
통일인, 『북한의 교과서 분석』, 199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0년대 북한 문화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향후 남북문화교류방안』, 1998.
_____, 『김정일 문예관과 문예정책의 기본원리 연구』, 1998.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한중모 외, 『주체의 문예이론의 기본』, 평양: 문예출판사, 1992.
황징규,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과징안』, 평양: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96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8.
강운빈, 『인간개조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리헌순, 『사회주의 영화예술 건설』, 평양: 문예종합출판사, 1998.

VII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김 석 향

(통일교육원 교수)

제 1 절 | 북한 주민의 가치관 (201)

제 2 절 | 일상화된 조직생활 (208)

제 3 절 | 배급제도와 의식주 생활 (216)

제 4 절 | 직장생활과 여가문화 (234)

KEY POINT

요점 →

- 1990년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공식적인 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도모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규범 체계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원인의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 간다는 점 때문이다.
-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주민통제의 기제였던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 내지 마비시킴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사적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장마당 등 비공식적인 경제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 북한 주민도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생필품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자신의 뜻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기 어렵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배치받는다. 또한 직장생활과 조직생활로 바쁘지만 여건이 되면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 한다.

제1절

북한주민의 가치관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지닌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지닌 특성을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공식적 규범체계와 비공식적 규범체계가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90년 이후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체제 유지의 근간이었던 배급체제가 사실상 무너졌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외적으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서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은 몇 가지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북한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 가계(家系)를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조건화된 상황에서 살아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방송과 신문에서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횟수가 다소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붉은기 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을 앞세우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개념은 사실상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제인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사상의 주요 구성요소라 할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명적 수령론이란 대중과 정치적 지도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해당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이론적 체계를 다듬어 온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 원리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또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론의 설명이다. 말하자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려면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정치적 지도자인 수령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회도 사람과 같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신체의 어느 부분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도 수령은 뇌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신체에서 두뇌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사회도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이 곧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수령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부모에게 받은 육체적 생명 이외에 수령이 부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1생명"이라고 강조한다. 비록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생명을 잃어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논리를 말한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택'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향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동일'과 '효자동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공산주의 도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가치관은 김일성-김정일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당 조직과 근로단체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간부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군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2. 집단주의 원칙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의 헌법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다. 1998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집단주의 원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놓았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발행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집단주의란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특히 북한당국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라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도덕적 덕목으로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결국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의 매개 성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자기의 궤도에서만 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 내용을 ‘사회와 조직의 요구’¹⁾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반면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무섭게 배척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1) 남대현, 『청춘송가』, 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 36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 당국의 인권 개념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인권이란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1995년 6월 24일자 노동신문은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지만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3. 전통적 생활문화와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혼재

북한 당국은 1960~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복고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전통적인 예절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낡은 생활습관’으로 비판해 왔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집안의 어른들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을 자손에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마음놓고 물어보거나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음력설을 비롯한 한식·단오·추석 등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민속명절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했던 것도 전통적 생활문화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전통적 생활문화와 민속명절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조선민족제일주의란 결국 조선민족은 그 사상과 전통, 역사에서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동명왕릉과 단군릉을 개축하고 1995년 이후 “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김일성 민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당국이 음력설과 추석 등 민속명절을 공식적으로 부활하면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보급한다는 기치 아래 유일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면모를 전통적 생활양식에 결합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강력하게 보급해 온 결과 오늘날 북한 주민 중에서 전통적 생활문화를 그대로 지키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상 차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설 명절에 제사를 올리는 등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웃어른을 존경하고 가족과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1990년대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990년 독일 통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북한 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가 현실화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날마다 발전하는 사회주의 형제나라들과 ‘씩어빠진 자본주

의 나라들의 비참한 실상'을 비교해 왔다. 그런데 믿었던 형제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난 뒤 한동안 북한 당국은 그렇게 발전하던 형제나라들이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한동안 공식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북한 당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설명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이 혹독한 생활고를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했고 식량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배급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외부의 소식이 점차 널리 퍼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약화되면서 “지금까지 당만 믿고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했지만 당에서 우리 가족이 먹고살도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해서라도 가족을 살릴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한 주민 중의 상당수가 당국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가치관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 겉으로 공식적인 규범에 순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 누구나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 때문이다.

제2절

일상화된 조직생활

1. 조선소년단 입단과 청년동맹 가맹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한다.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유치원 높은 반부터 누구나 다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인정하는 기본조직에 들어가 본격적인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만 7세 이후 조선소년단에 입단할 때부터 시작된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하는데 입단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모든 아이들이 다 입단하게 되지만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입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학교 입학 이후 2학년까지 생활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집안성분이 좋은 학생들이 먼저 추천을 받아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을 하면 입단식을 거행한다.

입단식을 할 때에도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 맹세를 받아 읽게 한 뒤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주는 행사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

신은 사회의 기본조직에 들어갔으며 공부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한 학급에서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학생 간부는 분단위원장과 조직담당부위원장, 사상담당부위원장 등이 있다. 소년단 조직은 학생들이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파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 과외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학교 소년단위원회는 학급 소년단위원을 통해 각 학급별로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또 토요일을 소년단의 날로 정해 놓고 분열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도 진행한다. 소년단 생활은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만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

만 14세가 되면 누구나 다 붉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약자로서 예전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었는데 1996년에 그 명칭이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소년단 입단과정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북한사회에서는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후비대(後備隊)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에도 소년단에 입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시·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소년단의 표식인 붉은 넥타이를 벗고 청년동맹 가맹식을 거쳐 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맹원증을 받을 때부터 물에 젖거나 훼손되지 않게 비닐 등으로 잘 싸서 지갑에 넣은 뒤 늘 허리에 차고 다닌다는 것이다.

소년단과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하여 조직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

의 영향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시·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지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 등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평정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

2. 노동당과 근로단체 조직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는 만 14세 이후 30세까지 해당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 청년동맹에 가입해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 18세 이후에는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다. 18세 이후에 노동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되면 그 사람은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된다. 여자들은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은 채 전업주부가 되려면 나이와 관계없이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한편 30살이 넘도록 당원이 되지 못한 근로자와 농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으로 그 소속을 옮겨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각각 여성, 직맹, 농근맹 등으로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당원은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 내의 당원이 5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소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든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농촌의 경우에는 당원과 청년동맹 맹원이 아닌 사람들은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이란 크게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전 선동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강연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과 당원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당원반과 근로자반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의 정책과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혁명노작' 등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학습과정안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한편 생활총화는 대체로 1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데 한 주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모임을 말한다. 생활총화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지침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화립 10대 원칙'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이 지시하거나 지적한 내용이다.

노동당과 청년동맹·여맹·직맹·농근맹 중에서 사회적 위상이 가장 높은 단체가 노동당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노동당을 제외하면 다른 단체보다도 청년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청년동맹의 맹원들은 앞으로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맹이나 농근맹 맹원들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입당도 하지 못한 채 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또 하나의 조직생활 : 예비 군사조직

북한 주민은 만14세 이후 청년동맹의 맹원으로 가입한 때부터 각자 조건에 맞는 예비 군사조직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예비 군사조직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노농적위대로 구성된다.

우선 고등중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붉은청년근위대 대원으로 편성되어 연간 450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생 수에 따라 한 학교가 중대나 대대를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17세 이상 45세 이하 남자와 17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여성 중에서 현역군인과 준군사요원을 제외하고 신체건강하며 출신성분이 양호한 자로 선발된 사람들은 교도대에 편성되어 연간 40일 동안 훈련을 받는다. 특히 대학생교도대는 연간 160시간의 교내 훈련이 있고 2학년이 되면 6개월 동안 군부대에 동원되어 입영 집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노농적위대는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17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여성 중에서 현역군인과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부대 편성은 행정단위별로 노동당 민방위부에서 운영하는데 각 직장의 부서와 인민반별로 소대와 중대, 연대, 여단, 사단으로 편성한다. 이들은 연간 24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4. 인민반의 가두조직

북한 주민은 인민학교 시절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조직생활에서 빠질 수 없다고 한다. 연로보장이라고 하는 정년퇴직을 신청했거나 가두여성이라고 부르는 전업주부처럼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직생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동네의 인민반과 여맹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생활을 지도하게 된다.

대체로 20~30세대가 1개 인민반을 구성하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한동에 70세대가 살아도 이들이 전부 1개 인민반에 소속하는 경우도 있다. 인민반 구성원 중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당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세포를 만들어 당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민반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연로보장을 신청한 나이든 당원이나 전업주부인 가두여성 중에서 드물게 입당한 여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당원이 아닌 노인들은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생활을 하고 대다수 가두여성들은 여맹의 지도를 따라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에 참여하고 인민반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은 동(리)사무소의 지시를 받아 학습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고 각종 건설현장이나 농촌지원에 주민을 동원한다. 원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세대주인 남자들은 각각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당이나 근로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과업은 대체로 가두여성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최근에는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런 과업을 부과할 때 수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아무리

귀찮아도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식량공급대상자 명단을 정리할 때 반드시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에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의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도 있다.

5. 조직생활과 평정서, 그리고 신원문건

북한 주민이 조직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를 평정서라는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 반이 될 때부터 개인 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문서에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는다.²⁾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적어 놓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주변상황과 증거물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 놓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렸을 때, 윗사람에게 대들었을 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부기관에서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 평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사람이 당원이면 당 조직에서, 근로단체나 청년동맹 조직이면 해당조직에서 책임자가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듣고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정서를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보낸다. 그 사람이 예전에 잘못된 일이 없고

2) 출생 직후부터, 평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 반이 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서는 일종의 건강관 리카드를 만들어 둔다고 한다.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상부기관에서 좀더 두고 보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출신 성분과 평소의 행동을 감안하여 잡아가지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평정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언제나 조심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짐을 인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조직을 옮겨 갈 때마다 그 사람의 평정서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 특히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군대, 직장으로 옮겨 갈 때 청년동맹의 지도원이 평정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 하는 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나 평정서의 내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서 일을 잘 하고 충성심을 표현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내용이 평정서에 기록될 경우 그 사람은 일생동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평정서와 함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과에서 보관하는 신원조회 문건도 중요하다. 신원조회 문건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입대할 때, 당기관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내각 산하의 간부로 등용될 때 반드시 따라다닌다. 일반적으로 간부를 등용할 때 평정서보다 신원조회 문건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소위 '토대가 나쁘거나 성분이 걸리는 사람'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체계가 강하고 과학적이라 인간들이 많이 고통스럽다." 북한주민 한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일생동안 거쳐야 하는 조직생활의 체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위어져 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제3절

배급제도와 의식주 생활

1. 배급제도의 운영원리와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급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요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세운 뒤 계획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주민에게 공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배급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야 한다.

우선 국가는 주민들이 언제,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쓰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계획한 종류의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생산해야 하며 수송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차량 부족이나 사고 등으로 물품 수송이 늦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 수요를 예측하던 시점과 나중에 막상 물건이 공급되는 시점 차이에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요량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과 수송, 공급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사

람과 주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전혀 없고 언제나 정해진 종류의 물건을 정해진 분량만큼 받아서 예측 가능한 소비생활에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생산과 수송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북한주민들도 생활 속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뭄과 홍수, 태풍, 저온현상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실제 생산량이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해진 분량의 식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먹으려 하기도 하고 청춘남녀가 예정에 없이 사랑에 빠져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차량 부족이나 사고 등으로 수송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품이 주민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이렇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 주민들이 정상적인 배급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물품을 더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북한당국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령-당-인민이 일체감을 이루는 사회라고 강조하지만 수령과 당이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 북한의 주부들은 평소에 식량과 각종 물품을 평소에 조금씩 아껴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배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장마당을 환용하거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생산하는 국가 소유의 상품을 훔쳐서 살아가는데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조절'이라고 표현한다.

2. 식생활 실태

북한 당국이 “국가는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 데 힘을 쏟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의식주 및 생필품의 배급체계를 살펴보면 계층에 따라 차별화한 공급품을 제공한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나누고, 물자공급등급을 매일 공급대상자, 1주 공급대상자, 2주 공급대상자, 인민반 공급대상자로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배급해 왔다. 특히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배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에는 필요한 양만큼 매일 또는 수시로 배급하지만, 일반주민은 식량배급표에 따라 월 2회 또는 매주 단위로 배급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식량난 이전 공식식료품 배급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은 1980년대 말까지 배급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당시의 배급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표 7-1〉에 의하면 모든 주민에게 식량을 계층이나 지역 간 차이 없이 1인당 700g을 배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미와 잡곡 비율에서 차이를 보여 특권층은 9:1내지 8:2, 일반주민들은 2:8내지 1:9의 비율로 배급받았다. 특권층은 잡곡을 일부 배급받는다 하더라도 옥수수가 아닌 밀가루와 콩, 팥 등 고급 잡곡을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옥수수로 받았다.

〈표 7-1〉 계층별 식료품 배급체계

공급계층	해당성분	공급량	공급처	비고
매일공급 대상자	당 및 정부기관 핵심 간부, 김정일 비서, 개인 서비스요원 등	쌀700g 잡곡 4가지, 육류 15~ 20kg, 과일 60~80kg, 맥주 60병, 담배 60갑	호위총국 공급과	특별 계층
1주공급 대상자	중앙당부부장, 정무원총리, 제1호 부고급장교, 장성급장교 등	식량 700g 백미:잡곡 =7:3, 육류, 야채, 맥주, 담배등 필요량 (매일공급대상자와 비슷)	당제정 경리부	특별 계층
2주공급 대상자	중앙당부부장, 정무원총리, 제1호 부고급장교, 장성급장교 등	식량 700g(직급에 따라 백미:잡곡=7:3 또는 5:5) 육류1kg~6kg, 생선1kg~10kg, 계란 15~30개, 담배 30갑, 야채 등 직급별 차이	공급소에 배급카드 제시(1호~ 4호 공급소)	관직 소유자
인민만 공급대상자 (15일마다 배급)	노동자, 사무원, 농민 등	식량 700g(백미:잡곡 =2:8, 농촌은 1:9), 생선 가구당 1개월만에 1kg(실제3~4개월), 육류 명절 특별배급 (1~2kg), 기타는 부식카드 제시하고 배급	동배급소	관직 없는 인민

자료: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합』, 북한연구소, 1994, p.571 수정 정리.

한편 1일 식량공급량은 연령과 직업에 따라 총 9급으로 구분해 놓았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분량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데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일 식량공급량의 내역을 정리해 보면 <표 7-2>와 같다.

<표 7-2>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

급수	1일 식량공급량	대 상 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의 갱내의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자 중의 공모자, 투병중인 환자
5급	500g	고등중학생
6급	400g	인민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 유치원생, 기타 부양자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대다수의 일반노동자들은 15일에 한 번씩 식량배급을 타지만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배급을 준다. 농민이 받는 배급량은 자기가 속한 작업반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양이 국가계획의 몇 %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자신이 속한 작업반의 1년 생산량이 계획의 80%를 달성했으면 배급량도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게 된다.

공장·기업소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들은 배급표와 배급카드에 따라 식량배급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5일에 한 번씩 배급표를 받는다. 배

급표의 모양은 <그림 7-1>과 같이 각각 하루 공급량을 적은 15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지난 15일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한 횟수를 합쳐 해당하는 분량만큼 배급표의 작은 부분을 떼어내고 준다. 무단결근 하루와 3회 지각에 1일 배급량을 공제한다.

<그림 7-1> 배급표의 모양

3급 700g 11월 상순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도·시·군의》 식량량정표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자료: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2000, 정토출판, p.69

연로보장을 받은 노부모와 직장에 배 치받기 전의 자녀들, 부양을 받는 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눠준다. 이 때 세대주가 지각이나 무단결근으로 1일 배급량 이상을 공제 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인들의 배급량은 15일치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량배급은 유상으로 국정 소매 가격(쌀은 kg당 8전, 잡곡은 kg당 6전)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급 700g을 공급받는 노동자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가정에 세대주와 아내, 인민학생 딸 1명, 고등중학생 아들 1명, 연로보장을 받은 어머니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15일에 한 번 공급받을 식량의 양은 본인의 몫으로 700g×15, 어머니와 아내의 몫으로 300g×15×2, 딸의 몫으로 400g×15, 아들의 몫으로 500g×15를 전부 더 한 31kg이 된다.

세대주가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에서 31kg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급표를 받아 온다. 만약 무단결근을 1회 했으면 자신의 몫에서 이틀 치를 제외한 13일분과 다른 식구들의 배급량을 탈 수 있는 배급표를 받게 된다. 이 배급표와 함께 배급량을 살 수 있는 돈을 국정가격으로 계산하여 배급소 출표창구에 낸다. 배급소에서는 배급표를 받고 그 세대의 배급카드를 찾아서 배급량이 31kg이라고 적은 배급카드를 내준다. 이렇게 배급량을 적어 넣은 배급카드를 가지고 공급창구에 가면 그 곳에서 해당 분량만큼 식량을 내준 뒤 배급카드를 다시 받아서 출표창구로 보내 다음 번 배급을 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다.

부식 역시 배급제로 공급되는데,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배급량을 할당 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한다. 주요 공급품목은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와 식용유, 계란, 육류, 당과류 등이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판매품으로 되어 있다. 당·정간부들은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와 같은 부식을 수시로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배급카드를 받아 매달 지정된 분량(간장의 경우 월 1l, 된장의 경우 500g, 식용유의 경우 월 400g)만큼 국영상점에서 구매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급량의 50~70% 정도만 공급하기 때문에 생일잔치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대부분 장마당에서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이다. 소금은 8월초 양배추가 출하될 때 1인당 1kg, 10월말 김장 때 2kg이 공급되는 것이 고작이어서 가장 구하기 힘든 부식에 속한다. 배추·무우는 김장 때 가구당 60~70kg 공급받고 모자라면 장마당에서 구입하거나 개인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한다. 생선은 월 1인당 1kg(명태), 돼지고기·닭고기는 연 5회 가구당 1kg을 배급받지만,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세대별로 정해진 분량을 유상 공급받는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대부분 몇 달씩 식량배급이 중단되기도 하여 일부 지역별·계층별·연령별로 기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평양에서도 1997년에는 일반주민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이 100~200g, 엘리트 노동자의 경우 200~300g 정도로 줄어들고, 정규군인에 대한 배급도 일선 전방부대군인 및 특수부대군인을 제외하고 하루 두끼 밥과 한끼 죽을 제공하는 '2+1 식단체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식량 증산으로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평양주민의 경우 1인당 350g씩 한달 분량을 공급받고, 지방주민도 지역에 따라 한달에 10-15일 정도 1인당 평균 120g씩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정도라고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송매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실제로 2000년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이 때”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고위층도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기관별·직장별·행정단위별로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려 배급제도의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³⁾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식품들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1996년부터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 1998년도에는 이모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구황식품인 감자·고구마·도토리까지 공식적인 식량배급체계에 포함시

3) 1996년 12월 7일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행한 비밀연설에서 “식량문제로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황장엽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1996년도에 식량부족 해결의 방침으로 3개월은 국가가, 3개월은 직장 자체에서, 3개월은 수입 및 원조로, 3개월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키고 장마당에서 식량거래를 묵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업생산방식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기구는 사람의 하루 신진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곡물 소비량이 400g(1,200칼로리)이라고 하는데, 최근 북한 주민들의 평균 곡물소비량은 그 기준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기금이 1996년에 발행한 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이 인구 1천명당 31명꼴로 남한보다 3배나 높고 모성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70명꼴로 남한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8년 세계식량기구와 유엔아동기금 등이 공동으로 파견한 전문가 팀이 북한 전역 8개 지역의 7세 이하 어린이 1,800명의 영양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62%가 발육부진 상태였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다. 최근 북한 당국에서도 영양결핍으로 청소년의 발육이 부진해지자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의 신장 기준을 3~4cm 낮춘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주민들의 영양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하여 마늘섭취를 장려하거나 토끼·닭·염소 등 '꿀 먹는 짐승' 기르기 운동을 벌여 다양한 단백질 섭취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3. 의생활 실태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실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구호 아래 획일화되어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복, 여자는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79년 4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린 후 평양, 원산, 청진 등 대도시 주민들이 양장을 하기 시작했다.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후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1990년대 들어 그 영역이 머리모양과 화장법에까지 넓혀졌다.

북한 당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라는 진제아래 신체를 보호하는 의복의 1차적 기능만 강조하다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멋을 표현하는 2차적 기능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물려든 외국인들의 세련되고 활달한 차림새는 북한주민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새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활달하고 화려해지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⁴⁾ 1996년 6월에 온 탈북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북한 여성들은 ‘삼각머리’, ‘채양머리’, ‘오사리머리’ 등을 좋아한다고 한다.

최근 북한 당국은 체제단속의 일환으로 ‘김일성민족’다운 옷차림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유되었던 색깔 있는 옷차림에서 다시 단색 위주의 옷차림으로 회귀함으로써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시도의 일환인 것 같다.⁵⁾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사상의 침투를 우려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허

4) ‘천리마’나 『조선여성』같은 잡지에 피부미용 정보, 화장법 등이 실리거나 심지어 헤어스타일링 무스에 대한 안내가 게재되기까지 하였다. 또 북한은 1987년 북일 합작의 ‘너와 나 미용연구회’와 화장품 공장을 설립해 다량의 화장품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초화장품이나 메이크업 제품 중심이고 색조화장품의 생산·유통은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5) 1997년 7월 『로동신문』에서 “옷차림에는 민족성, 애국심 그리고 인민들의 강인한 성품들이 잘 나타난다. 모든 인민들은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우아하면서 소박한 옷, 조용하고 검박하면서도 쾌활하고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용되었던 다양한 머리모양도 철저히 단속하여 여성들의 경우 퍼머를 해도 되지만 뒷머리를 길게 하거나 풀어헤치는 스타일은 안되며, 남자 고등중학생은 앞머리가 2~3cm, 대학생의 경우 3~4cm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어겼다가 '불량청소년 단속그루뎌'에 잡히면 3~6개월씩 '노동단련대'에서 교화훈련을 받게 된다.

최근에 들어 의류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공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간 때에는 사무원, 부양가족, 농민들이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 받은 뒤 각자 상점에 가서 자신에게 돌아올 옷감과 의복을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개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국영상점이나 직매점보다 암시장에서 구입하여 소비했는데 그 마나 1995년도 이후에는 아예 기본 일상복 배급이 중단된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기본의복 외에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구매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데 배급체계가 원활하던 시절에도 주민들은 농민시장과 장마당을 통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썼다.

4. 주생활 실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공급받아 매달 월수입의 0.3%(4호 주택의 경우)의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살고 있다. 주거지역은 직위와 직장을 고려해 결정되고, 주택형태는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의 시책 하에 주민동원의 용이

〈표 7-3〉 계층별 주택배급체계

구분	주택형	가옥구조	입주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아파트	방2개이상, 목욕탕, 수세식 변소, 베란다, 냉온수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과,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1개~2개, 마루방, 부엌1	일반학교, 고등중학교 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1개~2개, 부엌1	말단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2개, 부엌1, 창고1	협동농장원
	구 욕	방2~3개의 농촌 기준 구옥	변두리 농민

자료: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433

성, 노동력의 조직화·통제 등을 위해 주로 집단거주형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계층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사정을 보면 〈표 7-3〉과 같다.

전체 주택에서 상층계급이 거주하는 특호·4호가 15%, 중급 계층이 거주하는 3호·2호 주택은 25%,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1호 주택은 60%를 차지한다. 당·정 고위간부급의 가구당 거주공간은 66㎡, 1인당 거주공간은 13.2㎡이지만, 일반주민들은 각각 22.3㎡, 4.5㎡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공식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일반주민들의 가구당 평균 거주공간은 7~8평에 지나지 않는다. 당·정·기업소 간부들은 쉽게 주택을 배정 받는 반면, 일반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정·기업소 간부들의 주택보급율은 높은 편이지만 일반주민들의 주택보급율은 평균에 미치는 못하는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도시나 농촌에서는 일자형으로 연결된 단층주택, 2-3층짜리 연립

주택, 문화주택, 한옥식 구옥, 하모니카 아파트⁶⁾ 등이 많고 대도시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일반적이며 평양에는 초고층 아파트도 있다.

주택을 배정 받으려면 해당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 주택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입주증을 받기까지 1~3년이 걸린다고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의 4~5년이 걸려야 주택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거나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동거살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북한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소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주려는 '과제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년) 동안에 23~30만 호의 주택건설방침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5만 세대 건설에 그침으로써 주택의 질적 문제 못지 않게 양적 문제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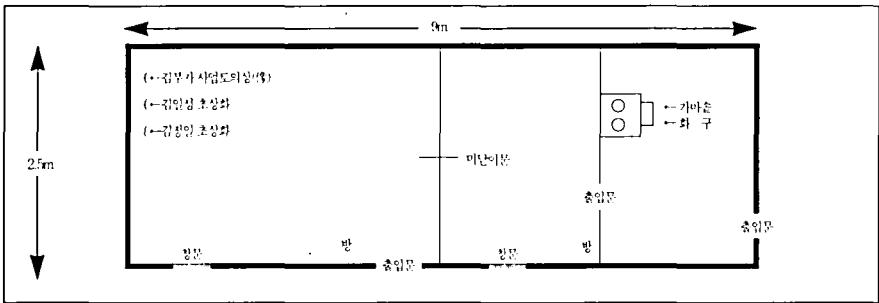
북한당국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음성적인 매매거래가 목인되는 실정이다. 세 칸 짜리 집을 지닌 사람이 북한돈 7만원을 받고 한 칸 짜리 집과 바꾸거나, 땅은 국가 것이지만 처음부터 개인이 거주하여 '개인집'으로 목인을 받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사고 파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집'을 거래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돈을 주고 받지 않고 개인끼리 교환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한다.

실제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그림 7-2>를 보면 방 2칸이 연결되어 있는데 난방 및 취사연료는 대부분 구공탄, 갈탄, 목재, 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 석유나 가스연료,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은 평양과 대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도 배급제에 의해 할당받는데, 구공탄 세대의 경우 월 60~70장,

6) 하모니카 아파트란 1950년대에 설립된 조립식 아파트로 각 층마다 후면으로 단일 복도가 설치되어 있고, 단일 복도를 따라 방, 부엌 각각 한 칸이 달려 있어 나온 이름이다. 원래는 화랑식 아파트라 부른다.

석탄세대의 경우 연 2~2.5톤을 공급받다고 한다. 전기와 수도물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단수가 보통이고 시간제로 사용하는데, 지방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아예 온수관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농가의 경우는 공동 수도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림 7-2〉 일반 노동자주택의 내부구조



주: 1) 화장실은 25세대당 재래식 변소 1개소씩 설치.

2) 기주 공간은 약 7평 정도됨($(9 \times 2.5) \div 3.3 = 6.8$ 평).

3) 이 그림은 김만철씨가 진출한 방 2칸, 부엌 1칸짜리 일반노동자 주택의 내부 구조이다.

자료: 서동익『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제2권, 1995년, p.260.

세간살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혹은 녹음기)·선풍기(혹은 직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 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나마도 생필품 및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구 사용이 최소화되어 있다.

5.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초 생필품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기초 생필품의 무상 및 엽가 배급은 북한 당국에서 볼 때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절대적 수단이었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초 생필품을 무상 또는 엽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를 받는 것이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국가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별적인 계층별 물자의 배급체계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리는 특권층의 전횡을 가져오고 일반 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요소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와 가중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은 위로부터 주민통제와 아래로부터 순응의 주요 기제였던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일부 마비시키기까지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집단주의적 소유원칙과 집단주의적 생산·소비 원칙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적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서도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 경제' (the second economy)가 부차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텃밭·부업 밭의 경작이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소규모 서비스 및 수리행위를 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서로 물물교환 형태로 바꿔 쓰는 것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1개 군 및 대도시마다 10일에 한 번씩 '농민시장'⁷⁾이라하여 협동농장에서 생

7) 농민시장은 1950년 북한당국이 '농민시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동농장이 쉬는 날인 1, 11, 21일에만 허용한 것으로 협동농장 농민들이 생산한 돼지고기, 참깨, 닭고기 등 농축산물을 자유판매가격에 의해 매매한다. 북한은 그동안

산한 잉여생산물의 거래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민장이 상설화되어 매일 열리며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는 7~8%의 수수료를 내면 '가내방'(가내작업반 가판대)이라고 하는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협동농장 분조농산물의 자유판매도 묵인한다는 것이다.

본래 장마당에서는 채소나 가내수공업품으로 만든 생필품만이 거래되도록 하고 쌀이나 곡물거래를 불법으로 하였던 것을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하다가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1999년에 다시 통제했지만 그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또 중국과 교역은 국가기관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접경지역 농민들이 물물교환 형태로 중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공식적인 배급체계의 마비로 인해 북한 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 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전 주민의 상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배급의 마비로 기초 생필품들을 물물교환이나 개별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따리장사를 나서는 사람들⁸⁾ 이외에 직장 다니는 틈틈이 장사를 나서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당간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행태 변화는 결국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

경제사정에 따라 농민시장의 규제와 허용을 되풀이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8) 전문적인 보따리장사꾼들은 주로 노동불능자, 퇴직자, 가정주부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이 중에는 뇌물을 주고 노동불능자로 판정 받은 자와 휴가·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약 70~80만명 선으로 인구의 3~4%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켜 전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80%가, 옥수수·쌀 등 식량은 60%가 이 곳에서 거래될 정도라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들의 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몇 십배에 이르고 있는데, 1997년도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 현상을 보여오다가 최근에서는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비교된 주요 물품의 농민시장 가격 비교표는 다음 <표 7-4>와 같다.

<표 7-4> 최근 농민시장에서의 주요 품목 가격

분 류	품 목	단 위	1998 가격	1999 가격	2000 가격
곡 물 류	쌀	kg	77	64	47
	강냉이알	kg	40	33	27
	밀 가루	kg	61	45	43
육 어 류	돼지고기	kg	181	160	130
	게 란	개	16	13	12
	말린 명태	마리	27	34	39
채 소 및 과 일 류	배 추	포기	9	20	8
	미 역	kg	31	31	67
	사 과	개	23	33	23
조 미 료	소 금	kg	36	32	19
	된 장	kg	38	31	50
	고추가루	kg	199	290	274
간 식 및 기 호 품	빵	개	19	15	12
	꿀	500g	198	288	279
	맥 주	병	78	68	53
기 타 생 필 품	페니실린	병	21	47	25
	세수비누	개	92	66	64
	셔츠	벌	400	472	614

자료: 통일부

쌀의 국정가격이 8전이고 달걀은 17전, 세숫비누는 17전이지만, <표 7-4>를 보면 시장가격은 그 몇 십 배이며 평균 80~100원 내외인 일반 노동자의 한달 임금으로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만으로는 도저히 살아 갈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통일부는 1998년 결과를 토대로 조사 북한의 4인 가족이 필요한 한달 최저생계비는 2,0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주민들이 공식부문의 경제생활보다 비공식부문의 경제생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장사 바람이 불어 외화벌이 장사꾼, 밀무역 장사꾼, 되거래 장사꾼 등과 같은 본격적인 장사꾼 이외에 각 지역이나 공장에서 남는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8·3장사꾼이나 집안의 소소한 물건을 내다 팔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는 장사꾼 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북한과 같이 물자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비화폐경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폐는 교환가치가 없고 재화가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 한동안 북한에서는 '강냉이는 국제 화폐'라고 할 정도로 강냉이가 물품화폐의 역할을 했다. 암시장규모의 이와 같은 확장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행위가 집단주의보다 사적 동기에 의해 영위되도록 하고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획경제를 대체하기 보다 배급기구의 마비에 따른 주민들의 지구력 수준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보기는 이른 것 같다. 물론 배급체계를 위협하는 암시장의 성장은 북한당국에 대해 경제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북한당국은 선진매체물을 통하여 '자본주의사상 침투반대투쟁'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식적이며 규범적인 주민들의 경제행위와 경제의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사상교육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 하겠다.

제4절

직장생활과 여가문화

1. 직장배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장에 소속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재산 및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장에 소속을 두지 않으면 생필품을 배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료보장을 받은 노인이나 전업주부, 기타 질병을 앓는 환자 등 당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학교·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15일 이상 쉬는 사람이 있으면 인민반장을 통해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분주소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분주소 기능을 하는 주재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개인이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스스로 판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 배치는 이미 계획차원에서 작성된 '노동자원 균형표'

및 공장·기업소별 '로력대장', '공정별 표준 로력조직원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55세 이하의 여자는 원칙적으로 조선노동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16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학교에 재학해야 하며 55세 이상의 여자와 60세 이상의 남자는 직장에서 물러나 연로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경우 진업주부에 해당하는 가두여성이 될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고 직장에 배치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수급계획에 따라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형태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밖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인의 학력과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직장을 배치하게 된다. 물론 직장배치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직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국가와 집단의 필요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직장배치를 할 때에는 간부사업의 대상자와 노동자를 구분한다. 간부사업의 대상자는 도·시·군 당 간부부에서 관장하며 노동자는 해당 지역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한다. 직장배치 대상자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고등중학교 졸업생과 대학 졸업생, 제대군인 등 3개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별로 직장을 배치받는 과정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대학이나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주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받은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각 개인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청년동맹이 동증과 군사이동증, 식량정지증명서⁹⁾ 등 다른 서류와 함께 졸업 3개월 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한다. 한편 노동과에서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졸업생들을 직장에 배치한다. 간혹 이 과정에서 탄광이나 염전, 철도 및 도로 건설장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특정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집단배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간부사업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당 간부부와 지방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배치를 담당하지만 소위 중앙에 속한 대학 졸업생은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 직접 관할한다. 이들의 졸업을 앞두고 내각 사무국 대학생배치과에서는 대학당 위원회에 지도원을 보내 졸업생 각 개인을 만나 그 사람의 출신성분과 사상, 학업 성적, 재학 중의 정치활동 참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을 배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개별면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개인의 출신성분과 학업성적, 사상, 재학 중의 정치활동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로 직장배치를 받는다. 졸업생 개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어느 직장에 배치되는지 해당 도에 가서 알게 된다고 한다. 한편 전문학교 졸업예정자는 각 도와 직할시의 노동처에서 직장배치를 받게 된다.

제대군인의 경우 사병과 군관의 직장배치가 다르다. 사병의 경우 출신지역 시·군

9) 북한주민들은 진학이나 직장배치 등으로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옮겨 갈 때에는 그 동안 소속해 있던 단위에서 받아 오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새로 소속하게 될 단위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건을 식량정지증명서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직장배치를 받기 전에 그동안 세대주의 직장을 통해 받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배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병으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소속부대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당 지도원이나 사무원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 공장이나 탄광 등지로 '집단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위 이상의 군관으로 제대하는 사람들은 간부사업의 대상으로서 출신지역 시·군 당 간부과에서 직장을 배치하는데 주로 출신지역의 공장이나 기업소의 지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직장을 배치 받고 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직장이동이 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옮겨가는 과정은 복잡하고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부르는 사무원 등을 통칭하여 근로자라 부르는데 이들이 모두 예외 없이 '로동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로동수첩이란 근로자 개인의 직장경력을 연대기 형식으로 기록한 법적 문건으로서 노동경력, 기술자격, 표창여부, 휴가관계 등을 적어 놓아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2. 급여체계와 연금제도

북한당국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북한당국은 주민이 받는 급여의 명칭을 '노임'이라고 했으나 노동을 상품으로 여기는 의미를 없애고 국가가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생활비'로 고쳐 부를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1992년도에 나온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생활비란 "로동자, 사무

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가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몫의 화폐적 표현”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노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며 간혹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은 직종과 소속 산업부문, 노동분류에 따라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로 구분된다.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는 각각 공통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며, 유해노동 종사자와 중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당·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가장 높은 편이다. 북한주민이 받는 급여액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7-5>와 같다.

<표 7-5> 북한의 계층별 임금수준

구 분	직 원	임 금
당 · 정 기관	- 당 · 정무원부장 ¹⁾ - 정무원부부장, 도 인민위원장 - 도 인민위원회부인장, 군인민위원회위원장	300~350원 250~300원 170~200원
공장/기업소	- 특급기업소 지배인 - 1~2급 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150~200원
노동자/사무원	- 광부, 제철, 제련공 등 중노동자 - 일반 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 일반 경노동자 - 사무원	90~100원 75~80원 70~80원 60~70원
교 원	- 대학교원 - 일반교원	200~250원 80원
군 장 교	- 장성급 - 영관급 - 위관급	250~400원 120~215원 84~110원
서비스종사자	-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시설 종사자 - 의사 -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20~60원 120~250원 200~500원

자료: 한국은행

주 1): 1996년 9월 헌법개정으로 정무원이 내각으로, 부장이 상성(省正)으로 바뀌었으나 이전 자료이므로 그대로 표기한다.

자료 :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286.

〈표 7-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은 대부분 매월 100원 내외의 임금을 받으며 적게 받으면 40~50원 정도에서 많으면 200원~240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당과 내각의 간부와 인민배우 등 일부에서는 매월 300원 이상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주민 중에서 자신의 임금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없다.

예를 들어 매월 105원 정도를 받는 전기공장 검사원의 경우 당비¹⁰⁾ 2%와 사회보장비 1%, 인체보험료, 저축,¹¹⁾ 영화관람료,¹²⁾ 공장문화회관 수리비용, 김일성-김정일 생일때 동상을 찾아가 바치는 꽃송이 값, 잔칫집이나 결혼식 부조 등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35~40원 정도였다고 한다. 급여가 비교적 많아서 150원이었던 사람은 80~90원을 실제로 받았고 65원이었던 사람은 67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런가 하면 매월 40원 정도를 받았던 비날론공장 부품관리원은 공제금액을 제하면 월급이 ‘미누스’¹³⁾ 로 내려가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직장에 내기도 했다고 한다.

10) 2000년 7월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한 결과, 이 사람의 경우 조선노동당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에서 당비를 공제하는 것이었다.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 소속한 단체의 맹원으로서 맹비를 납부하게 된다.

11) 원래 인체보험료와 저축 등은 근로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규정상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단위별로 일괄히 납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12) 공장문화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매번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한 액수를 영화관람료 명목으로 일괄 공제한다고 한다.

13) 미누스란 마이너스라는 뜻의 러시아어를 말한다. 북한주민들 중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월급이 미누스가 되어 집에서 돈을 가져다가 직장에 납부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가속화되자 1~2개월에서 5~6개월 정도, 심지어 1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1994년 4월에는 북한당국이 정무원 결정 제40호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등급을 일괄적으로 1등급씩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 제정한 국가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한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 종류는 폐질연금, 유가족연금, 연로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¹⁴⁾

연로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를 기준으로 연로보장을 신청하고 사회의 부양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본임금의 60-70%와 1일 300g의 식량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연로보장을 신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면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폐질연금은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데 질병·불구의 원인과 노동력 상실의 정도에 따라 기본임금의 60-80%와 1일 600g 정도의 식량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른바 공상(公傷)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쳤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폐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밖에 유가족연금은 일제치하에서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북한정권에 충성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영예군인연금은 군 복무기간 중에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을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여 무상치료 혜택과 유급휴가, 식량배급, 주택배정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역을 의미한다.

14) 이 제도는 1986년 11월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된다.『조선중앙년감』, 1987, p.200

3. 직장인의 하루 일과

북한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하루 8시간 노동 원칙을 사회주의노동법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 노동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중노동자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는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실태는 이와 다르다고 한다. <표 7-6>은 북한 노동자 및 주부인 여성노동자, 학생의 기본 일과표이다.

<표 7-6> 북한 주민의 기본 일과표

구 분	노 동 자 사 무 원	학 생	비 고
출근(등교)완료 독보회	06:50-07:00 07:00-07:30	08: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 정기 강연회(07:00-09:00) 있는 날(수·목) 생략
작업준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08:00-12: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집 식	12:00-13:00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오 침	13:00-14:00		
오후작업(수업)	14:00-18:00	14:00-16: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
작업총화	18:00-19:00	16:00-18:00	인민학교 학생 14:00-16:00
학습회 및 강령	19:00-20:00		

<표 7-6>을 보면 남성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생활한다. 13시간 중 2시간은 노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가, 작업총화와 정치학습 등을 하는 시간이다. 총화란 "사업이나 생활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정치사상적으로, 행정적으로 분석하고 결속지어 앞으로의 사

업과 생활에 도움이 될 경험과 교훈을 찾는 행사”를 말한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 등 모든 직장에서는 하루의 기본일과가 끝나면 그 날의 작업성과를 평가 및 반성하는 총화시간을 갖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총화시간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1~2시간씩 진행되는 학습회에 참석해야 한다. 직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로는 소속단체의 총회 및 위원회, 수시로 소집되는 사상검토회, 작업반 및 소속회 등이 있다.

그런데 매일 작업총화와 학습시간이 보통 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10시 이후가 대부분이다. 결국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8시간을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곽밥(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평균 10시간인데, 이나마도 작업량의 초과달성을 위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작업량은 일별·월별·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한다는 점은 사회주의 노동법 제20조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실제로 시간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일 지시된 계획량을 다하지 못하면 기본임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총화 시간에 추궁을 당하고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 특별선물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반면 초과달성을 하면 기본임금에 가산된 추가임금을 받는다.

한편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보다 출퇴근시간이 빠르고, 작업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게는 오전 2번, 오후에 2번 각각 30분씩, 1년 이상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1번 30분씩을 배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출근사항은 매일 인민보안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종업원 100명이면 결근 0명, 노력동원 0명, 환자 0명, 무단결근 0명이라는 형태로 보고하고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하는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또한 무단 결근과 지각을

하면 식량배급을 받을 때 해당 분량을 공제하고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4. 휴가와 휴일제도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노동법 제65조에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정기휴가 이외에 생산실적이 높은 근로자에게 포상제도로 활용하는 휴양권과 정양권 명목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률상 명시해 놓은 규정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정치조직이 생산량 초과달성 등의 목표를 정하고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면 근로자들이 휴가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여성에게는 60일간의 산전휴가, 90일간의 산후휴가가 주어지고 이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평균노동력일수를 인정한다. 또한 보충휴가 이외에도 ‘사결’이라 하여 상사의 허락을 받고 법정휴가 외의 무급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표 7-7〉 북한의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기휴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충휴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 외 7~12일	“
산전·산후 휴가	임산부	150일	“
입시휴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기간	무급휴가

자료: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138

물론 휴가 외에도 각 직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휴일은 일률적으로 일요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종과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정해서 지키게 한다. 예를 들어 평양의 노동자는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지만 함경북도는 수요일, 평양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휴일제도를 운영한다는 뜻이다.¹⁵⁾ 또한 사무원과 간부는 일요일에 휴식을 하지만 일반노동자들은 금요일에 휴식을 한다는 증언도 있다.

한편 농민들은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협동농장의 노동을 쉬고 휴일을 지키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농민시장이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어업노동자의 경우에는 매년 300일간 출어하고 나머지 기간을 휴일로 쉬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노동실태는 많이 달라졌다.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한달 평균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각 공장 및 기업소내부의 가용노동력 및 기계설비도 다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각 공장과 기업소는 노동자들을 놀리지 않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에 할당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거나 강제휴가를 권장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을 휴일로 정한다는 것이다.

5. 여가생활과 여가문화

북한주민들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 다니면서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직장생활과 아울러 농근맹이나 직업총동맹 등 근로단체 활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가 어렵다. 북한주민 대다수는 휴

15)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0북한개요』 1999, p.437

식일이나 잠시간에는 집안 일을 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등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북한주민도 여건이 된다면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한다.

북한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자주 이용하는 여가생활 방식은 들놀이나 영화 관람, 음악감상, 음악에 맞추어 춤추기 등이다. 특히 인기를 누리는 영화작품이 상영될 때에는 암표를 구해서 여러 번 관람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을 골라서 즐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공장이나 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단위로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 놓는데 그 날 단체로 감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영화를 관람하고 난 후에 영화의 주인공처럼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지는 취지의 영화실효투쟁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화관람도 완벽한 의미의 여가생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에서는 월 1~2회 의무적으로 영화를 관람시킨다.

공휴일에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도 북한주민들의 빼놓을 수 없는 여가생활의 하나이다. 북한의 계도영화 「일요일에 있는 일」을 보면 조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는 삼촌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놀이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주민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식량난이 시작되기 전에는 직장단위로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천렵이나 등산놀이를 조직하거나 친구와 이웃 사이에 장기와 일종의 카드놀이인 주패놀이를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딱지치기와 팽이 돌리기, 연놀이, 윷놀이도 즐겼으며 장구와 손풍금을 동원하여 음악과 함께 춤추기를 즐기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놀이를 조직하는 경우가 드물고 간혹 간부들 몇 사람이 차량

을 동원하여 조용히 멀리 나가서 놀다 오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눈을 의식하여 공개적인 행사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1980년대 말 이후 바둑을 비롯한 야구, 볼링, 프로권투, 소프트볼 등 자본주의적 스포츠를 도입하고,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골프장과 '보링그관', 디스코텍 등을 개설하면서 취미 및 오락시설의 폭을 넓혀 왔다. 그밖에 최근에 들어 낚시, 등산, 사냥, 바둑 등도 북한주민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 직업의식 및 노동의식의 변화

북한은 노동이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며, 모든 주민의 지위는 노동에 대한 성실성에 의해 규정되고, "노동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영웅적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노동에 둘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혁명적 열의'와 '애국심·충성심'으로 '주인답게', '자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동성향을 내면화하여 노동에 있어서 자발성·창발성을 촉구한다. 정치도덕적 동기를 자극하여 노동의식을 높이는 정책은 북한이 1960년대까지 양적·외연적 경제성장을 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을 영위하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집단주의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적 노동의식도 점차 이완되고 있다. 초창기 혁명적 열기가 사라지고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이 굳어지면서 정치 도덕적 유인에 의한 노동의

식도 변질된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개인의 미래와 사회적 성취와 관련되지 않은 노동에 대해 오랫동안 의욕을 갖지 못한다. 과거 구소련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날립 노동'을 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주어진 '노르마'(개인노동할당량)에 대항하는 작업장내 사보타지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¹⁶⁾

이와 같은 현상은 농민들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협동농장 일보다 개인의 텃밭이나 소 토지에서 일할 때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텃밭이나 소 토지의 생산성이 협동농장 토지의 3배나 되어 최근 북한 당국이 할 수 없이 분조계약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을 보면 이런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상금이나 장려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남한에서처럼 일하면 북한에서는 노력영웅이 되고도 남는다"라고 증언하는 북한 이탈주민도 있다.¹⁷⁾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총량적으로 볼 때 북한노동자의 평균생산지수는 1989년을 100으로 놓을 경우 1998년도에 52.5로, 약 47.5% 감소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¹⁸⁾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자 공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고, 임금만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부업이나 개인장사에 몰두하기 위해 과거에 '혁명적 열정'을 내세워 자진 반납했

16) 북한 원산농업대학 강사관 자낸 이우홍 씨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무단결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작업장에 나와도 느릿느릿하고 얼빠진 사람들 같은 작업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동호, 「북한의 노동정책과 실태」,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년, p. 158.

17) 통일교육원,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1996년 5월, p. 61.

18) 통일부, 『2000 북한개요』, p. 445.

던 휴가를 적극 이용하려 한다고 한다. 기업소·공장들도 자체 생산계획보다는 각기 할당된 '외화벌이 사업'에 더 몰두하여 한달 노임보다 더 많은 수입획득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청년동맹』 1996년 8월호를 보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새로 배 치받은 청년들이 작업반에 나오지 않고 노동을 태만히 하자 직장·작업반에 간부들을 파견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나왔다.

집단주의적 노동의식의 이완은 직업에 대한 관념도 바꾸어 놓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당·정 요원이고, 그 다음이 예술인, 기술자, 교육자, 군인, 체육인, 상업일꾼, 농수산업 종사자 등이었다. 노동계급을 영도적인 계급으로 찬양하는 사회기조와 달리, 육체노동을 경멸하고 정신노동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이었으며 그것도 권력조직과 관련된 직종이 최고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에는 재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직업선호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엘리트 계층의 경우 당·정업무 직종보다 외교관 및 대외사업 요원을, 일반주민의 경우 식량자급이 용이한 농업, 개인수입이 높은 상업일꾼, 부수입이 좋은 상점점원, 운전기사, 사진기사, 군대후방일꾼, 식량배급소 기표원 등 서비스직과 어로공(어부)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인기가 떨어진 직업으로 대학교수와 학교의 교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예전에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최근에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부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는 현재 '사회주의 노력영웅'이 되는 것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동정책 및 노동

조직체계를 위협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직 국가의 노력동원에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집단주의 노동의식이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사실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2의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에 과거 소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한 노동이동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 주민들이 이제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보다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 장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영환, 『평양 25시』, 고려원, 1993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2000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1995
- 이영화, 『평양 비밀집회의 밤』, 동아출판사, 1994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년감』, 1987
-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도출판, 2000
- 통일교육원, 『다가서는 남북, 준비하는 통일』, 2000
- , 『북한이해』, 2000
- ,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1996
-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북한경제의 오늘과 내일』, 1996
- 국정원, <http://www.nis.go.kr>
-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cedu.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 남대현, 『청춘송가』,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북한 이해

인쇄일 2001년 2월 20일

발행일 2001년 2월 24일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7162 / FAX.901-7088

인쇄처 오성사 (전화 2266-0795)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

